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공통요구자료(I)

2006. 10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	1
2. 2006년도 예산집행사항	50
3. 2006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52
4.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422
5. 200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424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3
1. 그간의 주요정책 추진실적	3
2.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10
3. 현 좌표 및 향후 정책방향	15
II.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7
1. 금융감독위원회 비전, 임무, 추구하는 가치	17
2.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18
3.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19
III.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45

I. 그간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그간의 주요정책 추진실적

- ◇ IMF 경제위기 발생 이후 감독당국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제도 선진화의 기반 마련에 주력
- ◇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선진 감독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자본시장의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

경제위기 극복 시기의 금융감독('98~'02)

가.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금융중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부실금융회사의 조속한 정리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자산부채이전 등으로 정리
 - 회생 가능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 도모

-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원칙*하에 구조조정 추진

- * ① 부실금융회사 처리는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 등에 입각하여 처리
- ② 공적자금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
- ③ 시장규율 정립을 위해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 확립

□ 채권금융회사 주도 하에 구조조정 5대 기본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추진

-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계열사 상호지급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의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부실기업 정리 및 기업구조개선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Workout)을 추진
-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을 법제화한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을 제정·시행

나.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 금융감독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설립하고 권역별로 분산된 감독기능을 일원화

□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실태평가(CAMELS)를 확대 시행
-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BIS제도 도입 등 건전성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반영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참여정부하에서의 금융감독

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기반 구축

- 신용카드사의 외형경쟁에 따라 촉발된 유동성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시장 불안요인 해소
 - 대주주 중심의 자구노력 유도, 건전성감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카드사 정상화를 유도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
 - LG카드 등 개별 카드사 부실문제는 당사자간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
-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 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
 - 개인 신용정보회사(CB)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평가에 기초한 금융거래를 유도
-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성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 지원대책을 균형있게 추진
 - 대출의 주요 장애요인이었던 신용평가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 CB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선
- 기업투자 부진,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급증한 가계대출의 안정화 도모
 - 부동산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억제

<참고 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 '05년 들어 일부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두차례(6.30, 8.30)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APT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회로 제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APT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 등

□ 이에 따라 4/4분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

* 주택담보대출 증감(조원) : ('05.1/4) 2.1 → (2/4) 7.6 → (3/4) 6.3 → (4/4) 4.1

○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연체율(1.2%), 60%를 하회하는 담보인정비율(53.4%) 등을 감안할 때 관리가능한 수준

(단위 : 조원, %, 전년동기대비)

	'01말	'02말	'03말	'04말	'05년			
					3말	6말	9말	12말
주택담보대출	85.4	131.3	152.4	169.1	172.0	179.6	185.9	190.0
(증가율)	(55.8%)	(53.7%)	(16.1%)	(11.0%)	(10.5%)	(11.2%)	(12.7%)	(11.8%)
(연체율)	-	-	(1.5%)	(1.5%)	(1.5%)	(1.2%)	(1.2%)	N.A

□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대출 증감(조원) : ('05.1/4) 2.7 → (2/4) 3.6 → (3/4) 1.8 → (4/4) 4.5

➡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부실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계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선순환을 유도

나. 선진 금융감독제도의 정착

- ☐ 금융회사의 체계적 리스크관리 및 손실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예상손실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신BIS 협약 기준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유도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억제
- ☐ 이와 함께 감독당국의 사전예방적 감독 역량을 강화하여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제도(RM)를 도입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리스크중심 감독체계를 제도화
 - 개별 금융회사 뿐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가동
- ☐ 건전성 감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 ☐ 아울러 금융구조조정 현안의 적기 처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가능성에 대해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
 - 조흥은행 매각(신한지주 편입), 한투·대투증권 매각(한국금융지주, 하나지주 편입) 등 은행 및 전환증권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 상호저축은행 및 신탁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제고 유도

다. 자본시장의 제도약 기반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 3법의 입법을 완료**

* 최고경영자 등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 수행 금지 및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 의무화 등

- 실질적인 기업정보가 적시에 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공시제도 도입, 5% 보고제도 개선 등 공시제도를 강화**
- 우량 기업의 상장 및 거래활성화를 위해 **진입·퇴출 기준을 지속 개선**

□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

- **증권집단소송제도 및 증선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증시 불공정거래 연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시장규율을 확립**
-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내·외국 자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조치**

□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체질이 강화되어**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 개인투자자 위주의 직접투자 문화가 **적립식 펀드 등 기관투자자 중심의 간접투자 문화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참고 2> 적립식 펀드투자 활성화

- '05년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데에는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한 적립식 펀드투자의 꾸준한 증가가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는 그동안 회계투명성 제고, 공시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 자산운용업을 동북아금융허브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한 자산운용사들의 다양한 상품개발 노력 등에 기인
- 간접투자의 대중화는 저금리로 시작된 가계의 자산운용방식의 변화를 촉진시켜 성숙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 마련
 - 은행예금 위주에서 투자자산 보유로,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투자패턴을 변화시키고
 - 펀드자금이 주식시장에 장기·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

(단위 : 10억원)

구 분	'03말	'04말	'05.3말	'05.6말	'05.9말	'05.10말	'05.12말
종합주가지수	810.71	895.92	965.68	1,008.16	1,221.01	1,158.11	1,379.37
펀드 수탁고	145,037	186,989	193,142	198,738	196,876	198,709	204,333
(적립식 펀드)	-	(4,933)	(6,552)	(8,083)	(10,240)	(11,610)	(13,835)

- 다만, 판매회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건전한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아울러, 주가하락 등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펀드 운용실태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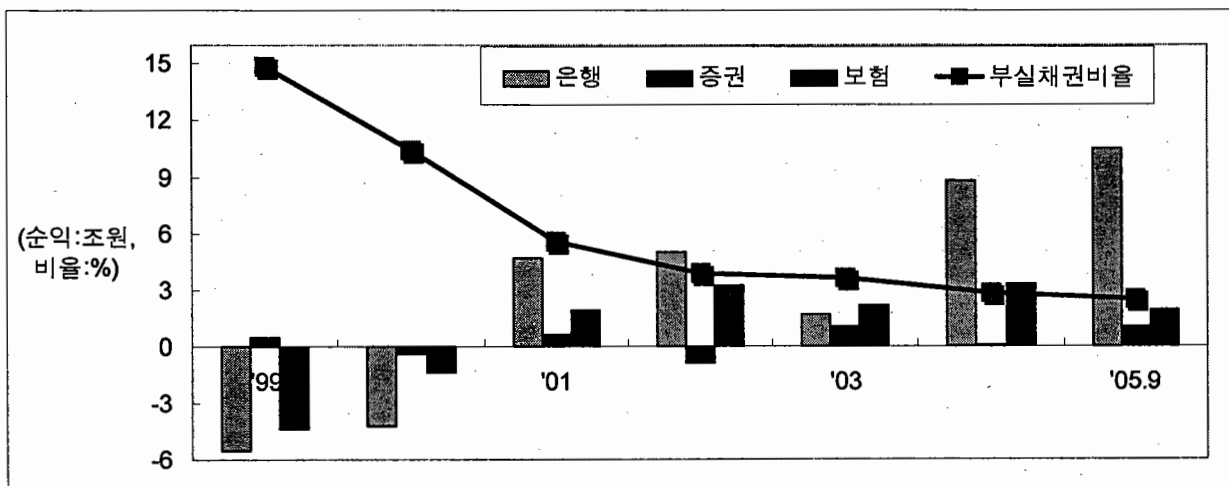
- ◇ IMF 경제위기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선진 제도의 효과적 도입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
- ◇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시장규율을 확립
 -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건전성 감독제도를 구축하여 선진적인 리스크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아울러,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시장 질서 확립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간접투자문화 정착 등으로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은 큰 위기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여 동반성장의 기초를 확립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
- ➡ 실물과 금융의 총합인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금융시스템이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 ◇ 다만, 선진제도가 아직까지 관행과 문화로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며, 생산적 자금중개기능의 활성화가 미흡한 측면

가. 성과

□ 잠재 부실요인의 해소와 리스크관리능력의 제고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개선

○ 부실채권비율은 2%대의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순익도 흑자기조로 전환

* 부실채권비율(%) : ('99)14.9→('00)10.4→('02)3.9→('04)2.8→('05.9)2.5
(은행권, %) : ('99)12.9→('00)8.0→('02)2.3→('04)1.9→('05.9)1.5



□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선진 금융시스템의 정착 진전

○ 국제 수준의 감독제도를 정비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시스템 수준이 향상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조성

○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내외국인 동등대우,
공정경쟁 여건 조성, 엄정한 법집행 등 세가지 원칙을 견지

□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키고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 LG카드 정상화 등으로 과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서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는 전기 마련
- 중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및 엄중 제재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통합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 출범으로 시장 경쟁에 의한 금융산업개편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 정착

□ 투명한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

* 국가신용등급(S&P): ('96) AA- → ('97) B+ → ('99) BBB → ('02) A- → ('05) A

【금융구조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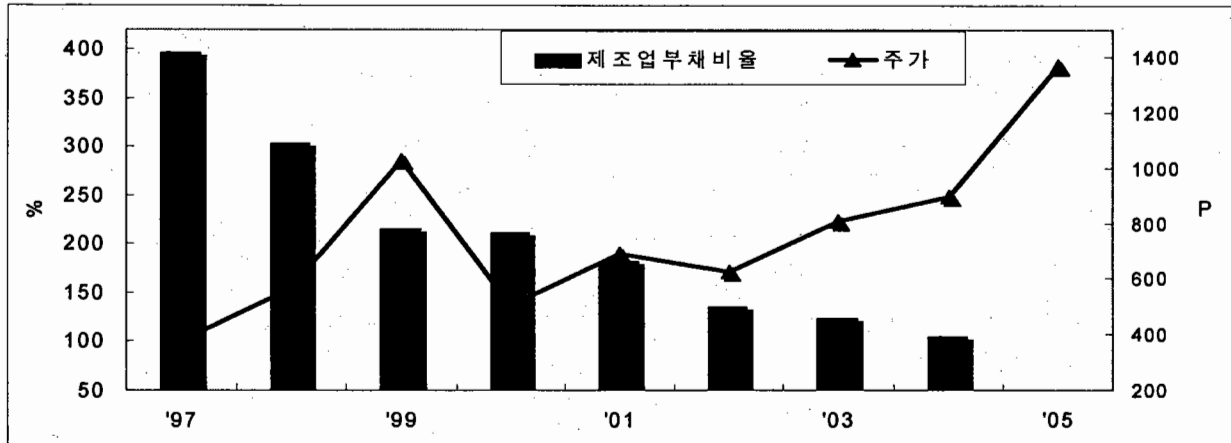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등	현재 기관수
		인기취소	합병	파산 영압·전등		
은 행	33	5	10	-	1	19
중 권	36	5	7	3	18	39
보 험	50	10	6	4	20	50
기 타*	1,984	147	157	510	60	1,230
합 계	2,103	167	180	517	99	1,338

* 종금, 투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리스 등

- 부실 회사의 퇴출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기업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대마불사”의 잘못된 믿음을 불식

* '97년 기준 30대 기업집단(자산 기준) 중 '05년 4.1일 현재 30대 잔존 기업집단 : 15

- 금융시장의 안정과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한 실물부문의 성장 동력 회복 등에 힘입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대출 연착륙 및 안정적 경기회복 기반 구축

-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배드뱅크 설립 등 채무재조정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백만명 이하로 대폭 감소

* 금융채무불이행자(만명): ('03말)372→('04말)362→('05.6말)333→('05.12말)297

나. 아쉬운 점

- 선진적인 제도 및 관행이 금융회사, 감독당국, 금융이용자 모두의 행태에 완전히 체질화·내재화 되지 못한 측면
- 그간 위험관리능력의 제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문화 정착 등 선진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진전된 반면
 - 지나친 안전 위주의 자산운용, 단기 수익성 추구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자금중개기능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위축

<참고 3>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 '05년말 주가는 1,379.37p를 기록(전년말비 54.0% 증가)하며 '56년 거래소 개설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주가지수(코스피 지수 기준) 변동 추이

(단위 : p)

'83.1.4*	'85말	'97말	'04말	'05말	전년말비(%)
122.52	163.37	376.31	895.92	1,379.37	54.0

* 코스피지수 최초 도입일(지수 산출의 기준시점은 '80.1.4일)

- 이는 기업들의 체질 강화와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등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과 수요 우위의 수급상황에 기인

- Korea-Discount 해소에 따른 국내증시 재평가, 세계경제의 회복 및 북핵리스크 완화 등 우호적 환경도 일조

-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우리 증시가 선진형태의 투자수단 및 자금조달 통로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하며

- 나아가 금융부문과 실물경제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시사

- '06년 국내증시는 단기적인 조정은 거칠 것이나, 수출호조 ·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 및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과 격차 존재
- ◇ 향후 금융감독 정책방향은 금융시스템의 확대 균형발전과 건전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중점

가. 현재의 좌표

- 지속적인 구조조정, 위험관리 선진화,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
 - 다만, 금융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수익창출 및 위험관리 능력, 자산규모 등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 세계 100대 은행(총자산기준) 중 국내은행 : 3개(국민, 신한지주, 농협)
 - IT, BT 등 성장동력에 대한 자금공급, 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등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시급
-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은 많은 변화 요인을 내포
 -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외국계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하나금융지주 출범 등 금융그룹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이해상충 등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
 - 파생상품시장 팽창,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거래 증가 등 신시장 및 신기술 발전 가속화

나. 향후 정책방향

□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과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 생산적 자금중개기능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 성장동력에의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촉진
- 아울러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과제 1)** 금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형화, 고령화 시대 도래 등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

➡ **(정책과제 2)** 선진 제도가 관행으로 뿌리내리고 참여자의 신뢰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제도를 지속 정비

➡ **(정책과제 3)** 혁신산업 등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정책과제 4)** 금융서비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되기 쉬운 서민층,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강화방안도 추진

➡ **(정책과제 5)**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서비스를 강화

Ⅱ. 20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금융감독위원회 비전, 임무, 추구하는 가치

비 전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임 무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 금융이용자 보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추구하는 가치

전 문 성

(Professionalism)

- 고도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금융감독 구현

책 임 성

(Accountability)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독결과에 대하여 책임

고 객 존 중

(Respect)

- 모든 금융거래자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부여 및 권익 보호

2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정책목표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②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③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역할 강화 ④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 정착 유도
정책목표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②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③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④ 금융시장 국제화 진전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정책목표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자본시장 역할 제고 ②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정비 ③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 ④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정책목표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 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②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 ③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
정책목표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② 금융이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③ 선진적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3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정책목표 I :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정책여건

- 은행 순익이 10.5조원('05.1~9월)에 이르는 등 금융회사 순익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지속 가능성은 취약한 측면
 - 수익창출능력 향상 보다는 충당금 등 비용감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수익구조 다변화도 미흡
- 은행 중심의 대형화·겸업화가 진전되면서 은행·비은행간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필요성 제기
 - 증권·보험회사 발전기반 마련, 동북아 금융허브 선도사업으로 자산운용업 육성 등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필요
- 복합금융그룹화는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실위험 전이, 이익 상충, 시스템 리스크 증가 등 고유의 리스크도 내포
 - 현행 감독제도는 이러한 복합금융그룹화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데 미흡한 측면
- 저출산·고령화 시대 금융이용자가 요구하는 안정적 장기투자 수단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시급
- RM 등 리스크중심 감독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통해 검사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

이행과제

1-①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 은행산업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신용파생상품 참여, 자본시장 연계 대출상품개발 등 신규 수익원 발굴을 통해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 개선
-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통해 비교우위 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화 유도
- 상품개발, 정보기술 및 인력투자 등 장기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하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 조성

-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의 지원 방안 강구
- 증권계좌를 통해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회사 결제시스템의 효율화 추진
-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 업무별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혁신적 상품개발 촉진을 위해 법규해석 등 업무 가이드 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증권회사 내부 상품심사기능 강화 유도

□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발전 지원

-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 파생금융거래 등 고위험 자산 및 외화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정비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 기존사의 新판매채널 전문 자회사 설립 및 모집조직의 상품별 전문화 유도 등을 통하여 新판매채널을 활성화
- 가계종합 위험관리(Family Account)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복합보험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특정자산에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설립요건 완화, 운용 업무 외부위탁 확대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제고
- 펀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간접투자 상품의 경쟁력과 접근성 증진
- 펀드거래비용 공시확대, 수탁회사의 펀드 감시기능 제고 등을 통해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 이해와 신뢰 제고
- 자산운용사의 최저 순자산 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산 운용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금융회사의 PEF에 대한 출자 또는 PEF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PEF 활성화 유도

1-②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외국계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비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
-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연결감독 및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추진

□ 금융 겸업화 진전에 수반되는 감독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

- 유사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권역별 규제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행위 규제수준의 적정화 추진
- 겸영확대에 따른 고객 또는 사업부문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정보차단벽(Chinese-wall) 구축 강화
-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 근절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통합법 제정을 통해 증권·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종간 업무영역 및 상품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보험사에 대한 모기지보험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 및 자회사 영위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1-③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역할 강화

□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급증에 대비하여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
- 장기 간병보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은퇴 준비충을 겨냥한 자산관리형상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
- 자녀 출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금 및 보험상품 등 출산 장려형 금융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보유주택을 바탕으로 노후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 추진

- 역모기지상품의 시장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감독 측면의 지원방안 강구

□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적립금 운용, 정보제공 등에 적용할 업무처리 모범기준을 마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감독규정 해설서 발간 등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안내사이트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

1-④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 정착 유도

□ 금융회사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전예방적 리스크 중심의 검사 강화

- 개별거래에 대한 사후규제적 검사 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별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
- 리스크관리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정비하고 '금융감독정보 통합(portal)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상시 접촉창구 유지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RM 상시감시 수단 및 방법 개발
- 기관별 전담 외에 경영실태평가 항목별, 영업활동별 담당제를 병행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보완
- RM의 검사방법 및 자세 등에 대한 내외부 평가 결과를 제도운영에 반영하여 상시감시에 대한 신뢰 확보

□ 검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검사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수검부담도 경감

- 상시감시 결과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해 서면 및 부문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검부담이 큰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
- 사전 요구자료의 중복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사부문·비슷한 시기의 현장검사는 사전에 통합 조정

정책목표 II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정책여건

- ☐ IMF 경제위기 이후 감독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건전성 감독제도를 도입
 - 이러한 제도 중 아직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우리의 현실과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 금리변동 등 거시경제여건 변화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거래 확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할 필요
- ☐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
 -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주, 각종 위반행위가 결합된 복합형 증권범죄의 증가 및 범죄수법의 고도화 경향
 - 아울러, 금융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적 복잡성이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건전 거래 발생 가능성도 증가
- ☐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에 따른 불법거래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 제기

2-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 ☐ 국제기준 변화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개선
 - 신BIS협약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적격 외부신용평가 기관(ECAI) 선정방안 등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은행의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험회사의 리스크기준자기자본(RBC) 도입 준비의 일환으로 세부산출기준을 마련
- ☐ 기존 건전성 감독제도를 우리의 현실과 시장여건 변화 등에 맞게 현실화·합리화
 - 실질 현금흐름과 유동성 위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출방식을 개선
 - 한도관리대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발전방안 모색
- ☐ 회사의 규모, 리스크 관리능력 등에 따른 감독수준 차별화
 - 은행의 규모 및 경영관리능력 등에 따라 경영실태계량평가 등급기준 및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
 - 보험회사의 분야별 리스크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회사별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 추진

2-②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 거시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다양한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모형을 개발하여 금리상승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 분석을 실시

* 통계적 모형 등을 사용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

- 조기경보의 속보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기경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검증 추진

□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감독기준 정비 추진

- 신용파생상품 등 신종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처리기준도 정비
-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제도 도입, 공시제도 강화 등 건전성 감독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파생상품거래 모범규준을 제정

□ IT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행에 대비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인허가 기준, 검사체크리스트 개발 등 전자금융관련 감독 기준을 마련
- 전자금융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전담기구(가칭 금융보안연구소) 설립 및 해킹방지시스템 개선 등을 유도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정비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및 감독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등에 엄중한 책임 부과
- 영업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실적 위주의 경영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사례 방지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 개선

- 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보완 및 집행간부의 책임성 제고 등 임원관련 제도를 정비
-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주주의 위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위한 법개정 지연 등에 대비하여 사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
- 주채무계열제도 운영을 통한 대기업집단 재무구조 개선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 강구
- 채권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매각원칙을 견지하되, 매각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③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증시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심으로 조사체제 전환
- 초단기 시세조종, 현·선물연계 파생상품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기법 개발

□ 불공정거래 제재조치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률심사 강화, 예정 조치 통보절차 정비 등을 통한 제재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 시장참여자의 권리구제의식 강화에 대응하여 의견제출 절차 개선, 직권제심제도 도입 등 권리구제절차 개선

□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제3자명의 CD발행, 신종 구속성예금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활성화 및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노력을 경주
- 신종 금융상품 판매시 금리적용 및 각종 수수료 편법 징수 사례에 대한 점검 강화

2-④**금융시장 국제화 진전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 ☐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대응**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지원 및 국내유치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고충처리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 중국 등 국내기업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가의 **시장 및 진출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강구
- ☐ **외환·자본거래 자유화 확대에 따른 불법·편법 외환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이상징후 거래에 대한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
 -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역외펀드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
 -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 및 위규사항 엄중 제재
- ☐ **공동검사 수행 등 외국 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외국감독당국과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MOU 가입 등 추진
 - 국경간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한 **역외발생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정책목표 Ⅲ :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정책여건

□ 그동안 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자본시장의 규모와 기업지배구조 등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발전하였으나

-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하여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중* 및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자본 시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은 수준

* 기업자금조달중 직접금융 비중 : 한국 41%('05.상), 미국 64%('03년), 일본 45%('04년)

** GDP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05말) 한국 96%, 미국 146%, 영국 138%, 일본 99%

⇒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장기적인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

□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반적인 시장투명성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 여전히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강화 필요
- 투자자에 대한 정보비대칭 완화 등 증시의 건전발전을 위한 공시제도의 지속 개선 필요
- 특히, 전세계적으로 자국내 회계기준을 국제기준(IAS)으로 통일하는 추세 등에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

3-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자본시장 역할제고

□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을 이용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적극 유도
- IT, BT 등 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기술력 평가 및 미래수익가치 산정 방안 마련
- 신뢰도 높은 중견·대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전용 간이 신고서 양식 마련 등 발행제도 개선
-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구조의 ABS발행을 지원

* 자산보유자의 범위 : 신용등급 BBB이상 → BB까지 확대

□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채권거래정보의 실시간 공시체계 강화*, 분산되어 있는 장외호가의 집중 등 채권장외시장의 투명성 제고

* '06.1월부터 공표중인 채권시장 관리지표의 조기정착 노력 포함

- 채권딜러의 소액투자자에 대한 시장조성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딜링기능 수행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대상 확대(CD, CP등)

□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투자자 거래편의를 위해, 현재 주식관련품목과 일반상품 관련품목간 상이한 증거금제도 및 매매·결제 시스템의 단일화 추진
- 투자자 신용도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토록 업계 모범 기준을 마련하여 선물시장의 건전투자 유도
- 선물시장의 양적·질적성장을 위해 상품성 있는 신상품 도입 및 유동성공급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

3-②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정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업무영역 조정, 취급상품 다양화 등 근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 정비방안을 마련

* 법안협의, 인허가 기준, 재무건전성감독, 영업행위준칙등 정비(T/F운영)

- 신탁업, 새로운 파생상품 등 증권사의 업무 다양화에 따라 리스크 규모 등을 감안한 사전예방적 감독제도 수립

* 증권회사의 리스크중심 감독체계(RBS)는 '06년중에 리스크 규모, 관리 수준 평가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신용평가정보의 공시확대, 내부통제기능 강화, 수요자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평가 등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강화
- 신BIS협약 도입에 대비하여 신용평가대상을 조정하되,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를 도입하여 건전성 감독 강화

□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 시스템을 정비

- 청산·결제기능의 효율성 제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 등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의 효율성 제고
- 증권회사 및 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매매거래의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

3-③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

□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상장기업의 공시업무 불편해소를 위해 주요 경영사항 신고 절차, 공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선진화
-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도입하여 기업공시 투명성 및 재무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06년중 개발 및 시범운영, '07년부터 전체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기업 공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홈페이지 개설

□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 대응능력 강화

- '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능력 강화 유도
 - * '05년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81사) 위주로 지원책 강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 내부공시 시스템 구축, 공시업무 전문 인력 확보, 관련조직 정비 등 유도
- 중소·벤처기업의 CEO, CFO 및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세부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강화

□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증권유관기관의 공시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연수과정을 개발·지원
-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관련 질문 및 상담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시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기업공시정보 및 공시교육관련 사항 등에 대한 투자자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3-④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IAS)의 전면 수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추진
 - *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06년 상반기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

-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쟁점사항은 적용의견서 등으로 명확화

□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 업무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감리절차·방법 및 제재방안 마련
- 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권 및 조치결과 공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유예 취지에 맞게 기업 스스로 과거분식을 적극 수정토록 교육·홍보 강화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확대 실시하여 회계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기재 사항 누락·오류 등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제도

□ 선진화된 감리방식 및 회계사 시험제도 조기정착 도모

- 감리방식 개선에 따라 심사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혐의 기업 인지기법을 개발하는 등 업무매뉴얼 보완
- 시험응시 자격, 부분합격제 등 새로운 공인회계사시험의 원활한 정착과 수험생 편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정책목표 IV :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 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여건

- 경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중소기업간, 고소득층·서민층간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제기
-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하는 등 자금흐름이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의 구조적 문제는 상존
 - 재무정보의 부족에 따른 적절한 신용평가의 애로, 담보 대출 위주의 대출관행 등이 걸림돌로 작용
- 금융회사의 지나친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
 - 특히, 중소기업, 소외계층 등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 서민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공급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등 건전경영기반을 마련할 필요
 - 저축은행은 최근 건전성이 제고되는 추세이나, 아직 잠재부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영업기반도 취약
 - 신탁중앙회도 누적결손금 과다로 인하여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4-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 기술력 및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유도하여 담보대출 관행의 개선 도모

- 목표설정 등을 통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기업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부진 은행에 대한 점검 강화
- 자발적인 외부감사 수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시
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 국민연금 등 공공정보의 집중·공유 확대를 통해 신용
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기관 보유정보 집중을 확대
함으로써 중소기업 전문신용정보회사(CB)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고,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활성화 방안 강구
- 객관적 기업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한
사업성평가 등 비계량정보 중심의 관계형 대출*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과의 장기거래관계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기초로
취급되는 대출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은행 영업점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등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4-②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

□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확충을 유도

-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층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촉진
-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화자동응답(ARS) 시스템 도입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 등도 추진

□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및 애로사항 상담 등 생계형 금융맞춤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유도
- 고배당 미끼 불법 유사수신, 고리사채, 카드깡 등 서민 금융 교란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 금융회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서민층 지원 등 공익활동실적의 자율공시를 통해 은행의 공익활동이 평판 및 장기수익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유도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을 통해 휴면 예금 및 보험금의 적극적 반환 등을 추진
- ‘은행 윤리경영 모범기준’ 마련, 은행내 사회적 책임 전담조직 설치 등 금융회사 자체의 노력을 유도

4-③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

□ 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여력을 제고

-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신탁의 공동유대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영업기반 확충
-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여 조기 경영 개선을 도모

- 경영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경영진 면담,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본 확충 등 자율적 경영개선을 유도
- 적기시정절차를 개선하여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 저축은행은 조기 정리
- 타 저축은행 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활성화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단위신탁 구조조정 효율화 추진

- 중앙회 및 단위신탁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신탁시스템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 계약이전 제도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

정책목표 V :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정책여건

□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판매증가로 금융이용자가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할 위험성 증가

○ 판매채널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통합금융감독기구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금융 민원 발생건수는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민원처리능력을 상회

* 민원 발생건수 : ('03) 55,725 → ('04) 64,476 → ('05) 59,510

○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효율적 처리뿐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열린 자세가 요구됨

□ 금융이용자의 권리의식은 확대된 반면 합리적 선택능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

○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 기회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

○ 금융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시장 규율에 의한 자정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활성화 필요

이행과제

5-①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은행거래계약 조건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 확대
- 민원제기 소지가 큰 보험분야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 수준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판매시 설명의무사항을 확대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판매인력 등록제도를 도입
-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新판매채널별 특성에 맞도록 광고 및 모집행위 등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모범규준을 마련
- 건강보험 등 제3보험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다발성 민원 제기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 정비
-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No-Fault)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고객정보 이용시 사전고지의무,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제도 등 고객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고객정보 유출시 사고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사고사례 모음집 발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강화

5-②

금융이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 ☐ 전 국민이 참여하는 금융교육특성화 프로그램 「금융골든벨」 운영 등을 통해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퇴치운동 전개
 -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이용한 금융퀴즈 대회를 개최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금융캠프 추진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청소년 금융백일장 개최
 -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 파급효과가 뛰어난 언론매체의 교양·오락 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를 활용한 금융교육 캠페인 전개
- ☐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 금융교육의 정규 교과목화, 금융지식조사의 정례화 등을 위한 입법방안 검토
 - 금융지식의 교과서 수록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 및 보급
- ☐ 중장기적으로 영국의 PFEG(민관합동의 비영리 금융교육 지원기관)을 모델로 한 금융교육 전담조직 설립 검토

5-③ **선진적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 효율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 상담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원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원제도를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활용
- 전자민원창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제도 개선 코너를 마련하고 주요 예상질의·답변(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내용을 지속 확대

□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비은행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역량을 강화
- 현재 시범실시중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민원자율 조정 제도를 확대 운영

□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행정 전개

- 금융회사와의 전자이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ombudsman(일일상담위원)으로 위촉
- 지방순회 상담팀을 운영하여 금융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원격지 주민을 위한 현장위주의 순회상담 서비스 제공

Ⅲ.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성과 및 혁신방향

('05년도 성과)

-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참여에 의한 쌍방향의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 정착을 위하여 비조치 의견서, 업계·소비자 패널 제도 도입을 역점 추진
 -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 및 실시간 민원처리·의제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규제개혁, 민원·제도 개선 등 정부 공통의 혁신을 선도하고 정책품질을 제고
- 조직내부적으로는 학습하는 문화의 정착과 혁신성공사례의 창출 및 혁신인센티브 시스템 활성화 등 변화와 혁신이 전직원에 내재화되는 틀을 마련

('06년도 혁신방향)

- '06년은 전직원이 그간 축적한 혁신성과를 토대로 「국민 체감형 금융감독혁신」을 가속화하여
 - ◆ 전문성·책임성을 갖추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감독기구」로 도약하면서
 - ◆ 혁신이 정책으로 연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음

1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관행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

1-①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시스템 구축

□ 중복·반복자료 요구, 촉박한 자료요청 등 금융회사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관점에서 검사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상시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

* '05.11 금융감독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시 감독·검사 관련 불만 사항중 자료요청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비중(20%)

□ 검사종료후 검사행태, 검사원의 전문성 등을 지속 평가하여 이를 검사계획 수립 등 검사 전과정에 반영(feedback)하는 시스템을 구축

○ 평가 방식은 자체 모니터링 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사대상기관인 금융회사의 평가를 받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 방식을 채택

○ 평가시 검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정도 및 불만요인도 함께 분석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방식의 「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 등도 활용

○ 검사태도 및 관행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 실시

□ 수요자 중심의 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피드백이 활성화됨으로써 검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1-② 수요자 맞춤형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

- ☐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감독기구 일방의 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 검사 수요자가 원하는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감독·검사 서비스 제공이 곤란
- ☐ 수요조사 결과 파악된 금융회사의 취약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전문검사역이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분야·절차 등 경영컨설팅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검사역 교육 실시
 - 컨설팅을 받은 분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체 시정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 동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취약점 해소 뿐 아니라 감독기구에 대한 권위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우호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

1-③ 「중소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

* 소규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 ☐ 리스크관리, 법규, 회계관련 분야 등 중소기업회사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강화
 -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기업회사들에 공통적인 감독정보를 발굴
 - 중소기업회사 직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질의·답변」을 활성화
- ☐ 이를 통해 중소기업회사에 특화된 금융감독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수요자 지향성 개선

2

지식관리에 의한 「금융감독정보서비스」 확충

- ◆ 감독기구 내부의 정보공유 뿐 아니라 외부 금융수요자의 금융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User-friendly)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및 수요자 편익을 제고

2-①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전담검사역(RM) 등의 상시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감독정보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외부 웹사이트 등 내·외부 자료를 상호 공동으로 연결하여 활용*
 - * 통합검색, 자동검색결과 알림, 이용자 중심의 화면구성 등
 - RM 등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검사지식, 사례 등의 축적 및 공유의 제도화
- 동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필요 정보의 신속·정확한 습득, 활용으로 검사 역량 및 상시감시의 효과성을 대폭 개선

2-② 금융통계 제공 서비스 강화

- 금융시장 및 감독정책의 주요 동향 및 추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지표 발굴 및 정리작업 추진
 - 일반국민이 알기 쉽도록 통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림 통계 등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아울러 다양한 금융관련 통계들을 쉽게 업데이트·검색·접근할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확대·개편 추진

2-③ 금융사고예방 정보서비스 제공

- ☐ 유사사고 방지 등 효과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금융사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각종 사고내용, 원인, 내부통제기법 등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금융회사의 감사, 준법감시인과 공유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
 - 고객정보 유출에 대비한 「사고예방시스템」 개발
 -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시 우려되는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출내용을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전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

2-④ 금융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 ☐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기초가 되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눈높이와 교육수요를 고려한 「금융교육 지식시스템」 구축
 - 금융교육용 표준강의교재를 개발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에 보급
 - 금융교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공개
- ☐ 필요한 금융정보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제공
 -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금융상품 안내 등 「생애맞춤형 소비자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고 시의성 있게 제공

2-1. 금융감독위원회 2006년도 예산집행사항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8.31.현재)	집행율
인건비	4,686,517	4,686,517	2,951,806	63
기본사업비	3,126,943	3,126,943	1,862,109	60
주요사업비	3,752,897	3,752,897	1,680,417	45
합계	11,566,357	11,566,357	6,494,332	56

2-2. 금융감독원 2006년 예산집행사항

□ 2006년도 지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8.31현재)	집행율
인 건 비*	157,932,061	83,092,269	52.6
경 비	65,828,139	34,351,885	52.2
자본예산	6,156,759	807,060	13.1
예비비등	14,609,438	645,466	4.4
합 계	244,526,397	118,896,679	48.6

주 :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임

3. 2006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6. 7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 목 차 >

I. 점검 개요	54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54
(1) 총 평	55
(2) 주요성과	60
(3) 개선·보완 필요사항	68
2. 점검 기본방향	73
II. 상반기 이행상황	74
1. 추진실적 요약	74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123
3. 이행과제별 점검결과	126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126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	193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259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325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362
III.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실적	414
IV. 점검결과 반영실적	415
V. 향후 과제	420

I. 점검 개요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 최근 금융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 하에서도 유가,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상존

- 아울러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현주소는 경쟁력과 안정성, 자생력에 있어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과는 격차가 존재

■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고령화사회 진입 등 변화하는 시대여건이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 등을 종합 감안 하여 06년도 금융감독의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한 바 있음

- 시장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①확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그간 꾸준히 도입해온 선진제도의 정착을 위해 ②건전성감독제도의 지속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 경제 성장동력의 지원을 위한 ③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소외되기 쉬운 ④서민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⑤금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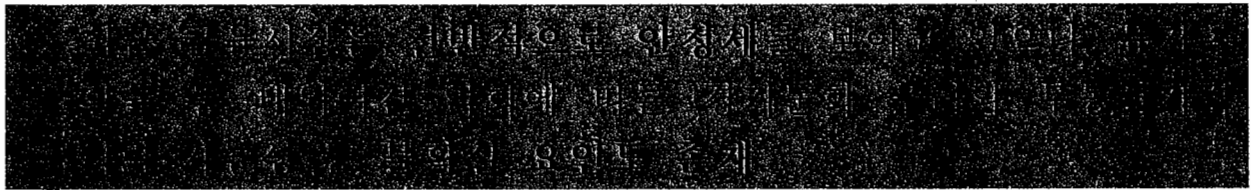
■ 상반기까지의 정책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 및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 의견수렴, 여건변화에의 대응, 정책연계 노력 등 계획과 집행 단계에서의 적정성도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임

■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면밀한 실적점검을 통해 정책 품질과 성과창출을 도모해 나갈 필요

[1] 총 평

(최근 금융시장 동향)



- (금리) 단기금리는 콜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장기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5월중 일시 하락하였으나 6월 들어 다시 상승

* CD(% , 91일) : ('06.1말) 4.18 → (3말) 4.27 → (5말) 4.36 → (6.22) 4.55
국고채(% , 3년) : ('06.1말) 4.92 → (3말) 4.93 → (5말) 4.72 → (6.22) 4.96

- (주가) 상승기조를 유지하던 주식시장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5.10) 이후 전세계 경기긴축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하락세 시현

* 코스피지수 : ('04말) 895.9 → ('05말) 1,379.4 → ('06.5.11) 1464.7 → (6.22) 1,238.8
코스닥지수 : ('04말) 380.3 → ('05말) 701.8 → ('06.5.11) 690.0 → (6.22) 564.2

-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되는 모습

* 주식형펀드 수탁고(조원) : ('06.1말) 32.3 → (3말) 34.8 → (5말) 37.8 → (6.21) 39.3

- (원/달러 환율) '05.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나, 외국인 주식매도, 미국금리 추가인상 전망 등으로 '06.5월 이후 상승

* 원/달러환율 : ('05.10말) 1,040.2 → ('05말) 1,011.6 → ('06.4말) 940.8 → ('5말) 945.6 → (6.22) 955.1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요정책 추진방향)

- ② 시장의 불확실성 및 여건 변화의 더불어, 철저적인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약진, 세계적인 수준과 격차자 불제함을 감안할 때
- ③ 향후 금융감독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금융시스템의 확대 균형발전과 건전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 및 사회개발에 대한 금융사태를 확충하는데 중점

□ 그간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선진 금융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 금융회사수(개) : ('97말) 2,103 → ('06.5말) 1,305
- *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수 19만 8천여명, 총자산 1,652조원

○ 그러나, 우리 금융회사의 규모와 생산성 등은 아직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여건도 취약

- * 자산규모 : 국민은행(1,766억불) 세계 72위, 신한지주(1,419억불) 85위 등
- * 서민금융기관총자산/예금은행총자산(%) : ('98)32.2→('00)26.7→('05)23.1

< 금융산업 현황¹⁾ >

	은행	증권·자산운용		보험		상호저축	신협	계
		증권	자산운용	생보	손보			
기관수 ²⁾	18	40	47	22	29	110	1,039	1,305
임직원수 ³⁾	89,896	29,389	1,951	26,033 (134,272)	25,916 (118,016)	6,046	18,448	197,679
자산(조원)	1,232.1	63.6	1.8	239.4	49.4	41.7	24.0	1,652
당기순익(조원)	13.6	3.2	0.3	2.1	1.2	0.3	0.2	20.9
ROA(%)	1.3	5.7	14.6	0.9	2.4	1.0	0.6	-
ROE(%)	18.4	20.0	16.1	12.3	16.2	23.9	5.8	-
부실채권비율	1.2	1.9	0	3.5	1.8	12.6	3.5	-

주 1) 최근사업년도말 기준(은행/신협 '05.12말, 증권/자산운용/보험 '06.3말, 상호저축은행 '05.6말)

2) '06.5말 기준, 종금사(2), 리스사(20), 전업카드사(6) 제외

3) 정규직 기준, 단 보험권 팔호는 설계사/대리점 인력

□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의 흐름은 많은 변화 요인을 내포

-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외국계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하나금융지주 출범 등 금융그룹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이해상충 등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
- 파생상품시장 팽창,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거래 증가 등 신시장 및 신기술 발전 가속화

□ 이와 같은 대내외 시장동향과 여건변화에 대응키 위해 5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 **(정책과제 1)** 금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형화, 고령화 시대 도래 등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
- ➔ **(정책과제 2)** 선진 제도가 관행으로 뿌리내리고 참여자의 신뢰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제도를 지속 정비
- ➔ **(정책과제 3)** 혁신산업 등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 **(정책과제 4)** 금융서비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되기 쉬운 서민층,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강화방안도 추진
- ➔ **(정책과제 5)**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를 강화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 상반기중 대부분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에 따라 성과목표 및 정책효과 달성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 의견수렴, 의견발화에 대한 대응, 정책연계 노력 등 정책추진 과정상의 적정성과 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임
- ◆ 향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한편 면밀한 현황 점검을 통해 정책품질을 지속 제고해 나갈 필요

□ 단기과제 뿐 아니라,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조성, 신BIS협약 도입 추진 등 대부분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에도

○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세부 과제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 없이 추진중임

○ 이에 따라, 상반기중 이행과제별 성과지표의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한 결과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제의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금융시장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과제 추진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관계자 회의나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feedback노력을 경주

○ 아울러 금융감독업무에 있어 특히 강조되는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유사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수단의 적정성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되
 - 업계와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 모범규준 제정 등과 같은 자율규제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한 바 있음
 - 또한, IT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 등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는 노력도 지속 경주
-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한정된 감독인력 등을 감안하여 민관 합동 TF 구성 등 금융권역별 협회 및 금융회사 등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거시변수와 금융시장의 흐름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기본적인 임무인 바
 - 금리 등 거시변수 변동에 따라 정책의 유효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행태의 변화 등 금융시장 흐름의 변화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
 -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등 각종 국제규범의 변화도 신속히 인지하고 국내 반영 여부를 능동적으로 검토
-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측면에서는 재경부, 한은 등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 관련 규제를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도 적극 활용한 바 있음

[2] 주요성과

(1. 금융산업의 확대·발전방안 추진 실적)

□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외화대출 취급을 허용(06.6)하는 등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제도적 기반을 지원

- 아울러 주가지수 연계 보험상품의 개발 등 복합보험상품의 출현도 적극 유도

□ 전문자산운용사 설립을 허가*하여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SOC 등 차별화된 분야에서 고객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제고

* '06 상반기중 3개 전문자산운용사 설립허가(증권전문 1, 부동산전문 1, SOC전문 1)

- 업계전문가 등과 T/F를 구성·운영하여 펀드취득권유제도 도입(06.4),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안 마련 등 간접투자상품의 접근성과 경쟁력을 증진

- 위탁매매증권사 선정기준 공시(06.2), 펀드 보수·수수료 비교 시스템 구축(06.6) 등 투자자보호 인프라 개선

□ 금융지주회사그룹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자본적정성규제 개선 등이 완료될 경우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 금융의 그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의 과대계상, 리스크 집중, 리스크 전염 등 그룹리스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하여, 전체 퇴직연금사⁶에 대한 업무실태조사를 통해 업무처리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모범규준 TF를 통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또한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에 가입하여 외국연금감독기구간 협력을 증진시켜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 일부 생보사들은 개인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완료 단계에 있으며, 비례보상방법 등 생·손보사간의 산출방법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RADARS)의 세부 시행방안(06.1월)을 토대로 10개 은행에 대한 RADARS 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 업무를 강화
- RM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RM팀장 Workshop을 실시하고, RM업무 만족도, 성과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06.2월)하여 향후 보완방안 등을 모색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

- 신BIS협약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각종 세부지침(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고, 은행별 신BIS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
 - 신BIS협약 도입 준비를 위해 개별은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개별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토록 유도하여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및 위험관리능력 향상에 기여
- 개별보험사의 리스크평가제도 시험운영 실시·분석함으로써(06.3월) 리스크평가제도 지원시스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리스크평가제도 리스크노출정도 절대평가 등급산정(안)」 확정(06.6)

□ 경제성장률, 주가, 금리, 은행 ROA 등의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1.25)

* 거시경제변수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2회 수행

□ 금융회사에 '파생결합상품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06.1월)

□ 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07.1월부터)에 대응하여 재정부 주관의 T/F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 초안을 작성·완료하고 감독규정 제정을 착실히 추진

□ 유행성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유사불법행위 조기에 차단

□ 조사업무 업무분장을 시장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사건에 대해 우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증권범죄에 대한 적기대응능력 강화

□ 금융허브 구축의 기반이 될 외국계금융회사의 영업활동지원과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감독차원의 지원기능을 제도화

□ 외환자유화에 대응하여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및 외화 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자료 입수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도 완화

□ 두바이 금융감독청과의 MOU 체결 등 외국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 주요 국가간 금융관련 이슈를 공유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유도

- 금융감독기관간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기반 마련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06년 5월까지 기업 공개실적(10,870억원)이 목표치인 전년도 전체 실적 110%(14,317억원)의 76%에 이르는 등 기업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가 확대됨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금감위,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예탁결제원, 증권연구원, 채권연구원, 신용평가회사, 증권사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06.2~4월간 총 12회 회의를 개최

- 선물시장에서 상품성있는 신상품을 2개 신규로 상장('06.5월)하고, 상장폐지절차를 개선함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감독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함('06.4월)

-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도입하여 기업 공시 투명성 및 재무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과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도입취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함

*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확장성 기업보고 언어)의 줄임말로 기업정보의 국제적 통용 및 신속한 D/B 구축을 위하여 '99년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국제 표준 전산언어임

** “DART시스템의 XBRL 도입 관련 1차 T/F” 회의 개최 ('05.11.3)

- 기업이 올바른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6 기업공시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06.4월)하고 유관기관 공시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를 지원하는 등 공시관련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함

* 설명회, 특별연수 과정,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운영 등 06년 상반기 중 총 19회 실시

-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은 당초 일정계획에 따라 T/F구성 및 주요과제별 예상쟁점과 대응방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3사분기 내 로드맵 시안을 마련할 계획

* 주요쟁점과 관련한 외국사례조사, 외부연구용역 발주(2월)·접수(5월)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 회의 개최(본회의 5회, 실무반회의 7회)

- 감리제외(조치유예) 방침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발적 수정 촉구서한을 발송하는 등 기업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적극 유도 중

* 상반기 중 자발적 수정 촉구서한 발송(2월) 및 설명회(4회), 강의(6회), 토론회(2회) 실시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감독당국이 직접실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및 품질관리감리 매뉴얼(시안)을 정비

*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개별 감사업무 수행시 동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안)이 입법예고(06.6)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공공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되는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의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 ☐ 중소기업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06.3월, 중소기업진흥공단)하여 중소기업 여신 활성화 지원기반을 확대
- ☐ 부도 중소기업과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간 재무상황 등 비교분석을 통한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을 지도하는 등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를 지속 지원
- ☐ 인터넷 대출심사 탈락고객에게 온라인을 통해 무료이용권을 교부('06.3월)하는 등 서민맞춤대출서비스 활성화를 도모
 - * 국민·우리·제일 은행등 10개 은행 동참
- ☐ 금융교육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취약분야 소비자와 어린이·청소년,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맞춤형 금융교육 내실화에 힘쓴 결과 수강자만족도가 전년보다 향상('05년도 50.7%, '06년도 57.3%)
 - * 금융교육 소외계층대상에 대해 전년 동기(3회) 대비 5배 증가한 15회 교육을 실시
- ☐ 장애인 보험의 활성화와 관련, 위험률 산출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06.6)하고 관련부처(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
- ☐ 불법사금융 혐의업체 212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서민금융 교란사범에 대한 기획조사가 효과적으로 추진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개통('06.4.27) 후 1개월간 32억원을 환급 처리하는 등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남
 - 저축은행의 국고금수납대행업무 개시('06.2.10),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여신 금액한도 완화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06.5.3) 등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여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경영상태 취약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을 유도('06.4월)함으로써 저축은행 부실화 가능성을 억제
 - 이종신협간 합병시 공동유대 적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06.6.16)하여 부실신협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 * 단체신협의 합병대상지역 신협의 범위를 단체신협의 주사무소와 인접한 지역신협으로 완화 등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펀드 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 로 보수교육, 제재자 관리 등 판매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 가능
- *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협회(증협, 자산운용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와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 투자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인력의 전문성 및 윤리성이 제고되어 투자자 보호가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 * 05.11~12 펀드투자자 설문조사 및 판매회사 실태점검 결과,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고, 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 등으로 가입자들의 오해 가능성을 낮추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

○ 아울러,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 및 불합리한 약관조항에 대한 지속 정비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권익 향상 기대

□ 금융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인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붐(boom)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Development) 과제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

□ 또한, 일반인, 교원, 군인 등 성인대상 금융교육시 현장 민원 상담이 동시에 가능한 One-Stop 현장교육·상담 진행으로 수강자의 교육만족도가 개선되는 추세

○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교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범실시학교 선정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쓴 결과 금융교육 실적 대폭 증가

* '05년 상반기중 금융교육 횟수 80회, 인원수 8,300명 대비 '06년 상반기중 횟수 143회, 인원수 17,251명으로 크게 증가

□ 민원자율조정제도 확대실시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동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됨으로써

○ 이들 회사들의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민원의 자율적 해결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완성시(3/4분기중)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업무 및 감독업무에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이므로

○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기준 마련 등의 이행과제는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 필요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

- ☐ 전년도 조사적체건수 등으로 성과지표 중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율이 목표기준에 미달한 바,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할 필요
- ☐ 불공정거래 사건발생은 감독당국의 단속의지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동향, 기업·투자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 ☐ 제재의 실효성과 제재를 받는 외환거래당사자의 편익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

(3. 상장동태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 채권시장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법령·규정 개정작업에 대한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들이 시행될 있도록 노력할 예정
- ☐ 주식관련 선물과 일반상품관련 선물간의 상이한 제도 및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불편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 증권·선물시장 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선물 관련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외부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 지연되고 있으므로 하반기 중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 ☐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집단소송 준비상황 점검 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 XBRL 시범가동시 상장회사들의 재무제표를 XBRL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상장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장회사들의 XBRL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 ☐ 상반기 중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독 효율화를 위하여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외감법 개정(제재조치권 개선)을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 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 금융기관의 공공정보 활용실태, 은행이 자체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 적용비율 제고방안의 이행여부 등 신용평가능력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 ☐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우수은행 영업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은행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추진 및 동 제도의 이해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정책자금 취급범위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및 기타 영업활성화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 노력 지속
- ☐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의 이행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여 부실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반기)
-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 세부계획에 대하여 신탁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설득함과 동시에 신탁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계획대로 추진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와 관련하여, '06년 3/4분기중 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아울러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제도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연중)
- 금융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행사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향후에는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신문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지속 제고할 필요
 -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간 문서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으나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는 한계
 - 금융민원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금융감독당국의 처리역량을 초과하고 있어 민원·분쟁처리 인력을 보강하고 꾸준한 민원 감축노력을 통해 담당자별 민원처리 양을 줄임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민원의 발생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 금융상품, 판매채널 등의 급격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 분석을 통하여 검사 및 제도개선업무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항목을 정비하고 관련 통계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 자체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구축하여 하반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
-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부터 계획 및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여 정책품질을 제고

□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매뉴얼상의 평가요소별 점검이 최대한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 * 자체평가매뉴얼을 자체평가위원들에게 송부하는 한편 매뉴얼 설명회 (6.8)를 개최하여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정책과제 추진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

□ 날로 복잡화·전문화되어가는 금융감독업무에 대해 자체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주요정책과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감위/원 공동의 책임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 평가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 평가시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 등

- 특히, 소위원회별로 소관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토론을 유도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도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촉진

- 평가위원들이 지정한 주요 정책에 대해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과제추진의 배경과 취지, 기술적인 사항까지 설명토록 조치

- * 분기별 점검 외에도 수시로 자체평가위원들을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으로 지정하여 정책자료가 지속 제공되도록 조치

II.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파생상품 참여 자본시장 연계 대출상품개발 등 신규 수익원 발굴을 통해 이 자 수 익 위주의 수익 구조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 제고방안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은행의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토록 유도 함으로써 수익구조 개선 지도 * 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은행의 ROA분해 분석 결과 검토 ('06. 3)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은행권 Workshop 개최 ('06. 6)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의 자원 방안 강구 	○ 자율적 인수·합병 지원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주주 변경승인요건 마련(1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화 허가 (맥쿼리증권, 3월) 대형화를 위한 겸영인가 (미래에셋증권 장외파생 금융업, 3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비하여 인허가 요건등 진입규제 재정비 방안 마련 중(계속)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계좌를 통해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증권회사 결제 시스템의 효율화 추진 	○ 증권업협회를 통한 참여방안 확정 및 은행 권과의 의견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가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토록 자본 시장통합법(안)에 반영(계속) 증권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에 따른 신뢰성·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계속)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 업무별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전문인력 개선방안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업협회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의뢰 (06.3월 말) ○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초안) 마련 (증권업협회, 06.5월) ○ 현재 개선방안(초안)을 바탕으로 보완작업 중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 해석 등 업무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증권회사 내부 상품심사기능 강화 	○ ELW(Equity Linked Warrant) 등 신상품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 제시	○ 증권회사의 ELS 영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06.2월)	○ 정상추진
	○ 증권회사 자체 상품 법규 심사 강화 유도	○ 증권업협회로 하여금 증권회사의 약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토록 지도 (지속)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유도 및 업무범위확대 등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완화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검토('06.3, 금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겸영허용 - CMA 및 소액결제서비스 허용 검토 보험사 지급결제제도 도입 방안 검토('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결제기관을 활용한 소액결제 추진 등 ※ 생·손보험회를 통한 업계의견 수렴('06.5) 보험사 업무범위확대 등의 재경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안 검토('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에 대한 예·적금 판매허용 등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 및 외화관련 규제를 재정비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 업계의견 수렴 및 방안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대출 취급 허용 - 국내 기업 발행 외화증권 등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인정 등 ※ 외화자산 관련 규제정비를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05.6~10) (금감원 2명, 생·손보업계 5명) ○ 파생상품 거래기준 개정안 마련중('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투자한도 확대 - 내부통제기준강화 등 ※ 고위험자산 관련 규제정비를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05.3~현재) (금감원 2명, 생·손보업계 5명 등)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판매 채널 전문자회사 설립 및 모집 조직 상품별 전문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판매채널 전문자회사 설립 등 모집조직 전문화 유도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자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보험업허가('06.3) ○ 엘지화재해상보험(주)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자회사 소유승인('06.3) ○ TV홈쇼핑 등 신판매채널 특성에 맞는 모범판매기준 마련('06.3) - 표준 판매 스크립트 마련 등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보험상품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및 개발 지원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가지수 등에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5.12) - 복합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및 개발지원 지속 추진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제고	○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 허가 (상시)	○ 부동산·SOC 등 특정 자산운용에 전문화된 전문자산운용사의 신규 설립 허가 - '06년 상반기중 3개*의 전문자산운용사 허가 * 한국밸류자산운용('06.4), 다올 부동산자산운용('06.6), 다비 하나인 프라자산운용('06.4 예비허가, 7월중 본허가 예정)	○ 정상추진
▪ 간접투자상품의 경쟁력과 접근성 증진	○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 판매제도 시행	○ 자산운용사의自社 운용 펀드 직접 판매 제도 시행('06.1) - 펀드 직접판매 지원을 위해 직판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준비상황을 점검 - 직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판매보수/수수료 수취 허용 등) 마련	○ 정상추진
	○ 펀드 취득권유인 제도 도입	○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등에 대해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허용(06.4) ○ 펀드 취득권유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판매행위준칙 제정('06.6)	○ 정상추진
	○ 파생펀드 규제개선 방안 마련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발표('06.5) * 적격거래 요건 신설 및 동일상대방 거래한도 설정,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등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 간접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이해와 신뢰제고	○ 자산운용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공시	○ 투자설명서에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을 공시토록 개정('06.5)	○ 정상추진
	○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펀드보수·수수료를 비교·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06.6)	○ 정상추진
▪ PEF 활성화 유도	○ PEF의 증권·선물·자산운용사 출자에 대한 심사요건 마련	○ PEF의 증권·선물·자산운용사 출자요건 심사시 적용할 지배주주 변경 승인요건을 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06.2)	○ 정상추진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체결(한국금융연구원, 2.13.)	○ 정상추진
	○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기준 검토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BIS기준 자본적정성규제 도입방안 검토(1.25.)	○ 정상추진
	○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한 세부감독방안 마련(2~3분기)	○ 상기연구용역 추진중	○ 정상추진
▪ 경영확대에 따른 고객 또는 사업부문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정보 차단 벽(Chinese-wall) 구축 강화	○ 경영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정비방안 마련(2~3분기)	○ 내부통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계속)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보험사에 대한 겸 영·부수 업무 및 자 회사 영위업 종 지속적 확대	○겸영·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영위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방안검토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검토('06.3, 금감위) ○보험사지급결제제도 도입 방안 검토('06.6) -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소액결제 허용 등 ○보험사자산운용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안 검토('06.6) - 예·적금 판매허용방안 - 자산유동화 관리업무 확대 ○보험사의 자회사 영위업종 확대를 위한 자산운용 관련 법령개정 수요파악 및 개정의견 마련('06.6)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자 회사 소유허용 - 자회사 승인의제의 법적 근거마련 및 대상확대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 산업의 역할 강화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	○작업반 운영, 재경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정상추진
▪ 출산장려형 금융 상품 활성화 유도	○출산장려형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검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상품개발(5.18)	○정상추진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모범규준 제정 추진 계획 수립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06.1) 및 추진현황 발표('06.3) ○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T/F구성('06.1)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 산업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업무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실무 작업반 운영 및 모범규준 대상업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사업자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0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 약관 점검 등을 통하여 모범규준에 포함될 과제를 검토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실태 조사 완료 (5.15-6.9) 후 문제점 분석 4/4분기까지 모범규준 시행을 목표로 대상업무를 선정(6월)하여 제정작업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운용, 가입자 교육, 연금계리 및 세제, 시스템 표준화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제도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안내코너에 FAQ메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감원 홈페이지에 기 설치('05.12월)된 퇴직연금 안내코너에 FAQ 메뉴 신설 완료(2.10)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안내코너에 과세제도 설명메뉴 신설 퇴직연금감독규정 해설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제도 설명메뉴 신설 완료 (4.10) 감독규정 해설서 마련 (6.30)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 정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전 예방적 리스크 중심의 검사 강화 	○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 (6.12)	○ 정상추진
	○ 검사매뉴얼 수정·보완(상시)	○ 1/4분기 검사매뉴얼 수정 완료(22개 단위 업무) ○ 2/4분기 검사매뉴얼 수정 (추진중)	○ 정상추진
	○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의 CD위조사고 이후 내부통제개선 추진 상황 보고(3월) ○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SC제일은행 ○ 파생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한국씨티은행 ○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HSBC ○ 금융비리특별점검 -6개 저축은행 ○ IT부문 운용실태점검 -47개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점검 -대한생명 등 8개 본점 및 수도권 소재1개 점포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 본점, 5개 지점, 8개 보상센터 ○ 외국계증권사 준법감시인 운영실태 점검 -도이치증권 등 8개 증권사 ○ 분쟁,민원에 대한 자체감사의 적정성 여부 점검 -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 ○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 및 내부통제제도 적정성 검사 - 대우증권 ○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판매과정의 적정성 점검 -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 정착 유도			
▪ 금융회사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전예방적 리스크 중심의 검사 강화	○은행의 RADARS 평가 실시(금년중 12개 은행 대상) (상시)	○우리,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에 대한 RADARS 평가 실시(2월) ○대구·광주은행에 대한 RADARS평가실시(5~6월)	○정상추진
▪ 전담검사역(RM)제도 운영의 내실화	○RM팀장 Workshop 개최	○RM팀장 Workshop 실시 및 결과보고(1월)	○정상추진
	○RM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향후 제도에 반영	○RM대상 만족도, 성과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2월)	○정상추진
	○컨설팅 중심의 검사강화 (06중7개 금융회사컨설팅 예정) (상시)	○컨설팅 요청회사에 대한 기본 조사 실시(1월~3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운용 방안 및 2006년도 추진계획 마련(4월)	○정상추진
	○맞춤형 상시감시 중점 항목 선정·운영 (상시)	○검사각국 실정 및 금융회사 영업특성 등에 맞는 상시감시체제 운영 · 은행: 조달자금 금리갭 등 · 비은행 카드사 신용리스크 등 · 보험: 계열사 부당지원 등 · 증권: 적립식 펀드 불완전 판매 등	○정상추진
	○은행의 영업활동별 상시 감시 강화 (상시)	○주택담보대출 및 엔화대출 취급업무에 대한 감시 강화 ○과당경쟁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상추진
▪ 검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검사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도 경감	○검사계획의 협의·조정 (상시)	○'06년 1/4분기(1월) 및 2/4분기(3월), 3/4분기(6월) 검사계획 수립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BIS협약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선정방안 등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은행의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신BIS협약 시행을 위한 각종 세부지침(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화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세부지침(안) 마련(06.2월) 신BIS협약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예비운용요건(안) 마련(06.3월)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세부지침(2차안) 마련(06.5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마련(06.6월) 	정상추진
	○ 은행의 신BIS협약 준비 현황 점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은행의 운영표준방법 추진현황 조사 및 도입준비 지도(06.5~6월) 내부등급법/고급측정법 적용 은행(10개)에 대한 신BIS협약 시행 준비상황 점검 실시(06.6월) 	정상추진
	○ 계량영향평가 실시	○ 중소기업 계량영향평가(QIS) 분석 실시(06.6월)	정상추진
	○ 신BIS협약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유동화 익스포저, 자본적정성 평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관련 워크숍 실시(06.2월, 5월, 6월)	정상추진
	○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한 쌍방·다자간 실무적 국제협약의 강화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FSA 주관 「Standard Chartered Bank Basel College」 참가(06.3월) 은행 핵심준치 검토그룹(CPLG) 회의 참가(06.2월) 한국씨티은행 Basel II 이행 관련 본사 관계자와 업무협의 실시(06.5월) Basel II 및 지역별 리스크 관리 관련 Roundtable 회의 참가(06.6월)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RBC) 도입 추진 	○ RBC제도 세부 시행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 보험리스크 산출 방안 마련(06.3월) -담보위험별/보험종류별 리스크 산출방안 마련 보험사 시장리스크 산출 방안 마련(06.3월) -단기 매매자산을 대상 으로 리스크산출방안 마련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금융흐름과 유동성 위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유동성 비율 산출방식 개선 	○ 원화유동성비율 제도개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유동성비율규제 관련 은행권 건의사항 및 송부 요청 및 접수(05.12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성 비율규제 관련 건의청취 (06.2월) 주요국가 금융감독당국의 유동성지도비율 관련제도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06.1~3월) 원화유동성지도비율 규제 개선을 위한 TF 구성· 운영(06.2월~)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 한도관리대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신용공여한도규제의 발전방안 모색	○ 외환위기 이후 개편된 현행 신용공여한도규제제도 운영성과 분석	○ 신용공여한도제도 운영성과 분석(06.6월)	정상추진
	○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관리대상 신용공여의 범위 조정 등의 개선방안 강구	○ 신용파생상품 거래 감독 기준보완방안 검토(06.3월) ○ 예보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관리 개선방안 시행(06.3월) ○ 주요국의 거액신용공여 및 관계자여신 규제제도에 대한 조사(06.3월)	정상추진
	○ 신용공여 관련 업무보고 시스템 정비 및 모니터링 강화	○ 05년중 국내은행 신용공여현황 분석(06.3월) ○ 05년말 국내은행 관계자 신용공여 현황 분석(06.4월) ○ 06.1/4분기 은행 신용공여 현황 분석(06.5월)	정상추진
▪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추진	○ 리스크평가제도 시험운영	○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시험운영 및 분석(06.3월) -31개 보험사(생보18개사, 손보13개사) 대상 실시(05.12~06.3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기준안 보완추진 ○ 리스크평가제도 지원 시스템 개발추진(06.5월) -제도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분석 및 평가등급 산정 자동화방안 검토 ○ 리스크노출정도 절대평가 등급산정방안 마련(06.6월)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 다양한 Stress Test모형 개발 및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영향 분석 실시	○ 금융산업 Stress Test 모형 개발	○ 『금융시스템 Stress Test 모형 개발 결과보고』 (1.25)	○ 정상추진
	○ Stress Test 모형 운영 및 결과분석	○ 원/달러 환율하락이 중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3.6, 4.20) ○ 부동산 가격 하락의 파급효과와 시사점(4.20)	○ 정상추진
▪ 조기경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검증 추진	○ 조기경보전산시스템 개발 착수(모형 컨설팅 및 추가 개발	○ 조기경보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 개최 (1.17)	○ 정상추진
	○ 조기경보모형 자문위원회 구성	○ 『2006년 조기경보모형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마련 (3.10)	○ 정상추진
	○ 모형 컨설팅 및 추가개발 ○ 조기경보모형 자문위원회 개최	○ 조기경보모형 자문위원회 개최(4.13)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감독기준 정비 추진	○ 파생결합금융상품 업무 처리기준 통보 및 관련 설명회 개최	○ 파생결합 금융상품 관련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 송부(1.12.) 및 관련 설명회 개최(1.26.)	○ 정상추진
	○ 총당금제도 도입 등 파생상품거래관련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마련	○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완료)	○ 정상추진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기준 제정 및 신종 인터넷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금융회사 IT투자효과분석을 위한 외부연구용역 추진	○ 용역대상업무 요건분석 ○ 용역제공업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업체선정(한국IBM)(3.30)	○ 정상추진
	○ 외부연구용역 실시 및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적용 (2~3분기)	○ 외부연구용역 실시(5.2) 및 중간산출물 점검 (6.30.예정)	○ 정상추진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정비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및 감독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등에 엄중한 책임 부과 (상시)	○ 기관, 경영진 등을 엄중 제재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점의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불시검사 등을 통해 실적 위주의 경영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사례 방지 	○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의 CD위조사고 이후 내부통제개선 추진 상황 보고(3월) ○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SC제일은행 ○ 파생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한국씨티은행 ○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HSBC ○ 금융비리특별점검 - 6개 저축은행 ○ IT부문 운용실태점검 - 47개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점검 및 부문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생명 등 8개 본점 및 수도권 소재 1개 점포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 본점, 5개 지점, 8개 보상센터 ○ 외국계증권사 준법감시인 운영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이치증권 등 8개 증권사 ○ 분쟁, 민원에 대한 자체감사의 적정성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 ○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 및 내부통제제도 적정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우증권 ○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판매과정의 적정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 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보 완 및 집행 간부의 책 임성제고 등 임원관련 제 도를 정비	○ 은행 임원 및 집행간부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수 렴(공청회 실시)	- 임원 자격심사제도 개 선 · 보완방안 마련('05.12) - 3/4분기 실시예정인 공청 회를 대비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정비를 위해 필요 한 조치사항 분석 및 유 관기관간 사전 조율	○ 정상추진
▪ 주채무계열제 도 운영을 통한 대기업 집단 재무구 조개선실적 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 강구	○ '06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 '06년도 주채무계열 선 정(4월)	○ 정상추진
▪ 구조조정기업의 적정한 매각	○ 구조조정추진기업의 경 영성과분석	○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05년도 경영실적 분석 (4월)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주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중대 사건 중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상시) ○ 신속한 조사체계 정착으로 중대사건에 우선 조사 실시 (상시) ○ 긴급사건에 대한 거래소와 공동조사 확대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 테마주(5종목) 등에 대하여 기획조사 실시(213) ○ 조사업무 업무분장을 시장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전환(1.17)하여 선제적 조사체계 구축 ○ 상반기중 불공정거래 조사사건 총 98건 처리하여 '05년말 대비 적체건수 29건 감소(105건→76건) ○ 중대사건에 대한 우선조사 실시로 45건을 검찰고발하여 전년동기대비 24건 증가(21건→45건) ○ 엔터테인먼트 테마주 등 긴급사건에 대한 거래소와의 공동조사 실시(10종목, 전년동기 8종목) ○ 우회상장 관련 39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 실시(거래소)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기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기 시세조종 등에 대한 심리·조사기법 지속 개발 (상시) ○ 현·선연계 매매재현 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 감시 시스템 지속보완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사례 및 조사기법 연구를 위한 연구회 설립 (1.27) 및 개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단기형 시세조종(2월, 현선 연계 시세조종 6월 사례 등 교육 - 초단기형 시세조종 조사 및 조치(15건) ○ 불공정거래관련 제도연구를 위한 FTM(Fair and Transparent Market)연구회 발족(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6월 현재 5회 개최 ○ 복합불공정거래(우회상장, 사채시장 등 연계)의 사례분석 및 감시방안 마련(거래소, 5월) ○ 현·선연계 시세조종 최초 적발 및 조치(1건)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강화			
▪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연구용역 의뢰 (1/4분기) ○ 내부 관련부서 실무자로 T/F구성(1/4분기) ○ 연구용역 결과 제출 (2/4분기) ○ 연구용역안에 대해 내부 T/F검토(2/4분기) ○ 연구용역안에 대한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의 견수렴(2/4분기) ○ 최종방안 마련 및 증권선물조사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계약체결(1월) ○ 금감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협회 실무자로 T/F구성(1월) ○ 연구초안에 대한 T/F 검토 (3월~4월 중 3회 개최) ○ 최종보고서 제출(4.28) 및 관련 내부보고 ○ 연구용역안에 대한 내부안 마련을 위한 T/F 검토(5~6월 중 3회 개최) ○ 건전증시포럼(6.19)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의견 수렴 ○ 「제재절차의 법적 적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 마련중 	○ 정상추진
▪ 제3자 명의 CD발행, 신종구속성에금 등 금융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수시점검	○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 및 1개 외은지점 (2~3월) ○ 우리, 국민은행 등 6개 은행 (5~6월) ○ 18개 저축은행 ○ 대한생명 등 7개 본점 및 3개 점포 ○ 삼성화재 등 4개 손보사 	○ 정상추진
	○ 불공정 외환매매거래 의혹에 대한 검사	○ 불공정 외환매매거래 점검 - 우리은행 등 2개 은행	○ 정상추진
	○ 금융사고 및 신종 불건전 금융관행 등에 대한 검사 (2~4분기)	○ 횡령사고 관련 부문검사 - 농협 면목역(6월)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금융시장 국제화 진전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 외국금융사에 대한 고충 처리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하여 애로사항 등을 일괄 접수·처리	○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 및 인력배정 완료(06.4) (외국계금융회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완료
▪ 중국 등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신흥 국가의 시장 및 진출여건을 분석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강구	○ '06년 국내은행 해외진출 계획 및 지도방안 수립	○ 각 은행별 진출계획을 토대로 06년 국내은행 해외진출 지도방안 마련	○ 정상추진
▪ 불법·이상징후 거래에 대한 자동검색 시스템을 개발	○ 주요 불법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개발 의뢰	○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의뢰 ○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안)” 합의	○ 정상추진
	○ 동 시스템 개발 및 시험 가동	○ 시스템 전산화작업 진행 (3월~6월) ○ 시스템 시험 가동 및 테스트 실시(5월~6월) ○ 본가동(7월1일 예정)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기인 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활성화 및 교육·홍보 등에 방 활동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보험시장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에 대한 상시조사 (상시)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 보험사고 혐의 총81건 (관련금액 : 259억원, 관련자 : 2,974명)적발하여 수사의뢰	○정상추진
	○보험사기 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활동(교육·홍보) (상시)	○보험사기방지 교육(20회) : 보험사 임직원, 수사 기관요원, 학생 등을 대상 ○언론,방송등 홍보(15회) : 보도자료배포, TV·라디오 인터뷰 등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 금융상품 판매시 금리 적용 및 각종 수수료 편법 징수 사례에 대한 점검 강화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시 대출금리 및 수수료의 편법 적용여부 점검 (상시)	○종합, 부문검사시 병행 점검 실시 - 한국수출입은행(5월) - 한국산업은행(6월) - 과당경쟁실태 점검(6월) ○국민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금리 적용 착오로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토록 시정 조치 (2월) ○주택담보대출 등 과당경쟁 실태 점검 - 2~3월중 11개 은행, 5~6월 중 6개 은행 점검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 금융시장 국제화 진전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및 분석(상시)	○ '05.4/4분기 기준 입력 변수에 의한 시스템 가동 및 결과분석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 및 위규사항 엄중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조사 ○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1/4분기중 '04.1~'05.10 월중 증여성송금·영수 거래자를 이용한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조사 실시 ○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2006.5.26) ○ 외환거래 건전화 유도를 위한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06.6.23)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감독당국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및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 MOU가입 추진(상시) ○ 현지확인조사 등 역외발생 불공정거래 조사강화(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기관간 금융거래 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의결 : 3. 2. - 시행 : 6.25. ○ 다자간MOU 가입 신청관련 IOSCO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4월) ○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연중)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자본시장 역할 제고			
▪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을 이용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 공개 및 유상증자를 적극 유도(상시)	○해외증권발행 촉진을 위한 발행절차 및 방법 명확화 추진 -신고서면제기준 명확화 및 CB등 전환금지기간 규제 폐지	○정상추진
	○IT,BT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기술력평가 및 미래수익가치 산정방안 마련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업 공개시 적용할 가치평가 기준을 실무가이드라인으로 제정	○정상추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발행목적 등의 제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구조의 ABS발행을 지원	○ABS법 개정 T/F(재경부 주도)에 참가하여 법 개정의견 제출 -법 개정 이후 규정개정 예정	○지연 -법제정의 (재경부)
▪ 채권거래정보의 실시간 공시 체계 강화, 분산되어 있는 장외호가의 집중 등 채권장외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T/F 운영	○업계, 학계, 유관기관으로 '채권시장제도개선 T/F' 구성·운영(2~4월)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정상추진
	○채권시장 제도개선방안 마련	○채권시장개선방안 마련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자본시장 역할 제고			
▪ 채권딜러의 소액투자자에 대한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달리기능 수행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거래대상 확대(OD, CP 등)	○채권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T/F 운영	○업계, 학계, 유관기관으로 '채권시장제도개선 T/F' 구성·운영(2~4월)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정상추진
	○채권시장 제도개선방안 마련	○채권시장개선방안 마련	○정상추진
▪ 투자자 거래편의를 위해 현재 주식·증권·상품과 일반상품관련 품목간 상이한 증거금제도 및 매매·결제 시스템의 단일화 추진	○증거금제도 및 매매·결제 시스템을 단일화 기본방향 확정	○제도 및 시스템 단일화 기본방향 확정(6월) -하반기중 세부 제도 및 시스템 반영사항 확정	○정상추진
▪ 투자자보호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토록 업계 모범규준을 마련 하여 선물시장의 건전투자 유도	○증권업·선물협회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 모범규준 마련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을 위한 모범규준(안) 마련(6월) -하반기중 증권·선물회사 시스템 반영 예정	○정상추진
▪ 선물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상품성 있는 상품도입 및 유동성공급 방안을 검토 하는 한편 상장폐지절차개선	○신상품 도입,유동성공급 방안 및 상장폐지절차 개선방안 마련	○유동성 부진 품목의 상장폐지 기준 마련(4월) ○엔·유로선물 상장(5월)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영역 조정, 취급상품 다양화 등 근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 정비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에 대비한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통합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각종 이슈 검토 중 (5월)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의 업무 다양화에 따라 리스크 규모 등을 감안한 사전 예방적 감독제도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 리스크중심 감독체계(RBS) 시행 관련 기본계획 수립 (5월)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실태 조사 중 (6월~)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정보의 공시 확대, 내부통제기능 강화, 수요자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평가 등 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권고안(IOSCO의 Code of Conduct 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점검 ○ 자산운용협회 등 신용평가의 수요자가 신용평가회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동 결과를 공시하도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분기부터 추진 예정 ○ 3/4분기부터 추진 예정 	○ 정상추진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결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 등 증권·선물시장 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 정보전략계획)에 대한 외부컨설팅 결과 검수 ○ IT통합 기본계획 수립 ○ 시장효율화위원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정보전략계획)에 대한 외부컨설팅 최종 결과물 접수(2월) ○ ISP(정보전략계획)에 대한 외부컨설팅 결과 검수 완료(3월) ○ IT통합 관련 외부업체(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연구 용역(4월) ○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발표회(6월) 	○ 정상추진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			
▪ 인프라 장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도입하여 기업공시투명성 및 재무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XBRL 개발업체 선정 및 개발착수 - 착수일자 : '06.4.10 - 진행상황 : '06.12월 개발완료를 목표로 6월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스템은 8월에 시험가동 예정	○ 정상추진
▪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 준비현황 점검 및 지도	○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집단소송 준비상황 점검 및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T/F팀 구성('06.6)	○ 지연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 내부 공시시스템 구축, 공시업무 전문인력 확보, 관련조직 정비 등 유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구축 및 관련조직 정비 등을 위한 T/F팀 구성('06.6)	○ 지연
	○ 중소·벤처기업의 CEO·CFO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세부 내용과 외국 주요사례 등에 대한 교육 (상시)	○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시교육시 증권집단소송 세부내용 및 외국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실시('06년중 16회)	○ 정상추진
▪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증권유관기관의 공시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연수과정을 개발·지원 (상시)	○ 올바른 공시 유도를 위한 종합지원방안 지속추진 -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안내 및 공시 모범사례집」 발간(1월)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 라인」 발간(4월) ○ 상장협 등 유관기관 공시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원(19회) ○ 주요경영사항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2월) -서울,부산,광주,대구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 T/F 구성 완료, 관계기관 통보 및 협조요청	○ 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회계기준원, 거래소, 상장협, 회계업계 대표 등으로 T/F 구성(2월) - 로드맵 마련을 위해 5차례 회의개최 ○ T/F 구성원에게 임무 등 설명	○ 정상추진
	○ 검토대상 주요과제 선별 및 예상 쟁점 파악	○ 주요쟁점과 관련한 외국 사례조사, 외부연구용역 발주(2월), 연구용역보고서 접수(5월)	○ 정상추진
	○ 세부과제별 작업반 구성 및 책임자 지정	○ 실무작업반 구성(3월) - 국제회계기준 도입전략 등(1반)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채택 등(2반) -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 분석등(3반)	○ 정상추진
	○ 주요과제별 예상쟁점과 대응방안, 추진계획 등 논의	○ 실무작업반 회의(7회) 및 T/F본회의(5회)를 통해 주요과제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 정상추진
▪ 회계·감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실무의견서 등으로 명확화	○ 재무보고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제정·발표(상시)	○ 총2건을 제정·발표(5월) -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2006-1) -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회계처리(2006-2)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품질관리감리 업무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감리절차·방법 및 제재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감리 실시를 위한 외부전문가 채용 외국의 관련 제도 소개를 위한 책자 발간 외감규정 및 세칙 개정 품질관리감리 매뉴얼 시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 등을 통하여 외부 전문인력 3명 채용(3월) 및 인사발령(4월) 미국PCAOB의 회계법인 감독제도 책자 발간(5월)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근거마련, 전문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외감 규정 및 세칙 개정(6월) 품질관리감리 매뉴얼 시안 마련(6월) -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 실시, 감리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와 체크리스트 마련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조치권 및 조치결과 공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p><제재 조치권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수단의 다양화방안 연구·검토(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제한 조치권의 증선위 이관을 위한 외감 법령 개정 협의(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선위 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6월) 	○정상추진
	<p><조치결과 공표 합리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감리조치를 한 경우에만 공시·공표하도록 개선 외감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감규정을 개정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외감법 개정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법 형식상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감 규정 개정(6월) 연구용역을 발주(6월)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 소송법 유예 취지에 맞게 기업 스스로 과거 분식을 적극 수정토록 교육·홍보 강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해소 유도정책」 	○ 감리제외(조치감경) 실무 지침 개정	○ 감리제외 실무지침 개정 완료(2월) - 감리제외 또는 조치감경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수정의 동기·시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감경폭을 차등화	○ 정상추진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촉구서한 발송(상장법인 대상)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통하여 모든 상장법인에게 발송완료(2월)	○ 정상추진
	○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촉구(교육 및 홍보) (상시)	○ 상반기중 설명회(4회), 강의(6회), 토론회(2회) 실시 완료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확대 실시하여 회계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상장법인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방안 마련	○12월 결산 상장법인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방안 마련(3월)	○정상추진
	○12월 결산 상장법인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 및 수정권고 등 시행	○12월 결산 1,491개 상장법인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4월) ○총1,633사에 대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행상태를 점검(4월)	○정상추진
▪ 혐의기업 인지 기법을 개발하는 등 업무 매뉴얼 보완	○감리 관련 업무매뉴얼의 지속적 개발 및 보완 (상시)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완 -재무사항심사, 특이사항 적출, 소명요구 및 정밀 감리 실시 등 감리과정 관련 업무매뉴얼 보완 ○재무사항 심사를 통하여 혐의사항을 적발하는 기법 향상 (상시) -정기적인 감리결과 지적 사례 발표·토론을 통하여 실무자간 적발기법의 상호 공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심사감리업무 개선('06.3) -심사감리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부서단위 심사 조정회의 도입 -각 계정별 분석점검표 작성요령 및 심사감리 유의사항을 보완하는 등 분석점검표, 분석점검표 작성지침, 특이사항 예시 기준 내용을 보완 ○감리능력 향상을 위한 감리실무자 연수실시(5월) -감리제도, 감리절차 등 회계감독제도 전반 -분석점검표 작성요령 -감리결과 지적사례 및 시사점 ○혁신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세부 사례분석 등 교육 3회 실시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시험응시 자격, 부분합격제 등 새로운 공인 회계사시험의 원활한 정착과 수험생 편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 공개 결정 공개	○ 2차시험 문제 공개 결정,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1월)	○ 정상추진
	○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접수, 시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	○ 접수한 17개 과목에 대하여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과목을 인정키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2월)	○ 정상추진
	○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 시간, 시험과목 및 문항수 결정 공개	○ 시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3월)	○ 정상추진
	○ 학점이수소명신청서 접수 준비	○ 홈페이지 시스템 정비 및 테스트 중점실시(3월) ○ 전국대학에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취득증명서 발급안내 공문발송(3월)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시험응시 자격, 부분합격제 등 새로운 공인 회계사시험의 원활한 정착과 수험생 편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수험편의를 제공코자 공인 회계사 2차시험 문제 공개 및 07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및 문항수 공개	○ 2차시험 문제 공개 (보도 자료, 1월) ○ 시험시간 등의 내용 발표 (보도자료, 3월)	○ 정상추진
	○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 접수,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	○ 접수한 70개 과목에 대하여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개 과목을 인정키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06.2. :17개접수, 10개인정 -'06.4. :16개접수, 15개인정 -'06.6. :37개접수, 25개인정	○ 정상추진
	○ 학점이수소명신청서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 시스템 정비 및 테스트 중점실시(3월) ○ 전국대학에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취득증명서 발급안내 공문발송(3월) ○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 접수 개시(4월) ※당해연도에는 연중 계속 하여 접수 예정	○ 정상추진
	○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설명회 및 홍보	○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홍보 계획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5월) ○ 공인회계사시험 길라잡이 책자 시안 마련(6월)	○ 정상추진
	○ 한국인정기관과 협의하여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한 특별 학점인정절차 마련	○ 학점인정업무 협조요청 공문 발송(5월) ○ 학점인정 신청 관련사항 및 주의사항 회신 접수(6월) ○ 학점인정 신청 및 증명서 발급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홍보(6월)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 목표설정 등을 통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기업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부진 은행에 대한 점검 강화	○ '05년중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분석	○ '05년중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분석(2월) ○ '06년 1/4분기 신용등급평가시스템 운영현황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분석(6월)	○ 정상추진
	○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실적 부진은행에 대한 면담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실적부진은행과의 면담 및 개선방안 마련 지도(4월) 및 이행상황 점검(6월) ○ 신용평가시스템 등 여신사후관리 부진은행에 대한 지도(6월)	○ 정상추진
▪ 자발적인 외부감사 수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시 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 국내은행의 비외감 법인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실적 분석	○ 국내은행의 비외감 법인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실적 분석(1월)	○ 정상추진
▪ 공공정보의 집중·공유 확대	○ 규개위,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중 입법조치 추진(상시)	○ 행자부 주도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마련, '06.6.13. 입법예고한 상황 - 금융기관이 주민번호 변경정보, 해외이주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6.3.24 행자부가 개최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제정 공청회 참가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고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활성화 방안 강구 객관적 기업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장기거래관계를 통한 사업성평가 등 비계량정보 중심의 관계형 대출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이 포함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저축은행을 중소기업정책자금 취급기관에 포함('06.3.29) 중소기업정책자금 취급 관련 업무 인프라 구축(중앙회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 취급 예정('06년 하반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추진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형대출 활성화 유도 방안 마련·시행 * 관계형대출에 적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유도, 관계형대출 모범 사례 전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형 대출 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하는 수익모델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은행의 워크아웃 제도 운영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채권은행 임원회의 개최 중소기업 워크아웃 운영실태 현장점검 부도발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워크아웃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은행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 도입 현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년도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점검·지도(2월, 보도자료 배포) '06년도 1/4분기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점검·지도(5월, 보도자료 배포) 채권은행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워크아웃 활성화 독려(3월) 부도 중소기업과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간 재무상황 등 비교분석을 통한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 지도(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p>○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p> <p>▪ 「서민맞춤 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서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확충 유도</p>	○인터넷포털과 업무제휴 추진	<p>○인터넷포털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드림위즈,뱅크폴(300여개 중소기업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결)과 업무제휴(2월)</p> <p>- 동 사이트에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배너 연결</p>	○정상추진
	○은행참여 유도 (상시)	<p>○HSBC은행 참여(1월)</p> <p>- 직접 대출 시행</p> <p>○은행대출심사 탈락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이용권(1백만장)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을 통한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지원(3월)</p> <p>- 국민·우리은행 등 전 은행 동참</p> <p>○인터넷 대출심사 탈락 고객에게 온라인을 통해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지원(3월)</p> <p>- 국민·우리·제일 은행 등 10개 은행 동참</p>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			
▪ 생계형 금융 맞춤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추진 방향 등 검토 ○ 방문교육 및 금융현장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배려(상시)	○ 금감원 교수인력 활용 등 생계형 금융교육 프로 그램 운영 활성화('06.2) ○ 소외계층 아동대상 사회 진출 성공을 위한 생계형 어린이 금융교육 실시 - 전북 늘빛아동센터 방문 교육(2월) 우선 배려 - 한국복지재단 불우아동 대상 하계방학중 방문 교육 프로그램 추진(6월) ○ 안정적 고용희망 소비 자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생계맞춤형 금융 교육 - 대구 고용안정센터 방문 교육 우선 실시(2회) ○ 군부대 장병·하사관 방문 교육과 체험교육시 우선 배려(3~4월, 7월) *생계형 사금융거래 피해 예방 사례해설 교육 ○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도시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후원 - 대구계명대 재무상담 클리닉센터 개설(3월) 및 교육지원(5월-6월, 7회)	○ 정상추진
▪ 금융소외 계 층을 위한 다 양한 금융 상품 개발 유도	○ 보건복지부 등과 장애인 보험 위험률 산출 협의	○ 복지부와의 업무협약, 위험률 산출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배당 미끼 불법 유사수신, 고리사채, 카드깡 등 서민금융 교란 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당국과의 핫라인 정비 홍보용 포스터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 인사이동 및 관할 조정을 반영하여 핫라인 정비(3월) 고리사채 등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 홍보용 포스터 5만부 제작·배포(4월) 	○ 정상추진
	○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상시)	○ 유사수신 혐의업체 현장 조사 실시(3월, 6월)	○ 정상추진
	○ 불법대부광고업체, 카드깡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상시)	○ 불법고리사채, 유사수신 업체 등 불법사금융혐의 업체 212개 수사기관 통보	○ 정상추진
	○ 불법 혐의업체 제보 활성화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상시)	○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13회, 방송인터뷰를 통한 홍보 33회,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강의 등 20회 실시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층 자원 등 공익활동실적의 자율공시를 통해 은행의 공익 활동이 평판 및 장기수익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Workshop 개최 은행의 사회적책임 보고서 발간 실태 및 사회공헌 활동 현황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회원사토론회(06.6)를 거쳐 “은행공동사회공헌 활동추진계획” 확정 은행연합회 주도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등을 발간 추진('06.6)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 ▪ 휴먼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등을 통해 휴먼예금 및 보험금의 적극적 반환 등을 추진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별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중 시행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개발중 ○ 금융협회간 협약체결 (4월중) *3.29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임원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체결 준비 완료 	○ 정상추진
	○ 휴먼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위탁보고 심사	○ 업무위탁 보고 심사 및 유의사항 지도(3.16)	○ 정상추진
	○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행	○ 휴먼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개통(4.27)	○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윤리경영 모범규준’ 마련, 은행내 사회적 책임 전담조직 설치 등 금융회사 자체의 노력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연합회의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안)” 발표 유도('06.6) - 『은행 사회공헌활동 주간』 제정 - 사회공헌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은행 사회공헌상』 제정 등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			
▪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영업 기반 확충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확충 검토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그 후 관계부처(재경부 등)와 협의 예정	○ 정상추진
▪ 경영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경영진 면담, 경영개선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본 확충 등 자율적 경영개선을 유도	○ 경영상태 취약한 저축은행 선별 및 지도방안 마련	○ '06.12말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3.31) ○ 경영면담 실시 및 이행 계획서 징구 등 자체 정상화 유도	○ 정상추진
	○ 대주주 및 경영진과 1:1 면담 실시 ○ 자체 경영개선 이행계획 징구 또는 경영개선협약 체결	○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16개사 자본확충 유도 (약 1,300억원 증자확약) ○ 적기시정조치 부과 및 추가예상 저축은행에 대해 조치단계별 경영 정상화 유도	○ 정상추진
▪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및 부실저축은행 조기 정리	○ 경영정상화 추진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등 점검	○ 저축은행에 대한 BIS 비율 점검 및 경영실태평가 점검(2~3월중)	○ 정상추진
	○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 자체정상화 유도 및 적기시정조치 신속 추진	○ 플러스저축은행 인가취소(1월) ○ 단기간내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1개사, 2월)	○ 정상추진
	○ 영업정지 저축은행 및 예가람저축은행의 계약이전 등 처리 ○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 자체정상화 유도 및 적기시정조치 신속 추진	○ 인베스트저축은행을 피랑새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5.26) ○ 예가람저축은행을 고려저축은행·대한화선에 매각(5.26) ○ 단기간내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3개사, 4~6월)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			
▪ 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인수·합병(M&A) 활성화	○ 타 저축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완화 시행	○ 타 저축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완화*('05.12월 감독규정 개정) * 우량저축은행에 대해 타 저축은행 주식보유 한도 폐지 - 저축은행의 타 저축은행 인수건에 대한 면밀한 요건심사 진행중	○정상추진
	○ 우량저축은행 중심 인수·합병 사례 전파(상시)	○ 저축은행의 타저축은행 인수 완료 후 정착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모범 사례 발굴 추진	○정상추진
▪ 중앙회 및 단위 신협이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신협시스템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검토	○ 중앙회 자구노력 실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추진(상시)	○ 신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한 신협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06.4.5.) -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재정지원 관련 관계 기관 회의개최('06.3.22, '06.4.4) - 신협중앙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신협중앙회 정상화 방안 및 자구노력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06.6.7)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이전제도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하여 예금자 보호기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신협 합병, 자체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예보기금지원방안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한 자체예금자보호기금 지원방안 확정('0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병, 자체정상화 방안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객관적인 자금지원안 마련 이종신협간 합병인가 심사기준 개선방안 마련('06.6.16. 간담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신협간 합병시 공동 유대 적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신협의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은행거래 계약조건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 추진	○ 은행거래약관 인터넷 공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3/4분기) 추진중	○ 정상추진
▪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및 판매시 설명 의무 사항 확대	○ 변액유니버설보험 공시 강화방안 마련	○ 변액유니버설보험 특별 계정 투입원금 공개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	○ 정상추진
▪ 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	○ 업계 자율적으로 판매인력 등록제도의 시행 유도	○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펀드 판매인력 등록제도를 도입('06.4) * 판매인력 교육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판매인력관리위원회 규정에 반영 - 개별 판매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금융협회(증협,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등)에 펀드 판매인력을 등록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 신판매채널별 특성에 맞는 광고 및 모집 행위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모범기준 마련	○ 보험업계 공동작업반 운영	○ 감독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T/F팀 구성 (1월~2월)	○ 정상추진
	○ 보험상품 판매 모범기준 마련	○ 보험상품 판매광고, 보험상품 완전판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련된 모범기준 마련 및 협회 송부('06.3) -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 의무 부과 ○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협회 광고심의규정에 반영('06.5) - 면책사유, 담보범위 및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 등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 제3보험 표 준약관 제 정 및 불 합리한 약 관조항 지 속 정비	○작업반 구성	○작업반 운영을 통하여 약관초안 검토 중 -책임개시시점, 면부책 사유 표준화 등 논의	○정상추진
▪ 자동차보험 무과실(No- fault) 보상제도 도입 검토	○금감원·보험업계 T/F 구성	○금감원·보험업계 T/F 구성 (’06.2) - 금감원, 손보업계(개발원, 협 회, 보험사) 등 총 14개 기관, 15명으로 구성 ○해외 운영사례 조사(’06.3) - 미국, 캐나다 등 7개국 운영사례 조사	○정상추진
	○해 외 벤치마킹 실시	○해외 운영사례 검토중(’06.6) - 국가별 운영 특징 및 국내도입 가능성 등	○정상추진
▪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내규정비 서면점검	○‘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 규준’ 이행준비실태에 대한 서면점검 실시	○정상추진
	○‘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기준’ 시행 ○‘모범기준’ 도입실태 현장점검	○’06.4월부터 금융기관별로 「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 규준」 시행 ○’06.6월중 「신용정보관리 ·보호 모범규준」 이행실태 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금 용 사 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	○사고사례 등 수시 전파 (상시)	○사고사례 및 금융사관련 주요 정보사항 등 26건 등록·전파	○정상추진
▪ 고객정보 유 출에 대비한 ‘사고예방시스 템’ 개발	○‘사고예방시스템’ 개발방안 마련	○‘사고예방시스템’ 개발방안 마련(6월말)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금융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 청소년 금융 캠프 (일일 금융교실 형식으로 운영)	○ 중·고교 대상 금융캠프 ○ 퀴즈프로그램 일부 실시 (지상파 방송 등)	○ 겨울방학기간(2월)을 이용하여 지식교육 및 금융현장 체험교육 형태로 일일 금융교실 실시 * 인터넷 공모를 통한 신청자 접수	○ 정상추진
	○ 퀴즈프로그램 일부 실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문 등) (상시)	○ 지상파 방송(U1 Media)을 통한 퀴즈대회 개최 * '06.3.20부터 주5회 실시 ○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문 등을 통한 퀴즈대회 개최 (하반기 예정)	○ 정상추진
	○ 중·고교대상 금융캠프 (상시)		
▪ 청소년 금융 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 사례 공모	○ 프로그램 로드맵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 수립(3월) ○ 국민 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3월)	○ 정상추진
	○ 청소년 금융백일장	○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융백일장 개최(6월) - 심사 및 시상식(8월)	○ 정상추진
	○ 금융교육 우수사례공모	○ 교사·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 (6월) - 심사 및 시상식(8월)	○ 정상추진
▪ 금융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 2006년 20개교(151개 학급)로 확대 운영	○ '06년 20개교(151개 학급)로 확대 운영 - 초(5), 중(7), 고(8) 선정 * 금융교육 소외지역, 대안학교, 실업계·일반계 고교 등 적정 안배	○ 정상추진
	○ 연4회 이상의 학교방문교육 및 금융현장 체험교육 실시 (2~4분기)	○ 상반기 18개교, 40회 금융교육(방문교육 35회, 체험교육 5회)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금융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의 활성화			
• 언론매체를 활용한 금융 교육 캠페인 전개	○ 프로그램 로드맵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 수립(3월) ○ 국민 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3월)	○ 정상추진
•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및 계획 검토	○ 경제교육협의회와 학교 창의재량활동시간에 활용할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 재경부, 교육부 등 18개 정부·공공·민간기관 참여	○ 정상추진
	○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관련 연구용역 의뢰(2~3분기) ○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관련 인쇄(2~3분기)	○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 자료 집필용역 의뢰(6월) ○ '만화로 배우는 생활 금융'을 발간(10,000부)하여 금융회사, 소비자단체등에 배포(1월) ○ 유치원 교사용 '유아 금융교실'을 제작(5,000부)하여 교육청, 대학, 유치원에 배포(4월)	○ 정상추진
	○ 국회 입법화 추진 의원 등에 대한 금융교육관련 자료제공(상시)	○ 국회 「청소년사랑실천 의원포럼」 소속의원에게 입법지원 자료제공(4월) * 민주당 이승희 의원 ○ 학교, 금융회사, 사회단체 등 교육관련기관에 금융 교육 참고자료 제공(3월) * 금융이야기 시리즈, 멀티 미디어 콘텐츠, 만화 등	○ 정상추진
• 금융교육 전담조직 설립 검토	○ 국내외 금융교육 전담조직 현황 파악(서면, 인터넷)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료수집 중(하반기 추진)	○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 선진적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제도개 선코너 신설	○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해당코너 신설	○ 홈페이지에 제도개선코 너를 마련하여 운영 중 (전자민원창구에 제도개 선코너 안내 게시)	○ 정상추진
▪ 소비자보호 인증마크제 도 도입	○ 제도도입을 위한 작업반 구성 ○ 국내 인증제도 운영기관 의 사례 조사, 구체적 평 가지표 선정 등 ○ 소비자보호인증마크 제 도 도입방안 마련	○ 소비자보호 인증마크제 도 도입을 위한 작업반 구성(5월) ○ 소비자보호 인증마크제 도 도입방안 마련(6월)	○ 정상추진
▪ 민원자율조 정제도 확대 실시	○ 시범시행결과 분석 ○ 1차 확대실시(필요시 3개월 연장)	○ 시범실시 성과분석 및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 확대실시방안 마련(6월) * '06.7.1부터 시행	○ 정상추진
▪ 전자이첩시 스템 구축	○ '06.4월 시행 ○ 전자이첩시스템 활용도 증대를 위한 금융회사 민원담당자 교육	○ 전자이첩시스템을 시행 하고 금융회사 민원담당 부서에 동 시스템 활용 독려공문도 발송(6월)	○ 정상추진
▪ 명예 옴부즈 만 제도도입	○ 세부 추진계획 확정	○ 명예 옴부즈만 위촉대상, 임무 및 권한 등 도입방 안 마련(6월)	○ 정상추진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달성 비율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금융권 자산규모 증가율	-
		금융권 순이익 규모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감독제도 정비실적	5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 산업의 역할 강화	고령화 대비 상품판매 실적	100%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 정착 유도	RM제도 내실화를 위한 RM 정보마당 등록 건수	85%
금융시스템의 건 전성 및 안전성 제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BIS자기자본비율 (은행)	100% (06.3말 기준) - 일반은행 12.9%
		지급여력비율(보험)	100% (06.3말 기준) - 생보 229.9% - 손보 294.0%
		제도개선 실적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분기별 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금년중 조기경보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Stress Test모형의 개발 및 분석 실시 건수	100% (상반기 중 2건 달성)
		권역별 조기경보시스템 신규 구축 실적	금년중 조기경보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대 과 제 명	이 행 과 제	성 과 지 표	목 표 달 성 비 율
금융시스템의 건 전성 및 안전성 제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강화	조사처리율(불공정 거래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정도)	85.7%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	100% 규정개정1회 교육홍보실적 10회 달성
	금융시장 국제화 진전에 따른 감독제도 정비	외환거래 조사결과 조치 건수	48.0% (122건)
		감독제도 정비실적	100%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및 외화유동성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두바이 감독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상반기1건)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자본시장 역할 제고	기업공개 실적	75.9%
		선물 상장 상품수 증가 실적	200%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 정비	신용평가사의 평가 품질 감독강화 실적	-
		관련 인프라 정비 실적	50%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	공시위반비율	111%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95%
	회계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실시비율	49.6%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	· 4건제정(80%) · 149건회신(59%) · 12회 실시(60%)

대 과 제 명	이 행 과 제	성 과 지 표	목 표 달 성 비 율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54.4% (’06.3말 기준)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및 개선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 시스템의 대출안내 실적	19,752건 (53%)
		이용자 등 만족도 조사	-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 신탁)	저축은행 : 77% 신탁 : 92%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약관개선조치비율	17.1%
		불공정거래 관련 약관 심사 개선 실적	50%
	금융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의 활성화	금융교육 횟수	100%
		청소년 대상 금융지수	-
	선진적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국무조정실 민원인 만족도	-
		금융민원 증가율	-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실적	100%

3. 이행과제별 점검결과

1.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도모

1-1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마련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부문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 은행산업의 경우 비이자부문 수익확충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재의 성장성 및 수익성 호조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신용파생상품 참여, 자본시장 연계 대출상품 개발 등 신규수익원 발굴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IB :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 ☐ 증권산업의 경우 감독정책상의 지원방안 강구, 결제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지원 등 고부가가치의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추진

※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제도를 정비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보험산업의 경우 업무범위의 확대, 신판매채널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배양

- ※ 신판매 등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무범위를 확대
- ※ 고위험자산 및 외화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할 예정
- ※ 모집조직의 상품별 전문화 유도 등을 통해 신판매채널을 활성화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자산운용업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제고, 간접투자상품의 경쟁력과 접근성 증진,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신뢰 제고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허가, 운용업무 외부위탁 확대
- ※ 펀드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판매채널 확대
- ※ 펀드 거래비용 공시확대, 수탁회사의 펀드 감시기능 제고

【2】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의견수렴)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부가가치 제고 방안」에 관한 은행권 workshop(06.6.23) 개최
- 금융연구원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은행실무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 workshop(6.23) 개요

- 참 석 : 사원은행 종기부장, 금융연구원, 금감원
- 주요 토론사항
 - 선진국형 수익구조 정착 필요[예)이자수익비중 : 한국 87%, 미국 57%]
 - 판매중심의 영업문화 정착 및 수수료 수익 확대 필요
 - 비즈니스모델의 다각화 필요
 - 리스크관리 강화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 필요

- (통계 및 사례조사) ROA 및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선진국 은행과의 비교 분석

< 주요국 은행 경영지표 비교 >

(단위: %)

	한국('05년말)	미국('05년말)	영국('04년말)
ROA	1.3	2.0	1.4
BIS자기자본비율	13.0	12.7	12.4
무수익여신비율	1.0	0.8	1.6

- (영향분석) 신용파생상품 참여, 자본시장 연계 대출상품개발 등은 은행산업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 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가칭)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추이를 보아가며 은행권의 장기안정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수익원 다변화 추진 필요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의견수렴)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은행 등장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일관된 목소리를 꾸준히 모니터링
- 그간 유관된 연구소, 협회 등에서 IB육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선진투자은행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증권연구원, 04.11월), 우리나라의 투자은행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한국은행, 04.12월) 등

-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전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 등) 자격증 제도’ 개선필요에 대하여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06.1)

- 현재의 자격시험제도에 대하여 22개 증권회사 인사·연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증권업협회, 06. 1.24)

○ (통계 및 사례조사)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의 수익규모는 미국의 대형증권사에 비할 때 영세한 수준*이며, 수익구조**도 주식위탁거래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등 취약한 상황

* 국내 대형증권사는 미국 대형증권사 대비 총자산은 1%, 자기자본은 6% 수준

(단위 : 조원)

	총자산 평균	당기순익 평균	자본 평균
국내 3대 증권회사(FY'05)	7.5	0.3	1.9
미국 3대 증권회사(FY'04)	669.0	5.4	31.3

주) 한국(삼성, 우리, 대우), 미국(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 증권사 수익구조 분석(한국 FY05 상반기, 미국 FY04, 단위 : %)

- 한국 : 위탁매매 59, 자기매매 15, 기업금융 5, 펀드판매 11, 자산관리등 10
- 미국 : 위탁매매 16, 자기매매 12, 기업금융 48, 펀드판매 4, 자산관리 등 20

○ 증권업협회를 통해 ‘국내외 주요자격제도 현황’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실시(05.11)

- 해외 자격제도에 대하여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증권전문인력 자격제도에 대하여 현황 파악

- 국내 주요자격제도로는 은행권, 보험권, 자산운용·선물업권의 전문인력 자격제도에 대하여 현황 파악

- **(영향분석)**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증권 전문 인력 자격제도 개선 및 혁신적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증권회사의 내부 상품심사기능 강화는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환경,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의견수렴)** 금융겸업화·종합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업무계획에 반영**

※ 보험산업 혁신T/F구성(05년 이후) : 금감위(원) 국과장, 보험업계 사장단, 임원, 실무자 참여

※ 주요 토론사항

-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및 상품판매규제 완화 필요
- 보험사의 판매채널규제 개선 및 겸영·부수업무범위 확대 필요
- 리스크관리 강화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 필요

- 보험사 **외국환 및 파생상품 거래기준 정비**를 위하여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 외국환관련 작업반(05.6~10월), 파생상품관련 작업반(05.3~현재)

- 생·손보험회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요구사항**을 수렴(06.1~3월)

※ 주요 토론사항

- 보험사의 외화자산 및 파생상품 취급관련 규제 완화
- 보험사의 자회사 승인제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 보험사의 지급결제제도 도입 및 투자자문업·일임업 허용

- **(통계 및 사례조사)** 보험사의 지급결제제도 도입방안 검토를 위해 생·손보험회를 통해 해외의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취급과 관련한 사례 조사를 실시(06.5월)

*** 미국 및 캐나다의 비은행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현황**

구분	비은행금융기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대부조합 -정부저축은행 -여신기관(Credit union) -은행카드회사(bank card company) -우체국(U.S. postal service)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 **(영향분석)**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 유도는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 유도를 위해 여러 차례 재경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06.4월, 6월)를 개최

※ 주요 협의사항

- 보험업법 개정시 자산운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보험업법 개정시 자회사 승인제도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 보험업법 개정시 상품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등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의견수렴) 관련 실무작업반(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업계, 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의견수렴 주요내용

- 전문자산운용사 신규진입 수요 조사
 - 「자산운용사설립허가 및 퇴출기준 개선방안」 마련('05.10)시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수요를 조사
 -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 T/F('05.8~'06.1)
 - 자금수납형태, 전산시스템 등 직접판매 준비사항 지원,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 T/F('06.1~'06.4)
 -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기준 변경, 파생상품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개선 등
- (통계 및 사례조사) 세부과제 계획 수립시 관련통계, 해외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

※ 통계 및 사례조사 내용

-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허가 : 국내 자산운용사별 취급상품 현황, 외국의 전문자산운용사 사례 등
-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모든 펀드상품을 취급하는 방식(Full line-up)으로 전문화가 크게 미흡
- ** Vanguard의 경우 Index Fund, Pimco의 경우 채권형 펀드 운용에 특화
-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제도 시행, 펀드 취득권유인 제도 도입 : 해외의 펀드 판매채널 현황 등
- * 외국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독립펀드판매업자(독립 FP) 등으로 펀드 판매채널이 다변화(미국의 경우 직접판매 17%, 독립 FP 5%, 영국의 경우 직접판매 5%, 독립 FP 44%)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 : EU의 펀드 운용기준(UCITS Directive) 외국의 파생상품 운영규제 조사 등

○ **(영향분석)** 자산운용산업을 선도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는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재경부 등 관련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경제부총리) 하고 상시협의를 통해 금융허브 추진현황 등을 점검(05.10, 06.3, '06.6 3차례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 또한, 세부과제는 재경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경제정책조정회의, 06.6.17)」 마련시 재경부와 정책방향, 시행계획 등을 사전협의 하였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정책수단 분석)**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전문적인 연구결과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워크숍 개최를 추진
 - 아울러, 파생상품(예: 일반상품파생상품)·수수료 수입·PB 업무 등 업무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수업무지침”을 개정(06.3)
 - * 부수업무지침 개정(06.5) 주요 내용 : ①일반상품파생상품 취급 허용, ②유가증권 차입거래 허용
- **(부작용 등 대비)**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다변화 추진이 은행건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정책수단 분석)** 증권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현재의 주식 위탁매매 위주의 영업구조에서 탈피하여 투자은행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수적이며,
 - 이를 위한 장기적 정책수단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현행 법령의 틀 안에서 인허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자율규제기관의 전문자격증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
 - 선진 투자은행의 특징은 ①대형화, ②우수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③신뢰와 평판 강화, ④네트워크의 육성임을 고려할 때

- i) 증권회사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증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 ii) 신뢰와 평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 내부 상품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 iii) 수익기반이 다원화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 결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투자은행(IB)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
- **(부작용 등 대비)** 증권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기 자격증 소지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원활한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추진
- 증권회사 자체상품 법규심사 강화 유도는 증권회사 자발적인 개선노력 부족시 자칫 형식적·일시적으로 그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예정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정책수단 분석)**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 유도를 위해서는 겸영부수 업무범위의 확대, 자산운용규제 관련사항의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현재, 재경부와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용중에 있으며, 현행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에 협의내용의 동 내용 대부분이 반영

- 아울러, 보험사의 외화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던 외국환거래규정(재경부)의 관련 조항*이 폐지(06.5월)

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외화대출
취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하위법규 개정도 추진

- * 보험사의 경우, 외화수입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이 가능
(외국환거래규정 §2-12)

- **(부작용 등 대비)** 상기 제도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생손보 업계, 보험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추후
공식·비공식적인 의견청취 기회를 가질 계획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정책수단 분석)** 펀드 취득권유제도 도입, PEF 활성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투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
 - 전문자산운용사 설립허가는 설립허가시 특정 자산에만 운용
하는 운용사를 설립허가해 주는 방안으로 우선 시행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을 단축
 -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자산운용사의 설립요건(자본금, 운용
전문인력 등)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자산운용사 직접판매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기간**
및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의 직판시행 준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06.1) 감독
당국차원에서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 준비를 지원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방안, 펀드 취득권유인 제도도입 등은
업계가 **제도변화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06.5, '06.6)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펀드 거래비용 공시확대는 공시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정책수단으로 활용

* 자산운용사의 위탁매매 선정기준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가장 중요한 서류인 투자설명서에 공시

* 펀드 보수·수수료 비교시스템은 모든 공시자료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자산운용협회의 펀드 공시전용 웹사이트에 구축

○ (부작용 등 대비) 전문자산운용사 설립허용으로 운용사의 대거 신규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심사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 펀드 판매 시장의 경쟁구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직판 한도를 확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응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한도를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 펀드 취득권유인 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취득권유인도 판매인력과 동일하게 펀드 판매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판매회사가 펀드판매와 관련한 최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판매회사의 취득권유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부과

아울러, 취득권유인의 의무사항, 금지행위 등을 담은 표준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여 펀드 취득권유인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유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금융권 자산규모 증가율 (IMD국가경쟁력 평가항목관련)	5.3% 이상
금융권 순이익 규모	순이익 7.4조원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금융산업의 확대 및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필요
 - 따라서 적정수준의 자산규모 및 당기순이익 규모 추이가 순조로울 경우 확대 균형발전이 어느정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
 - *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는 금융산업의 자산규모 증가율 추이를 세부 지표로 사용
- (측정 가능성 등) 금융권의 자산규모 및 당기순이익은 객관적인 통계지표로서 측정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금융권 자산규모 증가율과 경영실적지표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하여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으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금융권 자산규모 증가율은 과거 3년 가중평균치 이상인 5.3%로 설정하였고, 금융권 순이익 규모도 과거 3년 가중평균치 이상인 7.4조원으로 목표치를 설정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금융권의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수치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05년부터 13.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권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에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착안
 - 은행권 스스로의 자율적인 수익구조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반기 중 워크샷 개최완료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증권회사의 자율적 인수·합병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화 허가(맥커리증권, 3월), 대형화를 위한 겸영인가(미래에셋증권 장외파생금융업, 3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증권회사의 결제시스템 효율화 추진은 참여방안을 확정하여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반영하였으며,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따른 신뢰성·안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 중

- 상반기중 총 80건의 약관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토록 권고
- 전문인력 자격증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된 개선방안 의뢰를 기실시(3월)하였으며, 증권업협회에서 개선방안(초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3/4분기중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 유도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방안 들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

< 추진일정 >

- 보험사의 외국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관련 규제완화, 자회사, 겸영부수업무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06.5월)
- 보험사의 외화대출 취급, 국내기업 발행 외화증권 등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인정 등의 외국환거래기준(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06.6.23)
-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겸영·부수업무범위 확대, 자회사 승인 제도 개선방안 등을 재경부 협의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06.6말)
- 신판매채널 전문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모집조직의 전문화를 유도
 - 현대해상의 자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에 온라인자동차보험업 허가(06.3월)
 - LG화재의 온라인자동차보험인 다음다이렉트보험(주)의 자회사 소유승인(06.3월)
 - TV홈쇼핑 등 신판매채널 특성에 맞는 “모범판매기준”을 마련(06.3월)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전문자산운용사 설립허가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06년 상반기중 3개 전문자산운용사를 설립허가 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 [증권전문] 한국밸류자산운용('06.4.14), [부동산전문] 다올부동산 자산운용('06.6.23), [SOC전문] 다비하나인프라자산운용('06.4.28 예비허가, 7월중 본허가 예정)

- 상반기 추진계획상의 모든 업무는 기한내에 완료하였음

- '06.9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취득권유인 제도 도입은 '06.5월에 제도를 도입하여 조기에 완료

과 제	시행계획	완료일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제도 시행	'06.1	'06.1
파생펀드 규제개선 방안 마련	'06.6	'06.5
자산운용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공시	'06.6	'06.5
펀드 보수·수수료 비교·열람 시스템 구축	'06.6	'06.6
PEF의 증권·선물·자산운용사 출자에 대한 심사요건 마련	'06.2	'06.2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은행산업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뿐 아니라 업계 스스로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자율적인 토론의 장 등을 마련하여 기존 감독인력의 제약 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도모

* 금융연구원의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 사원은행 중기부장의 토론을 통해 은행현장의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신임 은행 중기부장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업무방향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적시성 제고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증권회사, 증권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과제추진에 따른 인력 · 시간 · 비용 소요를 최소화
 - 증권업협회 회원서비스부장 등과 면담(06.3, 06.5. 2회) 및 협조사항 의뢰 등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보험사, 생손보험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관련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여 관련사항을 조사 · 분석함으로써 업무추진을 효율화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세부과제 시행과 관련하여 민관 합동 T/F* 구성 · 운영을 통해 업계 및 협회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정된 감독 인력에 따른 한계를 해소

* 자산운용사 펀드 직관시행 T/F,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개선 T/F, 펀드 취득권유인 감독관련 표준판매행위준칙 제정 T/F 등

- 펀드 보수 · 수수료 비교 · 열람 시스템 구축은 자산운용협회가 현재 운용중인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력 및 예산소요를 대폭 감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05년도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고의 호조를 보이는 등 최근 은행권 수익성은 안정 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 당기순이익 발생의 주된 요인이 일회성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은행권 성장을 위한 장기안정적 성장 모멘텀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등 다른 권역의 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은행산업도 지속적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해 나갈 필요
 - 이와 같은 과제 추진의 여건 등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투자은행화 기반조성에 대한 필요성(원론)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부 추진방안(각론)에 대한 여건 변화에는 적극 대응할 예정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에서 제기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과 상황변화 등을 적극 수렴하고 대응
 - 증권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은 증권업협회를 통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 증권회사 자체상품 법규심사 강화는 약관심사시 해당 증권회사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음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최근 금융겸업화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시장의 공감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 각종 간담회, 회의를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후 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허가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세부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

- 증권, 부동산 등 전문자산운용사 설립허가 심사시 재간접펀드(FOF)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도 전문자산운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06.1)

*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등 전문분야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운용의 경우에는 전문자산운용사의 업무로 허용

* (예) 부동산전문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부동산재간접 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

- 부동산 전문자산운용사 설립시 일반운용전문인력을 5인 채용하는 요건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요청이 제기('06.4)되어

* 일반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경우 일반운용 전문인력 5인,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인을 갖춰야 함

일반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만을 설정·운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2인으로 완화

* 일반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펀드만을 설정·운용하는 경우 일반 운용전문인력 2인,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인을 갖춰야 함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시에도 시장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한도(펀드 자산의 20%)를 설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ELS펀드 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ELS펀드의 상품성이 악화된다는 우려를 제기('05.4)

* T/F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시 자산운용업계에서 제기

거래한도는 두되, 구체적인 거래한도는 장외파생상품시장 여건,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후 추진키로 하는 방향으로 발표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감독당국 및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사원은행 등 은행산업 관련 종사자간 공감대에 기초하여 공동 워크숍 개최(06.6)
- 은행권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재경부와 적극 협조하여 금년 초 「부수업무지침」 개정(06.3), 파생업무 등을 추가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재경부 등 정부기관, 협회 등 유관기관, 증권회사와 사전협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
- 증권업협회 부장 등과 면담(06.3, 5. 2회) 및 협조사항 의뢰 등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보험업법 개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간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동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그간 우리위원회가 내부보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시했던 각종 제도개선방안(자산운용규제, 상품개발, 겸영·부수업무 범위확대 등)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재정부 등 금융허브정책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관 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추진중

* (참고자료) 금융허브추진체계 개요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사전협의후 합동간담회에 보고후 발표
- 자산운용협회의 펀드 보수·수수료 비교·열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05.12.12에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바 있으며
- 同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

【금융허브 추진체계 개요】

◆ 금융허브 구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 체계를 구성(6.3 금융허브회의 대통령님 지시사항)

□ 금융허브정책의 총괄·조정 및 금융허브회의 보좌 등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전체위원회)를 구성

- 위원 : 금융허브정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약 30명)
- 기능 : 금융허브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전체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산하에 분야별(6개) 분과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위원장 : 재경부 차관보)

- 위원 :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의 실무급 책임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 기능 :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

○ 분야별(6개) 분과위원회(위원장 : 민간인)

- 위원은 학계·연구기관·업계의 전문가 및 재경부·금감위 등 정부측 위원(과장급)으로 구성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금융권 자산규모 증가율 (IMD국가경쟁력 평가항목관련)	5.3% 이상	-	'05.3 : 255조원 '06.3 : 289조원 (13.2% 증가)
금융권 순이익 규모	순이익 7.4조원 이상	-	FY04 : 3.25조원 FY05 : 3.30조원

- 금융권의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규모가 목표치에 비해 크게 증가(총자산 : 13.2% 증가, 당기순이익 ○○조원)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은행산업의 장기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은행권 공동 워크숍 개최(06.6)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 등 장기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기반조성】

-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자본금 증액(158억원 → 500억원)등에 의한 법인화 과정을 통해 국내 투자자금 확대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였고
- 겸영업무에 대한 인가로 수익기반을 다각화
- 증권업협회가 주도하여 전문인력 자격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에 대비하여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화 노력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신상품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증권회사의 ELS 영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06.2월) 및 증권회사 자체상품 법규심사 강화를 위한 약관의 개선 지도로
- 신상품과 관련된 투자자보호 기능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 업무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 송부(06.5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외화대출 및 해외부동산 취급을 허용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국내기업 발행 외화증권 등에 대해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외국환거래 관련규제를 개선(06.6월)
-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겸영허용 여부 및 지급결제기능 부여방안 등을 검토
- 신판매채널 전문자회사 설립 등 모집조직 전문화를 위해 현대해상, LG화재에 온라인 자동차전문 자회사 영위를 허용(06.3)
- TV홈쇼핑 등 신판매채널 특성에 부합하는 표준 판매스크립트 등을 생보협회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유도(06.3)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전문자산운용사 설립을 허가하여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SOC 등 차별화된 분야에서 고객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을 제고
-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 판매제도 시행, 펀드 취득권유인 제도 도입으로 펀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
- 펀드의 파생상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으로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하며,

자산운용의 리스크 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
- 자산운용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을 공시하고,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 인프라를 개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역량을 높여 투자자의 이해와 신뢰에 바탕한 간접투자 확대를 유도
- PEF가 은행과 더불어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데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PEF 활성화를 유도하고, PEF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의 발전지원】

- 보험사에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

※ 하반기중 보험개발원 용역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자산관리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자산운용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06.1월부터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가 시행되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가 미흡한 수준으로**, 펀드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간투법 개정사항)

- ① 직판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보수 · 수수료 수취를 허용**하고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시 전산시스템 구축, 판매인력 채용, 계좌관리 및 각종 보고서 발송 등에 비용이 발생하나, 현행 간투법은 판매보수 · 수수료 취득을 금지

- ② 고객자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납입후 펀드 설정시까지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 근거를 마련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외국계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비한 감독기준마련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과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연결감독 및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추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① 외국계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비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

*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의중

- ②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연결감독 및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추진

* 복합금융그룹 : 금융지주회사, 母-子형태 금융그룹, 동일계열내 금융그룹
-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여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시스템 미비

【금융 겸업화 진전에 수반되는 감독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

- ③ 유사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권역별 규제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행위 규제수준의 적정화 추진
- ④ 겸영확대에 따른 고객 또는 사업부문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정보차단벽(Chinese-wall) 구축 강화
- 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⑥ 통합법 제정을 통해 증권·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종간 업무영역 및 상품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⑦ 보험사에 대한 모기지보험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 및 자회사 영위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의견수렴) 감독제도의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독제도 변경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

* 지주회사 임원 오찬 모임(06.1.18)

- 지주회사 감독제도 변경의 필요성 설명, 자율규제시스템 구축 관련 논의

** 찾아가는 금융감독 정책홍보 개최(06.3.3)

- 업계 사장단 등을 초청하여 복합금융그룹 연결감독제도 마련의 필요성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

※ 의견수렴 결과

- 업계는 대형화·겸업화 등의 급변하는 세계금융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임을 공감
- 다만, 감독제도 합리화시 외국금융회사와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영업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
→ 합리화가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검토 중임을 설명

- (통계 및 사례조사) 금융지주회사 경영지배구조 및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05.9)

※ 분석결과

- 동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의 겸업화·대형화의 방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고 있으나,
- 금융지주회사그룹 외에 모·자회사그룹, 계열금융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책목표로 선정

- 유럽 및 일본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및 경영실태평가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 세계 25대 은행그룹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06.5)

* 세계 25대 은행그룹(16개 지주회사방식그룹, 9개 비지주회사그룹)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방식의 금융그룹의 경영성과가 양호

- (영향분석) 현황분석, 해외사례조사, 금융권역별 차별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였으나, 성차별 관련 영향분석은 동 과제가 법인의 영업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으로 해당사항 없음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향후 예정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규제개혁기획단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등 관련정책과의 중복여부, 관련정책의 정책방향 반영 등을 위한 담당자간 업무협의 및 공청회 등 회의 참석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관련 재경부 주관 T/F 참여(년중)

**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참석(06.5)

*** 규제개혁기획단의 금융감독 관련 규제개혁 논의(06.6)

【금융 겸업화 진전에 수반되는 감독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

- 최근 금융산업 추세 및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단독 금융회사 간 업무 차별여부 등을 파악*

* 경영·부수업무로 추가해야 할 업무, 자회사 소유가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하여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절차 진행중

⇒ 동 업무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금융권역간 현황 파악 및 정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회사의 경영·부수업무 범위와 자회사 영위에 관하여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

* 자산운용규제 완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허용, 지급결제제도 도입 등 요구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정책수단 분석)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는 세계적 추세인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법령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정책수단 활용이 필요

- 다만, 현단계에서는 제도합리화 검토단계로서 연구용역 등의 정책수단을 통한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하여 합리화 방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력

- 한편, 감독규정 정비 및 제정 외의 감독당국이 추진할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동 정책 수단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은 해외사례조사, 현황분석(금융지주회사 경영성과 분석) 등으로 대체
- **(부작용 등 대비)** 검토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 등 사전 협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음

【금융 겸업화 진전에 수반되는 감독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

-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이라는 대과제 달성을 위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한 금융권역별 규제수준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
- 금융회사의 건의사항, 자체규제개혁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입, 업무영역, 자산운용, 판매채널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금융권역별 규제수준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금융 겸업화 진전에 수반되는 감독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법 제정을 통한 상품관련 포괄주의 도입 및 금융 투자회사의 대형화·겸업화가 가장 효과적임이 입증
-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라는 정책목표도 보험업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겸영·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달성 가능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감독제도 정비실적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등
보험회사 경영·부수업무 등 관련 제도 개선 실적	보험관련 법규 개정 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투명한 감독제도의 정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여부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성과목표의 객관성, 측정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
- (측정 가능성 등)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가 정책목표이므로 감독규정의 합리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 여부를 채택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복합금융그룹의 감독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사례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감독규정개정(안)은 감독규정개정 차제가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하고 규제완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이 긴요하므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적절

- 겸영확대에 따른 증권회사와 고객, 증권회사 사업부문간 부당한 정보흐름 개연성 증가에 대비한 방지방안(Chinese - wall) 마련도 겸영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고객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정책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적절
- 감독규정개정 및 자본시장관련법 통합, 부작용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여부 등은 달성도 측정이 금융산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및 방안 마련 여부가 단기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 판단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영위업종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여부는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절한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목표치의 합리성) 동 정책수단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과거 실적의 비교보다는 규정개정, 방안마련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감독제도의 정비는 개선방안 검토, 규정개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중간단계 평가가 가능하고,
- (검증방법의 적정성) 최종 성과목표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지표이므로 검증 가능함

【금융 겸업화 진전에 수반되는 감독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

- 금융업종간 금융상품 규제차이 해소 및 규제완화는 통합법 제정 이후 신규진입하는 회사 및 금융상품의 다양성정도 등을 통해 검증 가능

【겸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종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제도개선 실적에 의한 성과측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일정계획에 따라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 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적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 방안마련(06.1)

- 기존의 필요자본 개념에서 신BIS 도입 등에 대비하여 BIS 자기자본 개념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6.2)

- 발주처(금융연구원), 다양한 형태의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연구
- 기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설립을 위한 감독규정 마련,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등의 과제는 관계부처(재정부 등)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준비 중

【점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업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마련(06.3)

- 장외 파생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겸영·부수업무 활성화,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보험사 지급결제제도 도입방안 검토(06.6)

- 대표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결제 허용 등

- 외화 대출·부동산거래, 신용연계예금 허용 등은 06.6.23 금감위에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에 대한 외부연구용역을 위하여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선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검토 추진

* 은행지주회사 자본적정성 규제 개선(06.1),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 확대(06.2),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06.5),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06.3/4) 과제 등

-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투입 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

- 연구용역 완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

【검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생·손보업계 T/F를 구성하여 기본방안을 마련(06.3)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금융지주회사그룹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국제적 감독기준의 변경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 자본적정성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Joint Forum*과 BIS의 권고 내용을 참고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 및 보험감독자협의회간 포럼

-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경우 미국 FRB의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시행내용 등을 참고하여 국제적 정합성 고려

- 다만,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세, 국내 금융산업 환경등을 예의주시하여 급속한 변경 등의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검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여건·상황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 복합금융감독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과 관련이 있어 금융감독당국내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체계 구축
 - 한편, 감독제도의 합리화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과 사전 자료교환 및 의견교환 체제 구축
- 기타 금년중 예정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규제개혁기획단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추진 등 관련 정책중 반영이 필요한 정책요소 등을 정책수단 수행시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 상황을 공청회 참석 등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검입화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분야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안 검토에 있어 재경부·금감원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겸영·부수업무 범위 및 자회사 영위업무 확대안 마련에 있어서도 업계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감원과 연계하여 사전 영향 분석 등 실시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감독제도 정비실적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등	50%	최종 목표인 금융 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등 규정개정을 위 한 사전단계를 완 료하거나 검토중 (분기별 달성과제 완료)
보험회사 경영·부수 업무 등 관련 제도 개선 실적	보험관련 법규 개정 등	50%	감독규정 개정을 통 해 일부 사항 완료 하였으며, 법령개정 사항 및 추가검토 필요사항은 검토중 (분기별 달성과제 완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금융지주회사그룹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자본적정성규제 개선 등 통한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 금융의 그룹화에 따른 그룹리스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 정책 홍보와 협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 관련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업계 의견 반영 충실

-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을 도출하였으며

-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 관련 규제완화 부분적 실현

- 겸영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정비방안 마련을 지속 추진하여 사업 부문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차단벽 구축 강화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기준 마련 등의 이행 과제는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 필요
- 보험회사의 겸영 · 부수업무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필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급증에 대비하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

* 민영의료보험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치료비를 다수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써 ① 서민·중산층 치료비보장수요 확보, ② 공보험의 재정부담 완화, ③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및 국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활성화가 요청

○ 장기 간병보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은퇴준비충을 겨냥한 자산관리형상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촉진

* 전통적인 보험에 은퇴준비충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Wealth Management)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유도

○ 자녀 출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금 및 보험상품 등 출산장려형 금융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출산장려형 상품 : 자녀출산시 보너스 금리를 적용하거나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적립금 운용, 정보제공 등에 적용할 업무처리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기준 : (첨부) 참조

- 감독규정 해설서 마련, 퇴직연금 안내사이트 보장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강화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의견수렴) 국내현황,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고 보험연구기관의 연구 등을 토대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 주요실적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임원 브리핑 및 보도자료(06.1.19)
- 제5회 아시아 건강보험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06.4.25)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관련 업계 간담회(06.5.15, 5.26 등)

- (통계 및 사례조사)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질병관련 통계공유 및 보험금 누수요인 분석과 같은 보험사기방지방안 강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 및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예방효과 분석 연구용역 실시 (05.12, 보험개발원)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사전협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방문설명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재경부, 보건복지부와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명회 개최('06.1월) 및 보험금 누수방지 대책 등에 대해 재경부·복지부와 협의 진행('06.3월~6월간 5차례, 과천 청사)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의견수렴) 퇴직연금제도 전국 설명회('05.11월), 제도 개선 간담회('06.1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 주요실적

- 퇴직연금제도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05.11.9~11.25)
 - 서울, 인천, 춘천, 대구, 창원 등 9개도시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
- 퇴직연금 제도개선 간담회('06.1.12)
 - 제도 도입 초기 업무혼선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필요성 제기
- 업계,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퇴직연금 모범규준 제정 계획 마련('06.1월)

* 은행 2, 생보 2, 손보 2, 증권 2, 자산운용 1,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코스콤

- (통계 및 사례조사) 다른 금융권역에서 제정·시행중인 모범규준 사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 조사('06.1월)

※ 금융감독관련 모범규준

- (공통) 파생결합 금융상품관련 감독 및 업무처리 기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 (증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온라인펀드판매절차에 관한 모범규준 등
- (보험)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업무 모범규준 등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정책수단 분석)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생보사에 대해서 실손 보상 의료보험의 판매를 허용('05.9월)하였으며 의료법 등 다른 법률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 진행하는 등 법령 등 제도적 지원을 정책수단으로 활용
 - 아울러, 생보사의 민영의료보험 상품개발시 계약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상품설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도하여 제도적 지원을 보완
- (부작용 등 대비) 의료기관과 계약자가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정책수단 분석)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금융기관이 44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도 예금, 수익증권, 보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
 - 금융권역별 업무방식 차이로 인해 도입초기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와 가입 근로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에 적용할 통일된 세부기준 마련과 홍보강화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초기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 (부작용 등 대비) 모범규준을 마련한 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시 제도를 보완·개선할 계획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고령화 대비 상품판매 실적	4.0% 이상 판매 증가율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민영의료보험 상품판매량 등은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 각자의 준비정도 및 금융부문에서의 성과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정책목표와 인과관계를 형성
 -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 목표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제3보험(민영의료보험 포함) 및 퇴직연금의 판매실적을 지표로써 설정
- (객관적 측정가능성) 제3보험 수입보험료 등은 보험사가 감독기관에 매월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서 추출 가능한 자료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치로 인식
- (측정의 적합성) 과거 3년치 수입보험료 증가율의 평균이상을 목표치(4%)로 설정하여 적정한 목표로 여겨지며, 달성정도를 목표치에 비례*하여 측정이 가능

* (예) 실적치가 2%일 경우, 목표대비 50%(= 2% / 4%) 달성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과거 3년 평균* 수입보험료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설정근거의 명확성)** 과거 일부 사업연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다소 유동적이었으나 이는 특정상품(C.I.보험) 판매급증에 주로 기인한 이유이며 금년도(FY06) 목표는 생보사 개인민영의료보험의 판매를 가정하여 다소 높게 설정

* 목표치 4%(FY06) : $\Delta 0.9\%$ (FY03), 12.4%(FY04), 0.4%(FY05) 평균

- **(검증방법의 적정성)** 보험회사 업무보고서는 보험사로부터 매월 제출받아 금감원 홈페이지 및 통합재무정보(금감원 내부 통계관리 시스템)에 제공되므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월말 기준으로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어 객관적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분기별 업무완료 여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당초 일정에 따라 추진중이며, 건보공단의 통계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정확한 효율산출이 가능할 전망

* 06.3월 금감위·금감원, 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및 보험개발원 등 연구기관으로 작업반 구성(상반기중 재경부·복지부 등과 협의 진행계획 달성)

- 금년도말까지 관련 상품표준화, 중복보험 비례보상방법 통일 및 조회시스템 확충 등의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 주요 이행 사항

- 건보공단의 질병관련 통계자료 입수
 - 복지부, 건보공단과 협의하여 통계제공 원칙 합의(06.3월)
 - 세부 통계산출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통계자료 형식(Layout)을 건보공단에 제시(06.4월)
 - * 자료형식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간 협의 진행중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작업반 진행경과
 -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등을 위해 감독당국·업계간 작업반 구성·진행(06.3~12월)
 - * 이후 수차례 회의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등과 협의중
 - 중복보험 가입시 생·손보 상품간의 비례보상방법 통일을 위한 방안 마련중(06.5월~)
 - * 생보는 협회의 중복보험확인시스템을 대폭 확충작업중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세부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 사이트 보강 등 제도를 위한 홍보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중임

※ 주요 이행 사항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계획 수립('06.1)
 -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06.1)
 - 모범규준 제정 추진현황 발표('06.3)
 - 운용관리계약 약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자체점검('06.4)
 -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실태 점검(5.15-6.9)
 - 업무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작성(6.30)
 - 모범규준 대상업무*를 선정하여 검토중
 - * 적립금운용, 가입자 교육, 연금계리 및 세제, 시스템 표준화
- 퇴직연금제도 홍보강화
 - 금감원 홈페이지에 기 설치('05.12월)된 퇴직연금 안내코너에 FAQ메뉴 신설('06.2)
 - 과세제도 설명메뉴 신설('06.4)
 - 퇴직연금감독규정 해설서 마련('06.6.30)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 (예산·인력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06.3월 금감위·금감원·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및 보험개발원 등 연구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한정된 감독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경주
- 퇴직연금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상황변화에 적시대응 여부1)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대비를 위해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에도 유효

- 다만, 세부적으로 금융관계부처와 협의중 도출된 문제해결 등을 위해 보다 자세한 연구를 생·손보 협회를 통해 대학* 등에 연구를 의뢰(06.5월)

* 경희대(의료산업연구원) 및 성균관대 교수 등(06.7월중 연구상황에 대한 중간발표 예정)

- 국내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산장려형 상품 개발 노력을 지속토록 독려

* 사례 : A보험사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성인형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녀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 (06.5월부터 판매)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 국내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 감독 등을 위해 외국 연금 감독기구간 협력을 보다 증진할 필요가 있어 IOPS*에 가입('06.3월)

* IOPS는 연금감독자간의 비공식 네트워크인 INPRS가 공식적인 국제 연금 감독자 기구로 확대 발전한 것으로 연금감독 전반을 다루는 국제기구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관련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 복지부와 5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조율을 실시

- *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과 민영의료보험활성화 T/F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

- 아울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미리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사기방지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

- * 재경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1급 회의를 개최(06.6.8)하여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부처의견을 수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다양한 금융권역*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실무 작업반 운영시 모든 권역의 업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 * 은행 2, 생보 2, 손보 2, 증권 2, 자산운용 1,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코스콤

- 관련부처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관련부처인 노동부·재경부 실무자 등과 정례업무협의기구 설치 협의중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고령화 대비 상품판매 실적	4.0% 이상 판매 증가율	-	-

* 보험회사의 1/4분기(4~6월) 업무보고서는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판매실적 등 통계수치는 06.8월중에 산출 가능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출산장려형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관련 상품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

* 동부화재의 출산장려형상품은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동생이 태어난 경우 이후 납입할 보험료의 2% 할인

-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민영의료보험의 요율산출을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 관련 통계를 공유토록 하여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노력

* 재경부, 복지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등

- 생·손보사간 중복보험 가입확인 및 비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보협회의 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 중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점검하여 퇴직연금업무 개선방안을 마련('06.6월)

※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계약건수 및 적립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일부 공기업 등의 제도도입이 예상되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모범규준 제정시 업계중심의 업무편의적 경향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업계 및 권역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 활동을 적극 독려할 필요

(첨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작업반 운영방안

1. 추진배경

☐ 고령화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

⇒ 가시적 성과 도출 및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하여 생·손보사, 협회, 보험개발원 등 업계와 공동으로 작업반 구성

2. 추진계획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괄반 및 실무작업반으로 구성·운영

○ 총괄반 : 실무작업반의 검토(안)을 토대로 정책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확정

○ 실무작업반

구 분		추진과제
상품·제도 작업반	상품실무 작업반	- 생·손보 민영의료보험 상품표준화 - 상품리스크관리 방안 - 세제혜택 부여방안 추진 등
	제도실무 작업반	-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의료기관과의 의료비정산제도 연구
프로세스 작업반	중복보험 실무 작업반	- 중복보험비례보상방법의 표준화 - 생손보 실시간 중복보험조회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유 실무 작업반	- 국민건강보험 등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 보험사간 계약자 정보교환 체계 구축 등

☐ 운영기간 : 06.3월~12월

* 개별 실무작업반은 월2회, 총괄반은 월1회 검토 및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첨부)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기준

1. 추진배경

- 현행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있어 금융권역간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상 혼선을 최대한 줄여주는 한편, 가입자에게는 운용관리서비스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추진현황

-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5.15-6.9)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06.6월)
 -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범기준에 포함될 대상항목*을 선정('06.6월)하여 현재 T/F팀을 통하여 검토중

<모범기준의 대상항목(안)>

-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관련 정보 제공, 운용지시 이행 등
- 가입자 교육 : 퇴직연금사업자가 위탁받은 교육 등에 대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
- 연금계리 및 연금세제 : 원천징수, 신고 등에 대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 시스템 표준화 : 퇴직연금사업자간 자료 송수신시 전산양식 등의 표준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산업의 겸업화·국제화 등 감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① 개별거래에 대한 사후규제적 검사 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별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
- ② 리스크관리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정비하고 ‘금융감독정보 통합(portal)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① 상시 접촉창구 유지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RM 상시감시 수단 및 방법 개발
 - ※ 과거에는 상시감시담당자, 현장검사 담당자가 분리되어 검사절차가 운영된 반면, RM제도하에서는 RM이 소관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검사계획수립, 현장검사 실시, 검사결과 조치 등 검사업무 전체를 주관

⇒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와의 연계성이 제고

- ② 기관별 전담 외에 경영실태평가 항목별, 영업활동별 담당제를 병행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보완

※ RM은 담당 금융회사와의 의사소통창구로서 담당 금융회사의 경영현황 및 취약점 등을 상시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주치의”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③ RM의 검사방법 및 자세 등에 대한 내외부 평가 결과를 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상시감시에 대한 신뢰 확보

※ RM은 금융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RM업무처리시 Best Practice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내·외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① 상시감시 결과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해 서면 및 부문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검부담이 큰 종합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

※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주로 본점)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연간 검사계획에 의거 검사대상기관을 미리 선정

※ 부문검사는 주로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② 사전 요구자료의 중복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사부문·비슷한 시기의 현장검사는 사전에 통합 조정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의견수렴) '05.8월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정보 통합(portal)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수차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 수행

<감독정보포탈시스템 개발 관련 의견수렴>

- 부서별 담당자 지정 요청(2005.8.3)
- 부서별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2005.8.26, 10.17)
- 지식경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2005.8.29~9.15)
- 지식지도 관련 의견요청(2005.10.14)
- 전자문서 통합검색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2006.3.6)
- 시스템 시험가동 및 의견 수렴(2006.4.24~6.9)

- (통계 및 사례조사) 금융감독정보 통합 시스템은 금융감독당국 특유의 시스템이고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코자 하는 내부 요구에 의해 구축된 만큼 타부처나 타기관의 사례를 조사할 실익이 적어 통계 및 사례조사는 생략
- (영향분석) 사전예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는 금융산업의 겸업화·국제화 등에 대비 검사업무의 효율성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금융감독정보 통합 시스템의 가장 큰 이용자는 직접 현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RM이 될 수 밖에 없어 **RM 제도 내실화와 연계하여** 구축작업을 진행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

* 06.1월 개최된 RM팀장 워크샵, 06.2월 실시된 RM 실태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을 통합 시스템 구축(06.6월 구축완료)에 활용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의견수렴) 05년 도입된 RM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년초부터 **RM워크샵과 자체 실태조사**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를 실시

<RM팀장 워크샵(06.1) 주요 토의 내용>

- 검사국과 검사지원국의 업무운영방향
- 리스크 상시평가체제(RADARS, RAAS 등)의 운영방향
-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방안
- RM의 효율적 감시방안

※ 실태(설문)조사

‘05.2월 RM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

- 설문 대상 : 검사국 기획팀장, RM 팀장, 검사역 → 총 285명 응답
- 설문 내용 : RM제도 만족도, 운영성과,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
- 설문방법 : 총 21개 설문 항목에 대해 1개~3개 답변 선택 또는 자유 설문

- (통계 및 사례조사) 금융연구원 등에 외부용역을 시행하여 리스크중심 금융감독시스템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

- 미국, 캐나다, 영국의 금융감독 프로세스 검토 및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주요국의 금융감독프로세스와 우리나라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 책자를 2005.1월에 발간

- (영향분석) 상기 의견수렴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워크샵과 설문조사(실태조사) 등을 통한 분석 결과, 환경, 갈
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RM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각 권역별 실정에 맞는 리스크평가제도(은행 RADARS,
보험 RAAS 등)를 구축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

- * RADARS : 은행의 영업활동을 세분하고, 부문별 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검사를 집중하는 리스크중심 상시감시
체제
- * RAAS :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에 대한 관리·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원을 배분하는
등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는 감독방식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의견수렴) RM제도 내실화와 마찬가지로 RM팀장 워크샵
(06.1)을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

- * ①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검사 차별화
- ② 수검회사 편의를 위한 현장검사 idea 채택·실시
- ③ 초임검사역에 대한 사전연수 강화

- (통계 및 사례조사) 계획 수립에 앞서 『검사자료요청 및 제출현황표』를 작성케 하여 검사자료의 중복여부를 체크하는 등 사전 조사
- (영향분석)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경감은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 정착 유도를 위한 것으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검사계획을 RM 상호간 서로 협의·조정하는 등 RM제도 내실화와 발맞추어 추진함으로써 연계 강화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정책수단 분석)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06.6)을 통한 전산적 인프라 지원, 검사매뉴얼의 보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리스크관리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여건을 구비

* 종전 서술식 점검내용을 체크리스트화하고, 점검항목을 세분화

- (부작용등 대비) 리스크 중심의 감독이 감독·검사 역량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큰 부문에 집중하는 만큼, RM으로 하여금 상시접촉 창구 유지 등 상시 감시도 강화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정책수단 분석) RM워크샵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권역별 상시감시 수단의 개발,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고 컨설팅 중심의 검사*도 강화

* 06년중 8개 금융회사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중 ING생명, SHNC생명보험, 산업은행, 대구방촌신협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해 컨설팅 실시

- **(부작용등 대비)** 컨설팅제도는 시행초기이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①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일정기간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 면제
 ②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정책수단 분석)**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경감
- **(부작용등 대비)** 상시감시 강화 등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으로 인해 수검기관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검사 시기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고 수검직원의 '면담예약제' 실시하는 등 방안 강구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RM제도 내실화를 위한 RM 정보마당 등록 건수	330건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리스크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 마련 측면과 감독·검사정보의 축적·공유를 위한 검사업무의 지식경영화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설정
 - ※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자료요구 등 수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검사역간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감시체계가 구축이 긴요
 - ※ RM 정보마당, 검사지식마당은 검사직원간의 정보공유를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자료요구 등 수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검사역간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감시체계가 구축이 긴요
- (측정 가능성 등) 성과목표를 RM정보마당의 정보 등록건수로 하여 측정의 객관성 및 용이성을 확보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RM제도의 정착 등을 위해서는 전담검사역간 효율적인 정보공유가 그 핵심인 바, 동 과제 추진의 달성정도 측정에 정보마당 등록건수는 매우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RM 1인당 등록건수 추이, 전년대비 증감율, 목표 대비 실적 등 관련통계를 통하여 목표치의 합리성 확보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검증방법의 적정성) 관련통계의 변화 추이, 검사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목표치인 연간 330건 이상은 설정근거의 명확성, 검증가능성 등을 확보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금년에 은행부문의 RADARS를 시행하고 보험부문은 RAAS를 시범실시하는 등 당초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도 상반기중 구축 완료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RM 워크샵(1월), RM 실태조사(2월) 실시 등 당초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RM제도 정착을 통한 검사업무 효율화, 중점 검사사항을 반영한 검사 사전요구자료 작성, 현장검사시 수요자 중심의 검사 실시 등 당초 일정에 맞추어 추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검사국 인력의 RM중심 개편, 검사매뉴얼의 개편, 금융감독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등 한정된 검사 자원(예산,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건 구비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제도 내실화를 위해 외부용역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또한 내부 워크샵,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실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 소요를 단축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한정된 검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RM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인력 소모 최소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리스크중심의 검사업무 정착을 위해 검사업무 행태를 혁신하고 검사 매뉴얼을 체크리스트 위주로 개편·공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주의로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1/4분기 검사매뉴얼 수정완료(22개 단위 업무)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자체 검사모니터링, RM 토론회 등을 통해 RM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하여 여건변화 및 수요자의 피드백 등에 적시 대응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여건이나 상황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미미하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적기 대응할 계획임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권역별 실정에 맞는 리스크평가제도(은행 RADARS*, 보험 RAAS** 등)를 구축하는 등 관련정책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음
- * 은행의 영업활동을 세분하고, 부문별 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검사를 집중하는 리스크중심 상시감시 체제
- **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에 대한 관리·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원을 배분하는 등 감독·검사업무에 활용하는 감독방식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RM제도 내실화는 감독당국 내부 사항으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은 불필요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검사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금융기관 경영컨설팅 제도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RM제도 내실화를 위한 RM 정보마당 등록 건수	330건 이상	100%	06.6월 현재 연간 목표치에 근접하 는 279건 등록

* 06년 6월 16일 현재 279건 등록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은행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RADARS)의 세부 시행방안(06.1월)을 토대로 10개 은행에 대한 RADARS 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 업무를 강화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RM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RM팀장 Workshop(06.1월)을 실시하고, RM업무 만족도, 성과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06.2월)하여 향후 보완방안 등을 모색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RM제도 정착을 통해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중점 검사사항을 반영한 검사 사전요구자료 작성하며 현장검사시 수요자 중심의 검사 실시*

- * ① 「검사자료요청 및 제출현황표」 작성 → 검사자료 중복여부 체크
② 수검직원 ‘면담예약제’ 실시 → 수검회사 업무공백 최소화
③ 금융회사에서 자료중복 요구 인지시 검사반장에게 통보 등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사전에방적 리스크중심의 검사 강화】

-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cost-benefit 분석을 통해 적절한 평가수준 결정 필요
- 여건에 비해 복잡한 제도만 앞질러 도입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비계량평가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역의 전문성 제고

【전담검사역(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 운영의 내실화】

- 대형회사, 소형 다수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상시감시수단 개발 등 RM상시감시체제 구축시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

【검사효율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

-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현장검사를 차별화하는 방안 및 초임 검사역에 대해 사전연수를 강화함으로써 검사 효율성 및 수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대상 금융회사

- 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

□ 컨설팅 가능 부문

- 금융회사의 새로운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계전반의 best practice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문을 위주로 하되,
 - 경영진 고유권한 또는 감독당국 개입 논란 소지가 있는 경영전략, 인사정책 등은 제외

□ 컨설팅팀의 구성

- 컨설팅팀은 소관 검사국에서 주관하여 구성하되, 금감원내의 컨설팅 대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팀을 구성

□ 컨설팅 계약

- 일반검사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감원간에 컨설팅 약정(MOU) 체결
 - * MOU에는 경영컨설팅 범위 및 한계, 금융회사 협조사항,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컨설팅의 구속력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

□ 컨설팅과 검사와의 관계

- 컨설팅을 실시한 분야는 향후 종합검사 및 관련 부문검사이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검사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님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결과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고서로 기술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 필요시 해당 검사국에서는 컨설팅 결과 사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

2-1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금융회사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제도 구축

-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및 자본 충실화 유도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
- ☐ 특히, 국제적 정합성과 우리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감독제도 구축 추진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① 향후 신BIS협약* 도입시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

* 신BIS협약 : 현행 BIS비율규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i)리스크가 상이한 은행자산별로 그에 상응하게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하여 부여하고 (ii)은행자율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전제로 감독당국의 '규제규율'과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규율'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② 리스크중심의 감독(RBS : Risk Based Supervision)* 시스템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권에서도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도모

* **RBS** : 금융회사의 행위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금융혁신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 차단을 위해 감독당국은 건전성 등 리스크요소에 대해서만 중점 감독하는 새로운 금융감독 패러다임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③ 실질 현금흐름과 유동성 위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권 **유동성비율*** 산출방식 개선

* **유동성비율 규제** : 은행들은 매분기말 원화유동성자산비율(잔존만기3개월이내 자산/잔존만기3개월이내부채)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특수은행은 70%)

- ④ 여신편중에 따른 부작용 억제와 건전성 제고는 물론 자금의 균형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 **신용공여한도 규제** : 은행들은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이내, 거액 신용공여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0% 이내로 유지해야 함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⑤ 은행의 규모 및 경영관리능력 등에 따라 **경영실태계량평가***의 등급기준 및 평가항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경영실태계량평가** :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경영실태 종합평가 이후 반기 또는 분기별로 계량지표(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유동성/수익성 4개부문 14개지표)를 평가하는 감독시스템

- ⑥ 보험회사의 분야별 리스크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회사별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리스크평가제도 도입 추진**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의견수렴절차 이행) 적절한 의견수렴절차 이행

- 민관합동의 워크숍* 개최 및 외부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 06.5.2일(은행연합회), 「Pillar II :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06.6.8일(은행연합회),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지정(안) 검토」 등

** KDI,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 필요자본비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 민관합동의 「신BIS협약 추진기획단」 운영*을 통해 정책연계 필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이견조정

* 금감위 상임위원 단장, 금감위·금감원·재경부·한은·민간전문가 6인 등

* 제5차 추진기획단 회의(06.1.25일) : ECAI 지정방안 관련쟁점 논의
: 동 회의에 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요 신용평가사·신용조회사측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경부 등과 관련법령 유권해석 등을 협의

※ 워크숍·추진기획단 등을 통한 외부적격신용평가기관(ECAI) 지정 관련 의견수렴 내용

- ◇ 바젤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ECAI 선정기준으로 객관성·독립성·일관성·투명성·신뢰성의 5대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과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이를 연계하는 작업(mapping)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성 제기

- 신BIS협약 도입과정에서 바젤위원회가 개별국가에 부여한 국가 재량권 도입여부 등 주요국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쌍방·다자간 실무 국제협의* 지속 참여

- * 06.2월, 은행 핵심준칙 검토그룹(CPLG) 회의 참가
- * 06.3월, 영국 FSA 주관 「Standard Chartered Bank Basel College」 참가
- * 06.5월, 한국씨티은행 Basel II 이행관련 본사 관계자와 업무협의 실시
- * 06.6월, Basel II 및 지역별 리스크관리 관련 Roundtable 회의 참가

- 보험권에도 RBS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수차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포함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04.6~8)하여 시장의견을 충분히 반영

- * 보험개발원(03.7월), 「통합리스크 측정 및 자본요구량 연계방안 연구」
- * KDI(03.12월),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연구」
- * 보험개발원(04.12월), 「Basel II의 보험권 적용가능성 검토」

-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실시) 워크샵·외부용역 등을 통하여 과제추진에 필요한 적절한 사전분석 추진

- 신BIS협약 도입준비를 위한 민관합동의 워크샵* 개최 및 외부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사전연구 실시

- * 06.5.2일(은행연합회), 「Pillar II :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 06.6.8일(은행연합회),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지정(안) 검토」 등
- ** KDI,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 필요자본비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 보험권의 원활한 RBS 도입을 위해 수차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을 포함한 공동작업반을 구성(04.6~8)하여 사전연구 실시

- * 보험개발원(03.7월), 「통합리스크 측정 및 자본요구량 연계방안 연구」
- * KDI(03.12월),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연구」
- * 보험개발원(04.12월), 「Basel II의 보험권 적용가능성 검토」

○ (영향분석 실시) 신BIS협약 도입이 개별은행의 BIS비율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량영향평가(QIS)를 반기별로 실시

- 이와 별도로 신BIS협약 도입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한 계량분석 실시(06.6월)

○ (관련정책 연계방안 및 사전협의) 민관합동의 「신BIS협약 추진기획단」 운영*을 통해 정책연계 필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이견조정

* 금감위 상임위원 단장, 금감위·금감원·재정부·한은·민간전문가 6인 등

* 제5차 추진기획단 회의(06.1.25일) : ECAI 지정방안 관련쟁점 논의

: 동 회의에 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요 신용평가사·신용조회사측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정부 등과 관련법령 유권해석 등을 협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의견수렴절차 이행) 적절한 의견수렴절차 이행

- 원화유동성비율과 관련하여 개별은행에 대해 건의사항 제출을 요청·접수(05.12~06.1월)

* 주택금융공사 원화유동성비율 관련규제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수렴(06.2월)

※ 유동성비율 규제 관련 의견수렴 내용

◇ 실질적으로 유동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들이 유동성비율 산출시 누락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업무특성상 장기MBS 보유비중이 높아,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단기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필요

-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실시)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주요국 운영사례 및 국내 운영현황을 철저히 분석
 - 주요국 감독당국이 운영중인 은행권 유동성지도비율 관련제도의 운영현황 조사(06.1~3월)
 - 주요국의 거액신용공여 및 관계자여신 규제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06.3월) 및 05년중 국내은행 신용공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06.3~4월)
- (영향분석 실시) 주택금융공사 유동성비율규제 완화시 주택금융공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06.6월, 간담회보고)
- (관련정책 연계방안 및 사전협의) 규제완화의 수혜자인 금융회사 등과 T/F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협의 추진중(06.3월~)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의견수렴절차 이행) 외부연구용역 실시, 금융회사 실무자간 정례모임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중
-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실시) 주요국의 필요자기자본 차등화 방안 및 차별적 경영실태계량평가와 관련한 선진사례 조사 등 사전연구 시행(06.1월,6월)

※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감독제도 연구 주요내용

- ◇ 신BIS협약은 「Pillar II」를 통해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최저자기자본 비율 상향조정 및 차등화 규제를 권고하고 있음
- ◇ 미국·영국·케나다·호주·홍콩·싱가폴 등은 이미 이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RBS를 확대발전시켜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영향분석 실시) 보험권역에 대한 분야별 리스크 평가제도*는 감독당국 내부의 감독시스템 관련사항으로, 환경·갈등·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되지 않음

※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 시험운영 기본 방향

- ◇ 보험회사의 영업활동별로 내재된 리스크량과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색출된 리스크에 대해 감독·검사자원을 집중 할당함으로써 감독·검사의 효율성 제고
- ◇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운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감독당국은 리스크측정 관련 검사프로그램 개발 및 검사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함

- (관련정책 연계방안 및 사전협의) 주요 감독정책방향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 추진

-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차등화 방안 추진이 기존 BIS비율규제를 원활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금감원 실무부서간 업무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06.5월)

* KDI,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 금감원 신BIS실·은행감독국·은행검사1/2국·검사지원국으로 대응반을 총괄 구성하여 신BIS협약 도입시까지 점검·승인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향후 승인업무의 객관성·일관성·책임성을 제고(→동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전문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 이미 은행권에서 06년부터 시행중인 RADARS를 모범사례로 상정하고, 보험회사의 분야별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리스크평가제도 시험운영(06.3월)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히 구비하였는가?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 신BIS협약 도입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책수단에 선택의 여지 없음
 - 신BIS협약은 대부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07년 예정)을 통해 도입될 것이나, 시행시기가 상당기간 남아있는 만큼 「신BIS자기 자본비율산출기준(안)」을 마련하여 개별은행의 신BIS협약 도입 준비작업을 실무적으로 지원
 - 현실적으로 ECAI 지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금년중 어려우므로, 예비지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 검토중
 - * ECAI 본지정은 규정완료후 결정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예비지정된 ECAI가 본지정시 탈락될 수 있음을 명시(영국·일본에서 기시행)
-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중
 - 개별은행의 신BIS협약 도입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지도하여 신BIS협약의 원활한 도입 뒷받침
 - * 국내은행의 운영표준방법 추진현황 조사 및 도입준비 지도(06.5~6월)
 - *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에 대한 신BIS협약 시행 준비상황 점검(06.6월)
 - 신BIS협약 도입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필요시 신BIS협약상 부여된 국가재량권 범위내에서 국내현실을 반영한 기준조정* 검토중
 - * (예) 신BIS협약 도입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위축이 우려될 경우, 10억원 미만 중소기업대출을 소매로 분류하여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 원화유동성 비율규제와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책수단으로 합당함
-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주택금융공사 유동성비율규제 완화시 주택금융공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급격한 유동성 위기시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06.6월, 간담회보고)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보험권 리스크평가제도는 대부분 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내부감사운용 규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정책수단으로 합당함
-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RBS 도입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요국 사례에 대한 연구분석 및 감독기관내 부서간 업무조정안 검토·마련중
 - * KDI(06.1월),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 보험개발원(03.7월), 「통합리스크 측정 및 자본요구량 연계방안 연구」
 - KDI(03.12월), 「보험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방안 연구」
 - 보험개발원(04.12월), 「Basel II의 보험권 적용가능성 검토」
 - *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방안 등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부담 완화 및 동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금감원 신BIS실·은행감독국·은행검사1/2국·검사지원국으로 대응반을 총괄구성하고 동업무의 객관성·일관성·책임성을 제고(→동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의한 전문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하고, 특히 전문성이 담보되는 검사지원국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RBS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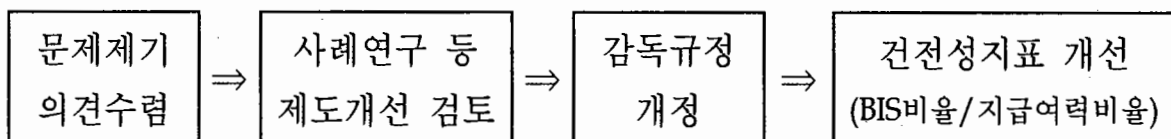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BIS자기자본비율(은행)	은행 10% 이상
지급여력비율(보험)	생보 211.8% 이상 손보 276.1% 이상
제도개선 실적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 세칙 개정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성) 정책과제 2-1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1차적으로 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주요 지표에 반영되므로,

성과목표 및 지표로서 「제도개선 실적」 및 「BIS비율·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지표」는 적정하게 설정



- (성과지표의 객관성) 「제도개선 실적」(감독규정개정)은 금감위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이며, 「BIS비율·지급여력비율」도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수치임

- 다만, 「건전성지표」의 경우, 동 과제들의 추진효과가 1년이내에 단기적으로 건전성지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건전성지표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건전성 지표로서 「BIS비율 10%이상」은 은행업감독규정상 우량은행의 지표기준을, 「지급여력비율 211.8% (손보 276.8%)」는 과거 3년 평균치를 감안하여 설정되었음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금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이므로, 감독규정상 건전성에서 우량한 등급으로 구분되는 지표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검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목표달성 검증방법의 적정성) 감독규정개정, 주요 건전성지표 검증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될 수 있으므로 검증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신BIS협약 도입관련 세부지침(안) 마련, 공청회 및 워크숍 개최, 은행별 준비상황 점검(06.6월) 등 계획된 사업을 당초 계획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 신BIS협약 도입 준비 계획(06년이후)

- ◇ 반기별 상사업무 : 은행별 준비상황 점검, 총괄 QIS 실시 등
- ◇ 06년 상반기 : ECAI 지정 관련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대출에 특화된 QIS 실시
- ◇ 06년 하반기 : ECAI 예비지정 실시, 내부등급법 승인 준비작업 착수,
- ◇ 07년중 : 신BIS협약 관련 규정화 추진, 금감원내 내부등급법 승인반 총괄운영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유동성비율 관련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은행권 의견수렴 등 준비절차 마무리
 - 예정대로 06년하반기에 금감위간담회 논의를 거쳐 규정개정 추진 예정

※ 유동성비율 규제 관련 의견수렴 내용

- ◇ 실질적으로 유동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들이 유동성비율 산출시 누락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업무특성상 장기MBS 보유비중이 높아,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단기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필요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차별적 경영실태계량평가와 관련한 선진사례 조사 등을 예정대로 상반기중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됨
 - 특히, 신BIS협약 「Pillar II」 관련 용역결과를 점검(06.1~3월, KDI)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국가에 대해서도 은행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방안을 추가 조사

※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감독제도 연구 주요내용

- ◇ 신BIS협약은 「Pillar II」를 통해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최저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 및 차등화 규제를 권고하고 있음
- ◇ 미국·영국·캐나다·호주·홍콩·싱가폴 등은 이미 이와 유사한 규제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RBS를 확대발전시켜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동 추진과제는 금융감독업무와 밀접한 연계선상에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예산소요는 없음
 - 다만, 주어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신BIS협약의 원활한 도입준비를 위한 금감원내부에 전담조직인 신BIS실을 별도 설치하여 규정(안) 마련, 은행권의 준비상황 점검·지도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중
 - 특히, 은행의 준비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 및 향후 방대한 승인심사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재배치를 위해 관련 부서의 리스크 전문인력 및 은행별 RM들로 구성된 「공동 심사반」* 운영방안 마련(06.5월)
- * 금감원 신BIS실·은행감독국·은행검사1/2국·검사지원국으로 총괄구성하여 신BIS협약 도입시까지 점검·승인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향후 승인업무의 객관성·일관성·책임성을 제고(→동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전문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 한편, 관련과제 추진에 필요한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해서는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외부연구용역 등을 수행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별도의 인력·예산없이 금감위(원)내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T/F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④ 시행과정의 저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신BIS협약 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여,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제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면서, 향후 우리측의 국가재량권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

* 06.2월, 은행 핵심준칙 검토그룹(CPLG) 회의 참가

* 06.3월, 영국 FSA 주관 「Standard Chartered Bank Basel College」 참가

* 06.5월, 한국씨티은행 Basel II 이행관련 본사 관계자와 업무협의 실시

* 06.6월, Basel II 및 지역별 리스크관리 관련 Roundtable 회의 참가

- 일부에서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권의 BIS비율 급락 가능성, 중소기업대출의 급격한 축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엄밀히 검증하기 위한 QIS* 전격 실시(06.4~6월)

* QIS(Quantitative Impact Study) : 신BIS협약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요소가 변화할 경우 개별은행 BIS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최근 수년간의 저금리구조 지속에 따른 시중유동성 과잉현상 등 제반 금융환경 변화, 은행들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안 마련중

- 이 과정에서 종전 은행권과 동일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던 주택금융공사측에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06.2월)함에 따라 이를 전격 수용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차별적 경영실태계량평가와 관련한 선진사례 분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BIS협약 「Pillar II」와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 점검(06.1~3월, KDI)과정에서 은행 필요자기자본비율 차등화 방안을 추가조사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관련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금감위(원)·재정부·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BIS협약 추진기획단」을 통해 정책연계 필요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추진

* 제5차 추진기획단 회의(06.1.25일) : ECAI 지정방안 관련쟁점 논의

- 동 회의에 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요 신용평가사·신용조회사측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정부 등과 관련법령 유권해석 등을 협의

- 금감위(원)내 유관부서간 신BIS협약 준비를 위한 공동대응 및 이견조정 등을 위해 신BIS협약 합동추진단 운영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은행연합회·개별은행의 건의사항과 한국은행의 검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유관기관과 T/F를 구성(06.2월~)하여 유동성비율 규제 개선을 추진중
- 금감위(은행감독과)·금감원(은행감독국/신용감독국)이 합동으로 신용공여한도 관련규제 현황 및 발전방향을 검토중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개별은행에 대한 차별적 경영실태계량평가 운영방안은 향후 도입될 신BIS협약의 'Pillar II'*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신BIS협약 'Pillar II' : 신BIS협약은 3개의 Pillar로 구성됨. 'Pillar II'는 감독당국의 역할과 관련한 사항으로, 은행이 적정한 내부자본평가절차를 구축토록 지도하고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BIS자기자본비율(은행)	은행 10% 이상	100%	(06.3말 기준) - 일반은행 12.9%
지급여력비율(보험)	생보 211.8% 이상 손보 276.1% 이상	100%	(06.3말 기준) - 생보 229.9% - 손보 294.0%
제도개선 실적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 세칙 개정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성과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신BIS협약 도입의 기준이 되는 각종 기준(안)* 마련·발표
 - * 「유동화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산출을 위한 세부지침(안)」 마련(06.2월)
 - * 「신BIS협약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예비운용 요건(안)」 마련(06.3월)
 - *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세부지침(2차안)」 마련(06.5월)
 -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기준(안)」 마련(06.6월)
- 신BIS협약 도입 준비를 위해 개별은행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개별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토록 유도하여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및 위험관리능력 향상에 기여
- 개별보험사의 리스크평가제도 시험운영 실시·분석(06.3월)을 통해 리스크평가제도 지원시스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리스크평가제도 리스크노출정도 절대평가 등급산정(안)」 확정(06.6월)

【건전성 감독제도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 주택금융공사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정개정안*을 금감위간담회에 상정(6.30일, 7.7일 개정 예정)
 - * 주택금융공사의 유동성관리 특성(MBS 기초자산 수집에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원화유동성자산비율을 종전 100%에서 70%로 완화

【감독대상 특성을 반영한 감독수준 차별화】

- 개별회사 특성을 반영한 차등화된 감독기준 적용방식 도입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개별은행들의 신BIS협약 준비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선진국의 신BIS협약 도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도입시기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 필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Stress Test 모형*을 사용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의 속보성 및 신뢰성을 제고

* 통계적 모형 등을 사용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모형

**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5개 부문 「위기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별, 금융산업별, 금융산업 전체에 대해 미래의 위기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신종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권역 공통의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처리기준·모범규준을 정비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전자금융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전자금융업 등록·인허가 절차 및 경영지도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의 건전성·안정성을 확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및 감독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등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 영업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실적 위주의 경영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사례 방지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 개선】

- ☐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유도하고 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보완 및 집행간부의 책임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의견수렴) 학계·업계 등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조기경보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해당 감독·검사국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수립

- (영향분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정부의 '국가경제위기관리방안'(04년)의 일환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이며,
 - 조기경보모형 분석결과 및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결과는 재경부 등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의견수렴) '파생결합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계획'('05.9.1)에 의거 금융회사와 금감위·금감원 관련부서 등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사전협조 과정을 거침

협의내용 : 권역별 취급여부 판단, 파생결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자기자본산출, 한도관리, 투자시/투자권유시 유의사항 등

- 한편,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은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BIS에서 권고하는 가치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방안을 마련한 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반영(06.5)

- (통계 및 사례조사) 최근 신용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추이를 분석하여 대응하였으며
- * 국제시장에서 신용파생상품 잔액은 '01.12말 1조1,890억달러에서 '04.12말 5조210억달러로 최근 3년 사이에 4.2배 증가
- T/F팀 주관으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당국(FSA)의 관련 지도공문 등을 조사
- (영향분석)신종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감독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파생상품 거래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국내에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원활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독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 외환자유화 확대, 동북아 금융허브 등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및 금융시장 국제화 관련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의견수렴)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4.) 후 시행('07.1.)에 맞추어 시행령(재정부 주관 T/F 참여), 감독규정 등을 제정중
-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관련 금융기관 실무자 회의(6회, 120명)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중

협의내용 : 전자화폐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전자화폐업의 범용성 설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 기준 등

- (통계 및 사례조사) 법 시행후 감독당국에 허가·등록 대상인 전자금융업자 현황 파악 등(04.9)을 통해 법령 제정시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

*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는 47개로 파악됨

- (영향분석) 각종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보호를 제도화 하기 위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전자 거래 관련 다양한 법규와의 상충을 방지*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및 거래 관계를 명확히 규제하도록 관련기관간 협의하여 법을 마련

* 전자거래기본법(산자부), 전자서명법(정통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공정위)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의견수렴) 기 구축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사례를 방지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통계 및 사례조사) 금융회사 영업정지조치, 임·직원 해임 권고(면직) 등 금융사고의 발생원인 및 손실규모 등을 조사

*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유용사고가 262건, 1,987억원으로 전체사고의 63.0%(금액기준 58.7%) 차지

**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액은 2,249억원으로 전년대비 347억원 증가

- (영향분석)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하거나 감독이 소홀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현장검사 실시중 지적시 유의사항을 사전 지도하는 한편 사전통지시에도 조치예정내용의 적정성을 사전협의하는 등 감독·검사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 개선】

- **(의견수렴)** 은행 임원제도는 그동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 및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배구조 합리화에 노력해 왔으나
 -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적극적 경영참여가 곤란하고, 부적격 임원선임 방지 장치 미흡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및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그간 준비된 시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06.3분기 예정)
- **(통계 및 사례조사)** 주요 선진국의 임원심사제도 및 사외이사 운영에 관한 사례조사를 완료(06.1), 세부사항을 검토 중
- **(영향 분석)** 공청회(06.3분기 예정)를 통해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영향 분석에 착수할 예정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임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독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도 다수이므로 공청회 논의 후 최종안 마련시 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의견수렴)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상시, 금년은 3월에 워크아웃 관련 임원회의 개최)하고 상호 협조하여 기업 구조조정 모니터링에 적극 활용
- (통계 및 사례조사)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인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경우 분기별로 워크아웃 적용기업, 회생기업, 부도기업 등 통계를 조사(금년 1/4분기는 272개사가 신규선정되고 334개사가 경영정상화)
- (영향분석)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 설치 등을 통해 워크아웃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정책수단 분석)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조기경보 모형 구축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가 강화된다고 판단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경보 모형 구축을 선정
- (부작용 등 대비) 조기경보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의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정책수단 분석) ‘파생결합금융상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목표에 부합

- **(부작용 등 대비)** 국내 신용과생상품 시장여건이 국제시장과 같이 성숙되는 데에는 일정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등 일부상품은 구체적인 기준을 추 후에 마련하기로 함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정책수단 분석)**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한편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감독 관련 사항은 감독규정에 규율
- * 전자금융업자 진입(허가·등록) 세부요건, 건전경영지도 기준 등
- **(부작용 등 대비)** 수년간의 검토·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이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작업에도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진행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정책수단 분석)** 금융회사 영업정지조치, 임·직원 해임권고(면직) 등 금융사고의 발생원인 및 손실규모 등에 상응한 제재수단을 구비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기여
- **(부작용 등 대비)** 검사부서가 의뢰한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하여 제재심의실내 기관별 전담자가 사고내용 및 관련 입증서류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부작용 최소화

【지배구조의 투명성 · 합리성 개선】

- (정책수단 분석) 사전적 감독수단의 일환으로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
 - 동 개선방안이 마련 · 확정될 경우, 은행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
- (부작용 등 대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의 강화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은행권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과거의 임원자격 사전심사 제도와 현행 사후심사 제도의 절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

- (정책수단 분석)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을 충실히 준수토록 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구비

* 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03.12.30 은행연합회에서 제정

- (부작용 등 대비) 기촉법의 효력이 만료(05.12.31)됨에 따라 이의 연장 또는 재입법 무산에 대비하여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구조조정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 추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분기별 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15% 이상 단축
Stress Test모형의 개발 및 분석 실시 건수	2건이상 (상·하반기 각1회)
권역별 조기경보시스템 신규 구축 실적	9건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분기별 조기경보 시스템의 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 결과가 신속하게 산출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측정 가능성) 정책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수 있도록 조기경보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15%)을 목표로 설정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개발 및 분석실시 건수】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측정 가능성) 정책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개발 및 분석 실시 건수(2건)를 목표로 설정

【 권역별 조기경보시스템 신규구축 실적】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금융권역별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 (성과지표의 객관성 및 측정 가능성) 정책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수 있도록 권역별 조기경보시스템의 신규구축실적(9건)을 목표로 설정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분기별 조기경보 시스템의 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 (목표치의 합리성) 수작업에 의한 '05년 조기경보 산출시간을 고려할 때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최소한 15% 이상을 단축하는 목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검증방법의 적정성) 계량적 검증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검증 방법이 적정함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개발 및 분석실시 건수】

- (목표치의 합리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추이 및 분석의 시의성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1건 이상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검증방법의 적정성) 계량적 검증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검증 방법이 적정함

【권역별 조기경보 시스템 신규구축 실적】

- (목표치의 합리성) 전체 금융권역(9개)에 대해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9개 이상의 신규모형개발 목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검증방법의 적정성) 계량적 검증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검증 방법이 적정함

③ 시스템개발의 합리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상반기 목표에 맞춰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3.6, 4.2)
- 조기경보모형 및 전산시스템 구축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중
 - * '06.1월부터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의 속보성 제고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
 - ‘파생결합금융상품 업무처리기준’ : 계획수립('05.9월), 사업착수('05.10월), 사업완료('06.1월)
 -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방법 개선방안’ : 계획수립('06.4월), 사업착수('06.5월), 사업완료('06.6월)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2007.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대비하여 재경부 주관의 시행령 제정작업에 참여(06.5월~)중이며
 - 전자금융업 감독규정도 차질없이 준비중(하반기중 마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및 서면검사 결과 나타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시 부문검사를 운영
 - 국민은행의 CD위조사고 이후 내부통제개선 추진상황 보고(3월)
 -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점검(SC제일은행)
 - 파생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점검(한국씨티은행)
 -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HSBC)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 개선】

- 현행 임원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하고 공청회 개최시기를 조율하는 등 분기별 일정에 따라 추진중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기촉법 연장 또는 재입법 무산에 대비한 자율협약 추진 등 연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권역별(은행·증권·보험 등) 및 기능별(조기경보모형, 스트레스 테스트 등)로 팀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내부직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 조기경보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적절히 운영하여 모형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파생결합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계획’(‘05.9.1)에 의거 금융회사와 금감위·금감원 관련부서 등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문인력 및 이해관계자를 효율적으로 활용
- T/F팀 주관으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당국(FSA)의 관련 지도공문 등을 조사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제정을 위해 재경부, 금감위(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기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최대한 조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동일 금융회사에 대한 유사부문·시기의 부문검사를 통합 실시함으로써 검사자원을 적절히 배분
- ‘06.6월 장호원신탁 등 5개 신탁에 대해 ‘회계분식 여부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 관련비리점검’을 병행 실시

- '06.6월 4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BIS비율 산정의 적정성, 부당여신 취급여부, 법규준수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시 '금융비리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
- '06.6월 메를린치인터내셔널증권(주)에 대해 '파생상품 취급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시 '관련내부통제 점검'을 병행 실시

【지배구조의 투명성 · 합리성 개선】

- 검사부서가 의뢰한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하여 제재심의실내 기관별 전담자가 **사고내용 및 관련 입증서류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

- 기촉법 연장 또는 재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과제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상반기중 발생한 거시경제변수 및 행정여건 변화에 맞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기에 실시(3.6, 4.2)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파생결합금융상품 업무처리기준’ 관련 설명회('06.1.26)를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파생결합금융상품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법령개정을 대비하여 외국의 주요사례를 분석하는 등 행정여건에 적절히 대응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감사부서로 하여금 금융사고 발생원인, 개인별 위규내용 등을 감사현장에서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경영진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감독소홀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부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 합리성 개선】

- 은행권의 자율경영을 위하여 현행과 같은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부에서 부적격 임원을 선임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임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 부적격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전적 건전성 확보 수단인 임원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은 적절한 대응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

- 기촉법 연장과 관련, 국회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율협약으로의 전환여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정부의 ‘국가경제위기관리방안’(04년)의 일환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이며,
 - 조기경보모형 분석결과 및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결과는 재경부 등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감독당국이 신종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금감위·금감원 관련부서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사전협조 과정을 거침

*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신용사건 요건, 적격 신용파생상품 요건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재경부, 금감위(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 전자지불산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현장검사 실시중 지적시 유의사항을 사전 지도하는 한편 사전 통지시에도 조치예정내용의 적정성을 사전협의하는 등 감독·검사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검사결과 조치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재경부 등과 협조하여 기촉법 연장을 위한 국회 설명(06.4. 임시국회) 등 협조체계를 구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분기별 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결과 산출시차 단축률	15% 이상 단축	측정 불능	금년중 조기경보시 스템 구축완료 예정
Stress Test모형의 개 발 및 분석 실시 건수	2건이상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100% 달성	상반기 중 2건 달성
권역별 조기경보시스템 신규 구축 실적	9건 이상	측정 불능	금년중 조기경보시 스템 구축완료 예정

- 이미 상반기 중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2회 실시하였으며 연말
까지 실시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이다
- 조기경보시스템 분석결과 산출시차단축률과 신규 구축 실적은
금년중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강화】

- 경제성장률, 주가, 금리, 은행 ROA 등의 충격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1.25)

- 거시경제변수 및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2회 수행 (3.6, 4.20)**
- 조기경보시스템의 속보성 및 신뢰성을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 전산시스템 개발 착수(1.17)**
- **조기경보모형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모형 개발 작업에 대한 자문 및 협의(4.13)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금융사고 발생에 대하여 관련 기관등록 취소, 임원 해임권고 조치 등 해당 기관 및 경영진 등에게 **행위 및 감독소홀 책임**을 엄중하게 부과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금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

- 금융회사에 ‘파생결합상품 감독 및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06.1월)
-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마련('06.6월)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반영한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전자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공포(06.4.28)되었으며 재경부 주관의 T/F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초안을 작성완료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정비】

- 내부통제제도의 적정 구축여부 및 법규준수실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유도함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조기경보 모형의 예측 기간을 앞당겨 시의성 향상시킬 필요
- 고도의 통계적 방법론이 아닌 엑셀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단순한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필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시장의 복잡화·역동성 증대로 범죄수단과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감독강화로 금융질서를 확립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모방범죄의 확대를 조기에 차단

○ 초단기 시세조종, 현·선연계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적기 대응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성 향상

[제제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구제의식 강화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 감독당국이 조치하는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개선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안정 성장을 도모하고

○ 변칙적인 CD발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도모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1)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의견수렴)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감위(원), 거래소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 논의(2차례, '05.12.9, '06.2.7)

※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회의의 신종 불공정거래 관련 논의 내용

○ '05.12.9 협의회

- 초단기 매매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기법 개발
- 주식워런트증권 등 현·선연계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06.2.7 협의회

-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 및 대응방안 논의
 - KOSPI200 선물·옵션 : 프로그램매매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ELW : LP거래 투명성 제고,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대상 유가증권 추가(증권거래법 개정사항) 등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통계 및 사례조사) 불공정거래 사례 및 조사기법 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개최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

※ 불공정거래 사례 및 조사기법 연구를 위한 연구회('06.1.27 발족)의 사례조사

- 초단기형 시세조종 사례 연구(2월)
- 현·선연계 시세조종 사례 연구(6월)

○(영향분석)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는 금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최일선에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불공정거래 심리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와 조사기관인 증선위·금감원이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련정책을 협의

※ 협의내용

- '05.12.9 협의회
 - 조사·심리기관간 정보 및 시스템 공유 확대
 - 조사·심리기관간 실무협의회 운영(주요현안에 대해 수시 회의)
- '06.2.7 협의회
 - 현·선연계 관련 시장감시시스템 정보공유 확대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의견수렴) 「제재조치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 방안」 마련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시각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 학계,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집단(증권법학회)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건전증시포럼*」의 논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기구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주관하에 학계, 법조계, 감독당국, 업계 등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으로 구성

※ 건전증시포럼(6.19)의 토론 내용

- 제재조치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 등을 행정 절차법상의 내용과 일치시켜 운영할 필요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도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필요
- 불공정거래의 동기가 경제적 이득 추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제도 도입 필요

○(통계 및 사례조사) 내부 관련부서 실무자로 T/F를 구성(1월)하여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관련 법원의 판결 및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외부용역기관인 증권법학회에 전달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 법원 판결 및 외국 사례

- 법원판결
 - 문책요구의 처분성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 433,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등
 - 사전통지절차 등 예외사유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등
- 외국사례
 - 금전적 제재 관련 입법례(미국, 영국, 일본)
 - 과징금 부과 기준과 재량성 관련 입법례(미국, 영국, 일본)
 - 금융규제법의 역외적용 관련 입법례(미국, 영국, 일본)
 -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제공 관련 입법례(미국, 영국, 일본)

○(영향분석)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은 금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 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은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조치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의 수행을 위한 T/F 구성 및 외부연구용역 발주를 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

※ 「제재조치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 방안」 T/F 구성

- 금감위 시장감독과
- 금감원 조사국, 회계감독국,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의견수렴) 감독기구,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 및 전문가(교수)로 구성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05. 4월, 10월)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방안 논의
- (통계 및 사례조사)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시 반영
 - 조사건이 133건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6.7%, 관련자는 61.9%, 금액은 95.5% 증가

(단위: 건, 명,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건 수	21	114	133
관련자	757	2,576	4,171
금 액	48	323	631

- 2004년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본격 활용함으로써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
- (관련 영향분석)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통한 사기방지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과 의견조율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정책수단 분석)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발생환경 및 빈도가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 조사체제를 시장별(유가증권/코스닥) 업무분장에서 업종별 업무분장으로 전환하여,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

○(부작용 등 대비) 정책수단인 조사기능의 강화에만 치중할 경우 적법절차 경시 등 문제 소지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과제를 이행중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정책수단 분석)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 및 시장참가 이해관계자의 권리구제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제재조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 적절

- 또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제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소송 등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

○(부작용 등 대비) 제재조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정책수단 분석)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활성화 및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부작용 등 문제 제기된 사항은 없음
-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 새로운 보험사기 기법의 출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을 적시에 인지하기 위해 생·손보험회, 수사기관등과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
 - 조사담당자들의 조사능력 강화를 위해 내부교육의 강화 뿐만 아니라 워크샵 등 외부교육 실시

② 성과목표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조사처리율(불공정거래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정도)	65.7% 이상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 등 연중 10회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및 중대사건 중심 조사,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기법 개발,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개선 등의 성과목표는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라는 전략목표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음

○(측정가능성 등) 성과목표는 전년동기와의 비교, 실제 조치 건수, 규정개정 여부, 조사처리율 등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 성과지표인 조사처리율(조사처리사건수/조사대상사건수)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처리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과거의 통계자료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 또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횟수) 역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과거의 추진실적의 비교가 용이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목표치의 합리성)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율은 최근 3년 평균치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 또한 최근 3년간의 제도개선 실적 및 교육·홍보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율과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은 불공정거래 감독강화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며,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함

○(검증방법의 적정성) 목표달성 여부의 검증은 조사처리비율, 교육·홍보 횟수 등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검증방법이 적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과제임
 - 상반기 현재 관련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조사국의 업무 분장 전환(시장별→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 및 조사기법 연구를 위한 연구회 개최(5회), 거래소와의 공동조사 10건(전년동기 8건) 실시 등 수행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 불공정거래 제재조치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의뢰, T/F 구성(1/4분기), 연구용역 결과 제출, T/F 내부검토, 외부의견 수렴(2/4분기) 등이 계획에 맞추어 정상추진중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상시조사와 예방활동(교육·홍보)은 상시과제로 연중 추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 (투입시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은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력자원의 투입시기를 적절히 조정

* 중요사건에 대한 우선조사 실시로 '06.1~6월의 검찰고발건수가 전년동기의 21건에서 45건으로 2.1배 증가

○(집행규모 및 관리방법) '04년말과 대비하여 '06.6 현재 조사 인력은 24% 감소했지만 불공정거래사건 적체건수는 55% 감소하는 등 인력자원의 집행규모를 적정하게 유지

- 이는 중요사건과 경미한 사건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데 따른 것임

○(사후관리) 조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진행을 촉구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졌음

【제제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투입시기) 1월에 증권법학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기관과 T/F를 구성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자원 투입

○(집행규모) 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연구용역계약을 발주하고 책임자급으로 T/F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 및 인력자원을 투입

○(관리방법 및 사후관리) 불공정거래 제제조치의 법률적 적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의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연구진과 3차*에 걸친 회의개최를 통해 논의

* 3.7 1차 회의, 4.17 2차 회의, 4.27 3차 회의

- 또한 연구용역 결과의 수용 및 최종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T/F에서 4차*에 걸쳐 토론하고, 건전증시포럼(6.19)을 개최하여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후관리도 적절함

* 5.19 1차 회의, 6.9 2차 회의, 6.12 3차 회의, 7.4 4차 회의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사기 혐의건에 대한 상시조사 등을 위한 조사인력을 적절히 투입·운용하고
- 보험사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방지교육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 ※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위한 포스터(5,000부)와 리플렛(30,000부)을 제작하여 배포(예산 : 7,300천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 증권시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테마주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적시에 포착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과 관련된 주변여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최종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과정에서 주변여건이 변화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사기의 신종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점 사기형 의지수를 개발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
 - 개별 보험사, 수사기관등과의 공조를 통해 관련정보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여 신종보험사기 유형에 대비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중대사건 및 신종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 조사기관(증선위·금감원)과 심리기관(거래소) 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주요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엔터테인먼트 테마주 등 긴급을 요하고 중대한 사건 조사를 위하여 시장감시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제재조치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 제재조치의 적정성 제고 및 권리구제 절차 개선 과제는 증권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관(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진행
 - 금감위(원), 거래소, 증권업협회 실무자로 외부연구용역과 관련한 T/F 구성(1월) 및 연구초안에 대한 T/F 검토(3~4월 중 3회 개최)
 - 최종 연구용역보고서(4.28 제출)에 대한 검토(4회 개최) 및 건전증시포럼(6.19) 공동 진행

【편법·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업계와의 조사협조체제 구축하여 법상 조사권한에 근거한 유기적인 역할 분담
-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활성화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상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례협의회 개최
 -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혐의 분석 통보(81건)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정보 협조 요청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 공조
 -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 등 병·의원이 관련된 전문적 보험사기에 대하여 정보교류 및 조사 공조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유행성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유사불법행위 조기 차단
- 조사업무 업무분장을 시장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사건에 대해 우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증권범죄에 대한 적기대응능력 강화
- 초단기 시세조종 및 현·선연계거래와 같은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유사불법행위 억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년도 조사적체건수 등으로 성과지표 중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율이 목표기준에 미달한 바,
 -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할 필요
- 불공정거래 사건발생은 감독당국의 단속의지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동향, 기업·투자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진출에 적극 대응하고,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에 따른 불법거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독제도를 정비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금융허브 구축의 기반이 될 외국계금융회사의 영업활동지원과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하여 감독차원의 지원기능을 제도화
 - 국내은행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시장 개척과 해외투자활동의 촉진을 위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사·조사 수요 확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화유동성 위험을 조기에 측정,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계량모델 구축
-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조사 및 엄중 제재를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유지 및 외환자유화정책의 실효성 확보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외국감독당국과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MOU 가입 등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의견수렴) 재경부 주관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관계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임
- (통계 및 사례조사) 최근 수년간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현황을 파악*

* '04년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강남지점(5.3.), 씨티은행 대구(5.31.) · 대전(5.25.) · 광주(5.27.)지점
'05년 : 중국교통은행(8.1.) · 모건스탠리은행(9.7.) 서울지점, 홍콩 상하이은행 인천(11.21.) · 대전(11.21.) · 대구(11.23.)지점, 로얄 뱅트오브스코틀랜드(2.7.) 서울사무소
'06년 : 라보은행 서울사무소(1.23.),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6.23.) 본인가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지원 및 국내유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감독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체제 구축 추진

- (영향분석)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지원을 위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재경부 주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통계 및 사례조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 설계시 반영
 - * 외국환거래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총 122건 (기업 35건, 개인 87건)
- (영향분석) 불법 외환거래 조사 계획 수립시 외국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국민의 준법 의식 약화 가능성 등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감안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05년말 자본거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등 외환규제를 지속 완화함에 따라 외환시장의 교란 가능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 은행산업 전체 및 개별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련 위험을 조기에 측정하여 사전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공동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 개발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의견수렴) 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중일, 미국, 중동 두바이 등 자국 감독당국과의 협조가 중요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정책추진에 반영
- (통계 및 사례조사) 외국 감독기관과의 최근 MOU 체결 사례 분석 및 기타 협조관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영향분석) 외국 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 추진을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금융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임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정책수단 분석) 금융시장의 국제화 진전,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지원 및 국내유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조직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
 - 금감원 내에 별도 조직을 신설(국제감독지원실, 06.4)하고 ‘고충처리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
- 감독당국내에 단일한 접촉 부서(contact point)를 둬으로써 외국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 동북아 금융허브 등 금융시장 국제화에 대응한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부작용 등 대비) 외국 금융회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예상되지 않음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정책수단 분석)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및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 외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되 그에 대응하여 감독기관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외환거래 조사와 관련 하여서는

- 외국환거래 자유화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위규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일부 편법을 시도하려는 국민에 경각심을 주고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

○ **(부작용 등 대비)** 외환자유화 추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여 적절한 홍보를 실시

* 보도자료 배포 1회,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6.23, 은행연합회) 등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정책수단 분석)** MOU 체결, 관계자 면담, 강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금융감독관련 주요 공동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체제를 견고히 함
- **(부작용 등 대비)**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예상되지 않음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외환거래 조사결과 조치 건수	256건 이상
감독제도 정비실적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및 외국감독당국과의 외환 관련 양해각서 체결(2회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외환거래 조사결과 조치 건수 】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및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 외환 자유화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구축·가동하는 사항으로 구축여부를 성과목표로 설정
 - 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측정 가능성 등) 외환거래 조사 관련
 - 계량화가 가능한 조사실적을 성과지표로 하여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토록 하였으며
 - 외환거래 관련 최근의 불법·편법 추이를 판단하여 향후 외환거래 관련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제도 정비실적 】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국제적 협력체제 노력의 주요 결실은 국가간 협조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MOU(양해각서) 체결노력(건수)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
- (측정 가능성 등) 양해각서 체결건수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감독당국의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외환거래 조사결과 조치 건수 】

- (목표치의 합리성)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및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최초 도입인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여부를 목표치로 설정
 - 외환거래 조사 관련 조사실적을 성과에 연계시킴으로써 객관적인 성과검증이 가능
- (검증방법의 적정성) 관련문서(시스템개발 완료보고서) 및 실제 시스템에 의해 검증 가능

【 감독제도 정비실적 】

- (목표치의 합리성)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최근의 외국 감독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건수를 참고하여 금년도 실적을 평가, 성과에 반영
- (검증방법의 적정성) 양해각서 체결건수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당초 계획에 따라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
 - * 동북아금융허브팀(4명), 외국계금융사지원반(5명)등 감독당국내 국제금융관련 경력자 및 전문가 총10명으로 구성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관련하여
 - 당초 일정에 따라 1분기에 개발을 착수, 2분기중 시험가동을 통하여 하반기(7.1)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시작 예정
-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05.5 ~ 9월중)하여 완료
- 외환거래 조사 관련
 - 상반기중 조사 및 제재조치를 완료하는 등 당초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모두 달성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국제금융센터 설립(120여개의 외국 금융회사가 진출 추진중) 등으로 중동지역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두바이 감독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당초계획을 차질없이 진행
- * 05.9월 윤증현 위원장이 DFSA(두바이 금융감독청,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방문시 MOU 체결을 제안후 06.4 체결

<두바이 감독청과의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목적 : 정보교환 및 검사지원을 포함한 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
- 협조요청 : 협조 요청시, 법률 및 전반적 정책을 준수하는 한 각 당국은 상대방에게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함
- 협조사항
 - 피요청당국이 소유한 정보 제공
 - 요청당국이 확인이나 검증의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의 확인 및 검증
 - 정보 교환 및 상호 관심사 논의 등

<기타 외국과의 협조노력>

- (06.2.8) 금감위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방문
- (06.2.15-16) 「바젤위원회 은행 핵심준칙 검토그룹(CPLG) 회의」 개최
(미·일·국 등 24개 회원국과 IMF등 3개 국제기구로부터 40여명 참석)
 - * CPLG : Core Principles Liaison Group은행감독 핵심준칙(BCP : Basel Core Principles)의 이행과 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바젤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최초 회의는 '98.3월 개최되었음
- (06.3.28-29)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일본 금융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개최
 - ※ 신바젤 협약 도입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당면과제, 투기자본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06.4.17) 금감위원장은 Jean ARTHUIS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프랑스 상원 재정·경제·예산감독위원회로부터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06.5.11) 금감위원장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Benjamin Bernanke 의장 면담
- (06.5.18-19) 금감위원장 제8회 통합감독기구회의(헝가리)에 참가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감독당국간 협력을 강화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필요 최소한 규모로 신설(10명)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관련

- 내부직원 1(정보시스템실) 외에 **외부개발업체 2명**을 투입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 전산화 작업 진행중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보완 작업을 지속 진행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27백만원의 적정한 예산**으로 일정에 맞게 시스템을 완료

○ 외환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 한국금융연구원에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
- 정기적인 회의개최 및 시스템 검증작업 등 **개발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였으며, 완료시점에서 유의성도 검증

○ 외환거래 조사 관련

-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전 계획 및 일정을 철저히 수립
- 그에 따라 검사인력의 적절한 투입과 효율적인 검사진행을 통해 **당초일정에 따라** 검사-결과분석-조치까지 모두 완료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를 적기에 활용하여 관련 일정이 차질없이 성사됨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대되는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동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 국제감독지원실 설치(06.4) 시 특별한 행정여건의 변화는 없었음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관련
- 금년중에도 외환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외국환거래규정 개정, 06.1, 06.3)됨에 따라 최초시스템을 보완*하여 충실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

* 사용자 선택에 의한 특이거래 추출 방식 추가 등

- 외환거래 조사 관련
- 신고요건 등의 완화 등 외환거래 자유화 진전에 따라 외국 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그 완화된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제재수단을 사용

*(예시) 종전에는 한은 허가 미실시로 위반되었으나 금번 자유화 조치로 신고사항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일부 감경조치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두바이 감독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환경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음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외국 금융그룹의 국내 진출에의 적극 대응】

- 동과제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재경부, 금감위(원) 등 관계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임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관련
 - 본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책의 전과정은 재경부, 한국은행 등과의 협조하에 진행
- 외환거래 조사 관련
 - 조사중 세정 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총 174건)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계 강화】

- 한중일 국제협력 세미나, 두바이 감독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추진시 재경부, 한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특별히 제기된 문제는 없었음)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외환거래 조사결과 조치 건수	256건 이상	48.0% (122건)	외국환거래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06년상반기중)
감독제도 정비실적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및 외국감독당국과의 외 환 관련 양해각서체결 (2회 이상)	100%	외환거래 상시감시시 스템 및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두바이 감독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상반기1건)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금융허브 구축의 기반이 될 외국계금융회사의 영업활동지원과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감독차원의
지원기능을 제도화
- 외환자유화에 대응하여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및 외
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자료 입수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 금융감독기관간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06.3)을 통하여 외국감독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기반 마련
- 두바이 금융감독청과의 MOU 체결 등 외국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 주요 국가간 금융관련 이슈를 공유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유도

3.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3-1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서의 자본시장 역할 제고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고,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기업공개, 유상증자를 적극 지원·유도하고, IT·BT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직접금융시장의 역할 제고
- 신성장동력산업의 공모가(기업가치)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
-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채권장외시장의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딜러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통한 채권 수요기반 확대
- 채권장외거래의 실시간 공시체계를 강화하고, 분산되어 있는 장외호가를 집중

- 채권딜러가 채권이외에도 유가증권(CD, CP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거래(Repo) 대상 유가증권을 확대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선물거래의 편의성 제고, 건전투자 유도 및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한 선물시장 선진화
- 증거금제도, 매매·결제 시스템의 단일화하고,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하여 적용
- 상품성 있는 신상품 도입하고, 유동성공급 및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

【2】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의견수렴) 증권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 등 11개 기관 17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외증권 발행제도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06.5.3)

- 자산유동화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참여자 14인으로 T/F팀 구성* 및 운영('05.7~'06.4)

* 관련기관(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5인, 법률전문가 2인, 연구기관 1인, 시장참여자 6인 등 총 14인

- T/F팀에서 마련중인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05. 11)

- **(통계 및 사례조사)** CB·BW 등 해외증권의 발행통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06.4),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영국·일본 등의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 현황을 조사('06.5)함으로써 제도개선 의 충실성을 도모하였음

- 자산유동화 관련 해외 사례 및 국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통계 및 발행 환경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실시 내용>

- 외국신용평가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신용평가회사, 외국계 증권회사 및 증권연구원 등을 통하여 해외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제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98년 국내에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통계 및 발행 환경변화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영향분석)** 제도개선의 목표 설정·제약요소 및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한편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허용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 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06.6)

<협의내용>

제도 개선으로 인한 영향 분석, 실현가능성 및 비용편익 분석 등 제도 개선의 적정성을 총체적으로 검토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의견수렴) 채권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채권시장제도개선 T/F*를 구성(06.2)하고, 논의를 통해 13개 주요 검토과제 선정

* 금감위,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예탁결제원, 증권연구원, 채권연구원, 신용평가회사, 증권사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06.2~4월간 총 12회 회의를 개최

⇒ 13개 주요 검토과제에 정책과제(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를 포함

- (통계 및 사례조사) 검토과제별로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

<주요 해외사례 조사>

- 미국, 일본의 채권발행절차(기업실사절차, 로드쇼 등) 조사
- 채권전자거래시스템(ETS)의 유형 조사
- 미국의 채권수탁자 제도 및 일본의 채권관리회사 제도 조사
- 미국(Trace), 캐나다(CanPX)의 채권정보공시 시스템 조사
- 해외 부도관련 정보 DB화 조사(무디스 등)
- 미국의 신용평가시장(수수료, 신용등급의 신뢰성 등) 조사

- (영향분석) 채권시장 투명성제고 및 수요기반의 확대는 채권시장을 선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음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

< 그간의 주요 채권시장개선 정책방안 >

- '05.11 채권 및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재경부, 증권연구원)
- '04.12 채권유통시스템 개선방안 (금감원)
- '04.10 채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채권연구원)
- '04. 6 회사채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02. 7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방안 (금감원)
- '01. 6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재경부)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의견수렴) 선물시장종합개선 T/F* 구성후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05.3~6)
- (통계 및 사례조사) 기본예탁금 징수 및 유동성 부진품목에 대한 거래활성화 관련 미국 등 해외사례 조사(05.4)

<해외사례 조사 결과>

- 선물·옵션거래시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예탁금을 징수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 대개의 경우 회원사가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파악한 후 거래개시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

- (영향분석) 주식관련 선물과 일반상품관련 선물간의 증거금 제도 및 매매·결제시스템의 단일화의 경우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선물제도 및 시스템 단일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05.12)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정책수단 분석)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의 적용과 관련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규정상 명확히 하는 정책수단을 활용

- 중소기업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은 현행 자산유동화법 및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법률 및 규정 개정을 정책수단으로 선정

* 자산보유자의 자격요건 완화

- (부작용 등 대비) 제도개선의 실현가능성 및 비용편익 분석, 해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정책수단 분석)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정책수단)하여 유동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은 기업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정책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

- (부작용 등 대비) 채권시장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였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기업공개 실적	10% 이상 증가
선물 상장 상품수 증가 실적	100% 이상 증가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기업공개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한 실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함
- (측정 가능성 등)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금감위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성과측정이 가능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다양한 신상품 도입 및 상장폐지절차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제도의 개선 등 선물시장 선진화를 통해 선물시장에서 상장되는 신규상품 수가 증가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
- (측정 가능성 등) 선물 상장 상품수 증가실적의 경우 객관적인 통계로 측정 가능하며, 선물제도 단일화 및 상장폐지절차 개선, 기본예탁금 제도의 개선 등은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 가능

- (성과지표의 정책목표 달성도 측정 적합성) 선물 상장 상품수 증가실적은 실제 선물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목표치의 합리성) 기업공개 실적*은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 목표치를 선정

* ('03)11,024억원 → ('04)9,918억원 → ('05)13,015억원

- 과거 3년치 기업공개 실적은 11,319억원보다 높은 수치인 전년(13,015억원)대비 110%인 1조 4,317억원을 목표치로 선정

- (검증방법의 적정성) 계량적 검증방법('기업공개 실적' 통계 활용)을 채택함으로써 검증방법이 적정함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목표치의 합리성) 선물상품의 신규상장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음을 반영하여 1개이상 상품의 신규상장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3개년간 신규 상품의 상장이 없었고, 최근 선물시장 참가자의 신규상품에 대한 수요 및 현물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볼때 1개이상의 선물상품의 상장이라는 목표는 적합
- (검증방법의 적정성) 정량적 지표인 신규상장 상품수 증가율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며, 여타 정성적 지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증방법은 적정함

③ 시장개선사업추진실적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상반기내에 완료예정인 10개 과제 중 9개 과제가 정상추진되었으며, 1개 사업이 지연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채권시장제도개선 T/F를 일정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채권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추진일정 >

과제별 세부검토계획 확정(T/F)	2월초
과제별 검토(T/F)	5월초
검토결과 보완·정리	6월말
최종보고서 완성	7월초
공청회	7월말
제도시행	하반기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추진계획에 따른 차질 없이 진행 중임

< 주요 실적 >

- 유동성 부진 품목의 상장폐지 기준 마련 (4월)
 - 스타지수선물, 개별주식옵션, 5년국채선물 등 총 8개품목을 유동성 관리 품목으로 지정(6월)
- 엔선물, 유로선물 상장 (5월)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을 위한 업계 모범규준 마련(6월)
 - 3/4분기 중 증권·선물회사 시스템 반영 예정
- 선물 제도 및 시스템 단일화 기본방향 확정(6월)
 - 하반기중 세부 제도 및 시스템 반영 사항 확정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해외사무소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업무완수 전문지식의 취득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

* 런던 및 동경사무소 해외자료 조사('06.5.22)

** 해외증권 발행제도 관련 의견청취(삼성증권 등 11개 기관 17명, '06.5.3) 및 채권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예탁결제원, 증권연구원, 채권연구원, 신용평가회사, 증권사 등 15개 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06.2~4월간 총 12회 회의를 개최

-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에 정책 및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률전문가, 시장참여자 등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과제추진을 위한 내부 예산의 투입은 없었으며, 외부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선물 시스템 단일화의 경우 거래소 인력이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므로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 방향을 확정
-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방안의 경우 위탁자별 자금력, 거래유형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선물업자들이 협회와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여 업계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한 해외증권(CB, DR 등)이 단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되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해외 유가증권 발행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국내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기준 명확화 및 해외증권의 전환금지기간 단축요건 완화 등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채권시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T/F 운영 일정을 다소 연장하여 추가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중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선물거래 증거금제도, 매매·결제 시스템의 단일화는 상반기 안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여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자산유동화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재경부, 거래소, 협회, 연구기관, 시장참여자(증권회사,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와 협조 체제를 구축
 - T/F 종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

【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

-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은 이미 T/F에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시장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발표에 앞서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

<관련기관>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 증권업협회, 증권선물거래소
- 환매조건부채권거래대상 확대 : 예탁결제원

【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선물시장종합개선 T/F를 구성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증권선물거래소의 향후 선물시장에 대한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8개 품목을 유동성 관리품목으로 지정(06.6)**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기업공개 실적	10%이상 증가	75.9 %	10,870억원('06.5월 실적)/ 14,317억원('05년 실적×110%)
선물 상장 상품수 증가 실적	100%이상 증가	200%	엔선물, 유로선물 총 2개상품 상장 (6월말 현재)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해외증권발행 촉진을 위한 발행절차 및 방법 명확화를 위한 규정개정안 마련(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중)
- 신성장동력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실무가이드라인* 마련 중
 - * 복수평가 방식 채택 여부, 평가결과의 객관성·합리성 확보방안, 평가자의 책임범위, 실무가이드라인 활용방법 등을 검토중
- 장외채권거래 투명성제고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채권시장 제도개선방안 마련 중(7월)
- 엔선물·유로선물 상장(5월)하고 유동성 부진 품목의 상장폐지 기준 마련(4월)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채권시장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법령·규정 개정작업에 대한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방안들이 시행될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주식관련 선물과 일반상품관련 선물간의 상이한 제도 및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불편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을 제고하며, 증권투자 매매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산업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 추진
- ☐ 증권회사의 업무 다양화에 따라 리스크 규모, 관리 수준 등을 감안한 회사별 맞춤형 감독시스템 구축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 신용평가정보의 공시확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도입을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 청산·결제기능의 재편 및 통합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 ☐ 전산장애로 인한 매매거래 중단사태 발생 및 고객의 주문 지연 예방을 위한 매매거래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의견수렴 및 조사)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 및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증권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 재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관련 적시 대응을 위해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통합팀*을 신설('06.4)

* 팀장 1인, 반장 2인, 팀원 5명

- 증권회사의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전체 증권회사(54사)에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현황에 대한 질의서 및 조사양식을 발송하여 의견수렴 및 조사 실시(06.6)

< 의견수렴 및 주요 조사 내용 >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 개발 등 향후 계획
- 금감원의 리스크관리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
- 각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상 애로사항
- 각 증권회사가 필요한 금감원의 리스크관련 지원
- 금감원의 리스크중심감독(RBS)에 대한 건의사항

<리스크중심 감독제도(RBS, Risk Based Supervision)개요>

- 리스크중심 감독제도(RBS)는 **광의적 개념**으로는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과다유발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 및 검사시스템

* 경영실태평가는 과거성과를 평가, RBS는 미래지향적인 성격

- **실무적인 개념**으로는 금융회사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규모와 이에 대한 관리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高위험 부문에 감독·검사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효율적인 과정을 의미함

- 2000년 아서앤더슨의 「감독기능강화 컨설팅」 결과, 감독기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모범규준(Best Practice)인 RBS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각 금융권역별(은행, 보험, 증권)로 RBS체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각 금융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중에 있음

<주요국 리스크중심감독(RBS)체제 운영 현황>

- 미국(FRB, OCC) : 96. 2월 도입

* Framework for Risk-Focused Supervision of Large Complex Institutions

- 영국(FSA) : 03.2월 도입

* ARROW(Advanced Risk Response Operating frameWork)

- 일본(금융감독청) : 98.6월 도입 (통합리스크평가제도)

- 기타 : 호주(APRA), 캐나다(CSFI), 홍콩(HKMA), 네덜란드(RAST) 등이 운영 중

- (통계 및 사례조사) 미국 및 영국 등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조사

<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감독 해외 사례 >

- 영국(FSA)의 경우 '04.2월 감독목적의 RBS 최종방안*'을 제시하고, 리스크에 대한 4단계 등급으로 감독·검사주기 등을 차별화

* The firm risk assessment framework, 04.2, FSA

- 미국은 영국과 달리 은행은 FRB에서 증권은 SEC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04.8월 RBS추진*'을 공식 발표

* 2004-2009 Strategic Plan, 04.8, SEC

- (영향분석) 환경, 갈등, 성차별 등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음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의견수렴) 재경부와 합동으로 신용평가 T/F*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기초로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05.11)' 마련

* 재경부 은행제도과·금감위 증권감독과, 금감원 증권감독국/新BIS실, 연구기관, 관련업계, 수요자 대표 등 10인('05.8~10월)

- (통계 및 사례조사) 신용평가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국제권고안(IOSCO의 Code of Conduct ; 04.12 발표) 번역 실시

-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 평가 기준 조사 : 미국 SEC의 NRSRO*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평가

*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75년 도입)
현재 Moody's, S&P, Fitch, DBRS, A.M.BEST 등 5개사 지정

- (영향분석) 환경, 갈등, 성차별 등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음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재경부, 금감원과 공동으로 신용평가 T/F를 운영하고, 재경부의 '신용평가업규제 합리화' 정책에 대한 보완방안 차원에서 '신용평가의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연계성 확보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의견수렴) '05년 통합증권거래소의 출범에 따라 통합전 전산시스템을 각각 사용함에 따라 거래비용의 절감의 필요성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 전산시스템 통합을 추진
- (영향분석)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 정비를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에 없는 것으로 판단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정책수단분석)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이 추진('06.6 입법예고) 됨에 따라 법 제정에 따른 감독규정 정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금감원에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설치함
- 차별화된 리스크중심감독(RBS)은 금융기관 각각의 특성에 따른 위험을 감안한 맞춤형 감독 방법으로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서 필수적임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정책수단분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신용평가결과의 수요자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평가 등을 통해 신용평가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부작용 대비)** 신용평가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에 일부 부담(각종 보고의무 신설 등)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음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정책수단 분석)** 통합증권거래소가 현재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별개로 운영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에 비하여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 시장별 상이한 접속체계 및 성능수준으로 고객에 대하여도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 이에 따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효율화, 접속시스템 통합에 의한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하여 거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처리속도 확보 등을 통하여 고객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통합이 필요
- **(부작용 등 대비)** 동 전산시스템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회사별 전산운영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수준 미달인 증권회사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추진할 예정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신용평가사의 평가품질 감독강화 실적	100% 이상 증가
관련 인프라 정비 실적	증권회사의 리스크중심 감독제도(RBS) 운영방안 마련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금융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증권회사의 적절한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및 이에 대한 감독체제의 마련이 필수
 -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 마련 여부가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관련 인프라 정비실적의 적절한 성과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
- (측정 가능성 등)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의 수립 여부를 측정 가능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신용평가의 평가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여부를 성과목표로 선정
 - ⇒ 내부통제기준에는 1)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2) 독립성 및 이해상충, 3) 신용평가기관의 발행사와 투자자에 대한 의무 등 신용평가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

- (측정가능성)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글로벌 내부통제기준 충족여부를 항목별(약 52개 항목)로 평가하여 모든 항목이 충족될 경우에만 '완료'로 측정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목표치의 합리성) 증권회사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 감독대상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 우선적으로 제도운영 방안 마련 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제도운영 방안 마련 여부가 우선적 목표임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증권회사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 마련 여부를 보고·결재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 가능함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목표치의 합리성)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신용평가회사의 내부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시행 첫 해에는 우선적으로 4개 신평사중 1개사 이상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성과목표치를 설정
- (목표치의 근거의 명확성) 우선 시범적으로 특정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유도
- (검증방법의 적정성) 3개 분야(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 및 이해상충, 신용평가기관의 발행사와 투자자에 대한 의무 등) 52개 항목의 충족여부로 검증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 일정에 맞추어 적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
 - * 자본시장통합법 신설(06.4)
- 하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한 증권회사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세부추진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음

< 주요 실적 >

- 증권회사 리스크중심감독(RBS) 추진방안 마련(5월 ~ 6월)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관리능력 강화방안 마련 계획(8월)
 - 증권회사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 구축완료 예정(11월)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실시(6월)
 - 증권회사 리스크관리실태 분석 예정(7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신용평가회사 품질관리방안은 7.1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하반기 사업)

< 추진일정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 7.1일
- 협의회 구성(금감원, 신용평가회사, 자산운용협회 등) : 8월~9월
- 신용평가회사 품질관리 시행방안 마련 : 11월
- 관련 법령 개정 : 12월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투자자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는 대부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 증권선물거래소 IT통합은 종래 정보전략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객관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외부용역을 추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다소 지연

< 주요 실적 >

- '06.2.9. 거래소 IT통합추진위원회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
- '06.4.24. KRX 차세대시스템 구축관련 연구용역 주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선정
- '06.6.13. KRX 차세대시스템 구축관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 발표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에 대비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이는 통합법상 기능별규제원칙에 가장 적합한 감독자원배분으로서 자본시장통합 TF팀의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주요정책과제를 적절히 집행
- 리스크중심감독(RBS)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양식을 증권회사 리스크담당부서에 발송하여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하여 업계의견 등을 수집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 한정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검사담당부서 등 내부 리스크전문그룹의 조사자료 등을 적극 활용

【신용평가회사의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국내·외 신용평가회사, 자산운용협회 등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협의할 예정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투자자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용역 계약, 자체 전문인력 활용 등으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수행

④-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하였음
- 법 제정과정에서 업계간·업종간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 조사,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통합법 제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투자자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외부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

* IT통합 관련 외부업체(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연구 용역(4월)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업 감독제도 정비】

- 재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행일정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금감원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직을 통하여 재정부, 유관협회, 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재정부는 법령 제·개정시 금감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감독규정 및 감독조직 개편관련 금감위 의결시 재정부가 금감위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 매매시스템 정비】

- 투자자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신용평가사의 평가 품질 감독강화 실적	100%	-	-
관련 인프라 정비 실적	증권회사의 리스크 중심감독제도(RBS) 운영방안 마련	50%	-

(신용평가사의 평가품질 감독강화 실적)

- 신용평가의 평가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100%이상 달성할 계획

(관련 인프라 정비실적)

- 증권회사별 맞춤감독을 위하여 전체 증권회사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 현황조사 및 의견 수렴(6월)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재경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함으로써
 - 법제정·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제공백을 해소하는데 노력
- 재경부의 법제정일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감원내 자본시장 통합법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 투자자 거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외부 컨설팅 및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시스템 정비작업의 근간이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증권·선물시장 운용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외부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공시인프라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 준비현황을 점검하며 공시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시 불편해소 및 투자자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공시시스템·인프라를 개선
- ☐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도입하여 기업공시 투명성 및 재무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확장성 기업보고 언어)의 줄임말로 기업정보의 국제적 통용 및 신속한 D/B 구축을 위하여 '99년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국제 표준 전산언어임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준비현황 점검 및 지도】

- ☐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중소·벤처 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토록 지도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 공시관련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이 올바른 공시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XBRL 공시시스템 구축 현황

1. 추진배경

- ☐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업 재무정보의 활용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

*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로서 미국, 유럽 등에서 기업재무보고용으로 도입중인 Global Standard

** 특히, 2001년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도입 확산

- 우리 원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고, 재무DB의 실시간 구축, 재무사항 신속 스크린 등을 위하여 XBRL을 도입할 필요

2. XBRL의 개념

가. 등장배경

- ☐ 재무정보는 작성연도나 기업마다 계정과목이 달라서 기업간 비교나 공동 이용, 재활용 및 DB 자동생성 등 곤란
- 재무정보의 작성과 유통, 분석 등에 적합한 국제표준 규약을 제정·적용하여 재무정보 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나. 개념

- ☐ XBRL은 재무정보에 표준화된 문자태그(Tag)를 달아서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재무정보를 신속하게 검색·비교·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제표준 전산언어
- '99년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의 지원아래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제정,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등 12개국에 지부 설치

3. 도입효과

구분	효 과
감독기관 (금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정보에 대한 신속 스크린 가능(재무제표 접수 당일 DB 구축 완료 가능) ○ 다양한 감독수요에 대응하는 재무분석자료의 제공으로 감독역량 강화 ○ 감독정책자료의 체계적 축적·관리
정보이용자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접수 즉시 기업가치 신속분석 가능 ○ 검증된 재무제표 공시로 정확한 기업분석 가능 ○ 영문재무제표 공시로 해외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생산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 채택으로 회계투명성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기재금액의 자동검증 및 재무제표 참조제출 방식을 통한 작성부담 경감 ○ 재무정보를 다양한 용도(예, 감독기관 신고용, 세무 신고용 등)로 재사용 가능

4. 개발대상업무

☐ 대상 공시서류

- 정기공시서류(사업/반기/분기보고서) 내의 재무제표

☐ 개발업무

- XBRL 재무제표 작성시스템
 - 제출인의 XBRL 문서작성을 지원
- XBRL 재무제표의 접수 및 공시시스템
 - 인터넷으로 XBRL 문서를 접수/공시
- 재무제표의 실시간 DB 생성 및 분석시스템
 - 재무제표 접수즉시 DB 자동생성 및 각종 분석자료 제공
- 재무제표 참조제출시스템
 - 보고서 제출시 기왕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참조방식으로 첨부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의견수렴) 2006 계획수립시 2005년 중 각종 상장기업 및 공시작성자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시장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 의견수렴 내용 >

- *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공시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05.12)
- 2005년도 공시담당자 수료자 891명중 606명(68.0%)을 대상으로 연수관련 사항 및 공시담당 업무수행시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6 계획수립시 반영

- XBRL 공시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005년 계획수립시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과 T/F를 구성하여 XBRL 도입취지, 추진계획 등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 (통계 및 사례조사) XBRL 공시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수립시 선진 감독기관의 XBRL 도입 사례를 조사하였음
- * 미국 SEC 및 FFIEC, 일본은행 및 금융청, 유럽 CEBS(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등
- (영향분석) XBRL 공시시스템은 기업 등 제출인에게는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기업가치를 분석에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이므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XBRL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과 XBRL 도입취지, 추진계획 등을 협의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준비현황 점검 및 지도】

- **(의견수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대상 법인의 공시실태 및 준비상황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증권집단소송 관련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설문조사 내용 >

-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구성여부, 공시위반사례 등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04.12)
- 충분한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소송에 대비한 기업들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정확한 공시서류의 작성을 위한 감독당국의 교육·홍보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

< 세미나 내용 >

- 상장·코스닥법인의 관련 임직원과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05.2.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최)」를 개최하고,
-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과 과제, 증권집단소송과 기업 공시시스템 정비방안, 증권집단소송제도와 회계인프라 정비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

- **(통계 및 사례조사)** 증권집단소송관련 국내 판례가 없음을 감안, 외국판례 중 공시위반 사항에 대한 피소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계획 수립시 참조

< 사례조사 내용 >

-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주요사례와 시사점('06.2.23,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발간)」 등을 활용하여 외국사례 수집

< Survey 내용 >

-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회사 및 협회 직원들이 참여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Survey한 후 계획 수립
-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600여명 참석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주관 증권집단소송 관련 교육시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Survey 실시

- **(영향분석)** 금융교육 활성화의 경우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의견수렴)**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교육·홍보 담당자의 의견 청취
 - *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교육·홍보 담당자와 관계 실무자 회의 개최('06.6)
- **(영향분석)** 금융교육 활성화의 경우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등으로 내실있는 연수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원
 - *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교육에 참석한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06.6)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정책수단 분석)**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인프라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전자 공시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 적절함
- **(부작용 등 대비)** XBRL 공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의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시스템 전면가동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정책수단 분석)**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법인이 정확한 공시서류의 작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및 공시모범규준 제정 등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공시위반비율	0.10% 이하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제정 등 연중 20회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기업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시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상장사들의 공시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 공시업무 능력이 향상되면 상장기업에 의한 공시위반비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가 명확함
- (측정 가능성 등) 공시위반비율,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등은 금감위 자체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함
- (성과지표의 적합성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시위반비율,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등 최근 공시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성과지표를 현실성 있게 계획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공시위반비율은 3년 평균 실적치(0.10%)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목표치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 (검증방법의 적정성) DART시스템을 통해 입수된 객관적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함에 따라 목표달성 검증방법이 적정함
 - XBRL 공시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업은 재무자료 작성부담의 경감을 이용자는 기업가치의 신속한 분석으로 편의성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성과목표치의 측정은 DART 조회실적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객관적 측정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 지연업무는 2건*(3/4분기중 완료 예정), 연중 추진과제 2건은 원활히 진행중

*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집단소송 준비상황 점검 및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 내부 공시시스템 구축·공시업무 전문인력 확보·관련조직 정비 등 유도

- 2건의 경우는 관련 T/F팀 구성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을 위해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음
- XBRL 공시시스템은 '06년말을 목표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중임

「XBRL 공시시스템 구축」 진척상황(6.30 현재)

* : 개발기간, % : 공정률

No	일정(월) 시스템	4	5	6	7	8	9	10	11	12
①	XBRL 재무제표 작성	80%				시험가동				
②	XBRL 접수 및 공시	80%				시험가동				
③	재무DB 생성 및 분석		30%							시험가동
④	재무제표 참조제출					0%			시험가동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XBRL 공시시스템 개발업체 선정시 기술 및 가격평가 등을 통하여 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한정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준비현황 점검 및 지도】

- **(투입시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2007)되기 전 기업의 올바른 공시서류의 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적시에 지속적으로 인력 투입
- **(집행규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한된 집행규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

< 외부인력 활용 내용 >

- * 2006년 1/4분기 주식업무담당자 업종별 정기모임 개최 (1.23~24)
- * 공시제도 개정내용 전국 순회설명회 (1.23~24 / 2.6~8)
-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수정 안내 및 권유 (2.13)
- *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주요사례와 시사점 발간(2.23)
- * 증권집단소송과 기업의 대응전략 발간(월보 2월호 기고)
- *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발간(2006.1)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관리방법)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공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강사 인력을 투입하고 팀별로 균등하게 강사를 배분하여 업무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을 관리

< 인력 투입 및 관리 내용 >

- * 2006년도 주주총회 운영대책 특별연수(1.17~18)
- * 코스닥상장법인 주주총회 특별연수(2.2)
- * 2006년도 제1차 공시담당자 전문과정(2.15)
- * 제3차 코스닥 상장예정 법인 특별연수(2.23)
- * 2006년도 제1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4.11)
- * 제51기 주식전문연수(4.24~25)
- * 제2차 증권관련법규 특별연수(5.10)
- * 제52기 주식전문연수(5.10~11)
- * 2006년도 제2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5.16)
- * 2006년도 제3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5.19)
- * 프리보드 지정 설명회(5.25)
-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해설 특별연수(5.25~26)
-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해설(6.8)
- * 2006년도 제2차 공시담당자 전문과정(5.25)
- * 2006년도 제4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2)
- * 2006년도 제5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14)
- * 2006년도 제6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16)
- * 제13기 주식전문연수(6.20)
- * 2006년도 제7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28) 등 총 19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인프라 정비를 통해 공시부담 경감과 이용 편리성 제고】

- XBRL 공시시스템 개발시 XBRL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미국 본부*의 XBRL 개정 상황과 SEC 등 선진국의 XBRL 시범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국제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 추진

* XBRL International

【상장법인의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준비현황 점검 및 지도】

- 증권집단소송제도 전면시행('07.1)을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공시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 있는 공시정보가 투자자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T/F팀 구성('06.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구축 및 관련조직 정비 등을 위한 T/F팀 구성('06.6)

*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시교육시 증권집단소송 세부내용 및 외국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실시('06년중 16회)

-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회계처리 수정관련 감리제외지침 설명회 (2.21)

- 2006년도 회계현안과 달라지는 주요 회계처리기준 해설 (3.9)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실무” 특별연수 (4.11~12)

- 2006 상장회사 회계업무책임자 Workshop (5.19~20)

- 2006년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해설 특별연수 (5.25~26)

- 2006년도 제1차 공시담당자 전문과정(2.13)

- 2006년도 제2차 공시담당자 전문과정(5.25)

- 2006년도 제1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4.11~12)
- 2006년도 제2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5.16)
- 2006년도 제3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5.19)
- 2006년도 제4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1~2)
- 2006년도 제5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13~14)
- 2006년도 제6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16)
- 2006년도 제7차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6.28)
- 제2차 증권관련법규 특별연수(5.10)
- 제13기 주식전문연수(6.20) 등 총 16회

【기업공시관련 교육·홍보 강화】

- 수시공시 제도개선('06.4월 시행) 등 변화하는 기업공시관련 제도에 대해 상장기업 공시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홍보활동을 강화
- 「기업공시 실무 가이드라인」 및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 안내 및 공시 모범사례집」 발간 등 기업의 정확한 공시를 위한 종합적인 공시실무지침 체계를 구축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 업계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상장사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수정보완시 가이드라인 제정 T/F 구성원(상장협, 코협, 상장회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후 내용 확정
-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초안을 상장협 등 T/F구성원에게 송부하여 의견수렴('06.2월 중)

- XBRL 공시시스템 개발과정에서 한국 XBRL 지부,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조체제 구축

* “DART시스템의 XBRL 도입 관련 1차 T/F” 회의 개최 (‘05.11.3)
- 총 23개 기관에서 49명 참석(금감원 부원장 및 은행연합회장 등)

** XBRL 계정 표준화를 위한 회의실시(‘06.5.24, 공인회계사회 등, 총 3회)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공시위반비율	0.10% 이하	111%	○공시위반건수(A) : 43 ○공시건수(B) : 43,956 ○공시위반비율(A/B) : 0.09%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기업공시 실무가이드 라인 제정 등 연중 20회이상	95%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제정 및 상장회사 배포(4월) ○ 상장협 등 유관기관 공시교육 프로그램 강사 지원(19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하여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유관기관 공시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를 지원**하는 등 **공시관련 교육·홍보활동을 강화**(시행과정의 효율성 참조)
- 기업들의 정확한 공시서류 작성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무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자 위주의 기업공시**」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
 - * 올바른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제정·운영방안('05.4.14)
 - *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안내 및 공시모범사례집」('06.1), 「기업공시 실무 가이드라인」('06.4)
 - '05년 이후 제도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공시관련 법규 전반에 대한 일관적인 설명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관련 자주 질문되는 내용(상담센터) 중 전형적인 것과 발행·공시관련 규정 중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증보판을 발간**
 - * '05년 이후 질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 발굴('06.2.13.~2.28.)
 - * 공시감독국에서 가이드라인(안) 마련('06.3.2.~3.10.)
 - *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 및 확정('06.3.13.~3.22.)
- 2007.1 전면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공시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지도 및 교육실시
 - *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T/F팀 구성('06.6)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구축 및 관련조직 정비 등을 위한 T/F팀 구성('06.6)
 - *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시교육('06년중 19회)시 증권집단소송 세부 내용 및 외국 주요사례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실시

- ‘재무제표의 작성·분석·유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XBRL* 공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06.10월 개발완료를 목표로 6월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스템은 8월에 시험가동 예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소·벤처기업의 증권집단소송 준비상황 점검 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업내부 공시시스템 구축, 공시업무 전문인력 확보, 관련조직 정비 등 유도
- XBRL 시범가동시 상장회사들의 재무제표를 XBRL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상장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장회사들의 XBRL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감리방식 도입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 수용 전략(Road Map) 마련

* 주요쟁점과 관련한 외국사례조사, 외부연구용역 발주(2월) · 접수(5월)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총12차례 회의 개최 (본회의 5회, 실무반회의 7회)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 감리결과 증선위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 ☐ 감리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공시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를 금감위가 정하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한하여 공시 및 통보하도록 개선
- ☐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재무사항 심사를 통한 분식 혐의 사항 적발기법」의 향상을 도모하고 「감리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실무지침(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조치감경))을 동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악용 소지를 최소화
-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수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모든 상장사에게 발송하고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적극 유도
-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스크린(형식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정착 도모】

- ☐ 시험응시 자격, 부분합격제 등 새로운 공인회계사시험의 원활한 정착과 수험생 편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2】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의견수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로드맵 시안을 검토

*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학계, 회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5차례 회의 개최

* T/F(5회) 및 실무작업반 회의(7회)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수용시기, 연결의 주재무제표 채택에 따른 제반 개선사항,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실무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통계 및 사례조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사항 파악 등을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2월) 하는 등 다각적 사전조사를 수행

<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해외 국가의 사례 조사내용 >			
국가	시기	방식	의무화대상
EU (영국, 독일 등)	2005	IFRS (EC 채택)	상장회사 연결재무제표
호주	2005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 ("AIFRS")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법의 보고대상회사
싱가포르	2003	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S")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법의 보고대상회사
미국	2008~10 예상	IFRS	상장회사 예상
캐나다	2011 계획	IFRS(IASB 제정)	상장회사 예정
중국	2007 계획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CAS")	상장회사 예상

- **(영향분석)**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경우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는 관련기관인 재정경제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고, 관련기관 담당자들로 T/F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의견수렴)** 2005년 하반기중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감독당국, 학계 및 회계업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T/F 운영

- (통계 및 사례) 2006년도 감리계획은 지난해 실적, 변경된 감리기법(표본감리→심사감리후 협의기업정밀감리) 및 국제적인 회계 감독 강화 추세(사례연구) 등을 감안하여 수립
- (영향분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시장 신뢰성·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품질관리 감리 수행의 필요성 등을 재정부와 협의

* 협의내용 : 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외감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으며, '06.3 시행령 개정

- 감리결과 제재조치권 및 기타 제도개선방향과 관련하여서도 금융법학회 등 외부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6월)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이 마련될 경우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협의 및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의견수렴)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방침과 관련하여 국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실시
- (통계 및 사례조사) 지난 1년간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방침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정책보완을 위해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이메일 등을 통해 2주간('05.11.22~11.31) 정책 고객 서비스 대상자 설문조사 실시

- 감리실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례 및 유형 분석(매년 실시)
- **(영향분석)** 과거분석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방침의 경우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동안 회계투명화를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의견수렴)**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공인회계사법을 개정(03.12)하여 새롭게 도입된 시험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정책으로 법 개정 시 공청회 등 주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여 “2007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2005.6)하였음
- **(통계 및 사례,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차질 없는 시험 준비를 위하여 미국 공인회계사(AICPA)시험의 사례연구, 응시자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케이스 검토 실시

- * 공청회,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사례연구 및 재정부 협의결과 제기된 문제와 그에 대한 실시 대책(법령에 반영)
- 응시원서와 시험서류의 분리 필요 ⇒ 분리토록 법령 개정
 - 부분합격제의 유효기간에 대한 논란 제기 우려 ⇒ 명백하도록 법령 개정
 - 서류접수에 대한 방법, 절차 등 공지 필요 등 ⇒ 세부사항은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토록 법 개정

- “2007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을 근간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법시험 등 국내 시험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각 대학 등 교육기관, 학점인정기관, 영어 시험시행기관 등과 협의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정책수단 분석)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EU 중심으로 수용되어온 “국제회계기준(IFRS)”이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

* EU, 캐나다, 호주 등 약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할 예정

-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수용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회계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 등이 고려되기 어려우므로 점진적인 수용을 위해 로드맵 마련을 추진

- (부작용 및 환경변화 등의 고려)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을 T/F를 통해 충분히 고려(6월 현재 T/F 5차례, 실무회의 7차례 개최)하여 최적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정책수단 분석) 감사보고서감리 실시방식을 종전의 ‘일반감리’ 방식에서 ‘심사후 정밀감리’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반행위 억제기능 약화될 우려(단점)가 있는 반면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감독의 사각지대 축소 가능(장점)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품질관리감리를 증선위/금감원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사전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
- *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감독당국, 학계 및 회계업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T/F 운영하며 논의
- (부작용 및 환경변화 등의 고려) 금융법학회 등 외부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6월)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

* “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실시”로 사전적 감독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되고, “정기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의 확대실시”로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정책수단 분석)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시 감리를 제외하는 방안은 (장점)단시일내에 회계투명성을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으나 (단점)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할 우려
- (부작용 및 환경변화 등의 고려) 작년도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에서 제기된 실무지침 악용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 동기 등에 따라 감경폭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06.2)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부작용 및 환경변화 등의 고려) 대부분 시험업무를 인터넷 기반으로 처리키로 함에 따라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수험생 등에게 홍보 기능은 물론 시험업무처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여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연계망 : 재정부, 전국 대학(증명서 발급처 및 고시반), 한국교육개발원, 독학 학위검정원, 영어시험 시행기관(한미교육위원단, 한국TOEIC위원회, 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 등

* 수험생이 “2007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을 정확히 이해하여 시험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홍보, 보도 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이외에 “2007년도 시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각 학교 또는 지역별 시험제도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실시비율	13.3% 이상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실적	· 실무의견서 제정·시행 : 5건 이상
	· 회계관련 질의회신 처리 : 250건 이상
	· 재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 20회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감리실시비율 증대를 통해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사 확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회계기준서와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실무의견서를 제정하여 적절한 회계처리 및 감사품질 유지를 지원
 - 기업 CEO, CFO 및 재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과거회계처리 위반사항 자발적 정정유도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가능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회계감리 실시, 회계제도 개선 및 관련 교육·홍보의 실시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는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라는 상위 정책목표와도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음
- (측정가능성 등) 성과목표는 도입여부, 실시비율, 개선내용 및 교육·홍보실시 횟수 등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게 설정
- (달성정도 측정 등) 성과지표 또한 비율, 횟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과거의 통계자료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 민원처리, 정례브리핑, 보도 자료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의 Q&A, 정책고객 관리(PCRM)을 이용한 시험정보의 제공, 서류접수·처리의 경우 모두 계량화되어 측정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목표치는 감리실시비율의 경우는 최근3년 평균치 이상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있고,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실적 또한 과거의 제도개선 실적 및 교육·홍보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
 -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실적(시험민원 30건, 보도홍보 5회 및 정보제공실적 3,580건)을 기준으로, 민원은 난이도 조정관련 집단 민원이 있었기에 이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보도홍보 강화의 필요로 횟수를 증가시켜 목표치를 설정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설정근거는 최근 3년간의 감리실시비율 통계와 최근에 변경된 감리방식의 변경 및 교육·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검증방법의 적정성) 목표달성 검증은 비율, 횟수 등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고,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으로 실적이 대외에 표시되는 사항이므로 평가 및 검증이 매우 용이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은 당초 일정계획에 따라 T/F구성 및 주요과제별 예상쟁점과 대응방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3사분기 내 로드맵 시안을 마련할 계획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품질관리감리업무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감리절차·방법에 대한 외감규정 개정을 마치는 등 품질관리감리업무 실시를 위한 기본 준비를 2/4분기내에 완료
 - 3/4분기 이후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Pilot Test를 실시하여 매뉴얼 수정 등 내년이후 본감리를 충실히 준비

* 주요일정계획 대비 추진현황

- 감독당국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근거 마련 : 06.3 완료
- 구체적인 감리절차 등에 대한 외감규정 마련 : 06.6 완료
- 품질관리감리 실시 매뉴얼 마련 : 06.6 완료

- 제재조치권 및 조치결과 공표 등의 합리적 개선은 업무추진 환경의 변화*로 당초안의 추진시기가 다소 수정되어 진행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과거분식 자발적 수정 교육·홍보 및 실무적용의견서 작성 등은 연중 수시로 추진 중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일정대로 실시하고 쏘 상장사에 대한 자발적 수정을 촉구하는 안내서한을 발송

*** (강의)**

06.2.13.상장사협의회 외감법 및 외감규정

06.2.21.상장사협의회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06.2.28.코스닥협의회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06.3.31.(경희대) 기업경영에서 회계지식의 중요성과 회계전문인의 역할

06.5.20.(상장사협의회) 상장기업과 관련된 향후의 회계감독정책

06.6.9.(산업은행) 회계분식유형과 발견기법

(설명회)

06.2.20.(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설명회

06.2.20.(상장회사협의회)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촉구 설명회

06.2.28.(코스닥상장협)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촉구 설명회

06.6.29.(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대표이사와의 조찬감담회

(기타)

06.2.7. (국회) 회계감독당국의 회계투명성 확보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06.2.8. 과거회계기준 위반사항 조기수정 촉구서한 발송

06.5.19. (국민경제자문회의) 회계분식 및 감리와 증권집단소송

(실무의견서)

06.5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법적용여부(2006-1)

06.5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회계처리(2006-2)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2007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의 주요일정 및 분기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중임

< 주요 실적 >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 공개(2월)
-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및 시험 문항수를 변경하여 발표(3월)
- 2006년도 시험 원서접수, 제1차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1월~4월)
- 전국 대학에 학점취득증명서 발급 등 협조 공문 발송(3월)
- 2007년도 시험 대비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접수 개시(4월) 및 금년도에는 연중 지속 접수
- 2007년도 시험제도 설명회 등 홍보계획 발표(5월)
-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된 과목에 대하여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2월, 4월, 6월)
- 2007년도 시험 서류접수계획 마련(6월, 7월초 공고예정)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투입시기)**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로드맵 마련시 T/F구성, 실무작업반 구성, 외부연구용역 발주 등의 예산·인력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관리방법)** 실무작업반의 구성을 (1반)국제회계기준 도입전략등, (2반)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채택을 위한 과제검토, (3반)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 분석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사후관리)**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T/F의 개최 및 진행을 당초 계획시부터 추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매 T/F에서 다음 T/F의 주제 및 개최 필요성을 결정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투입시기) 감사보고서 감리의 경우 감리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친 이후 심사감리 대상회사를 분할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관리방법) 심사감리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부서단위 심사조정회의를 도입하는 등 인력자원의 효율적 집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사후관리) 선정회사의 감리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진행을 촉구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졌음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투입시기) 연중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과거분식 자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전 집중적으로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과거분식 해소 촉구서한 발송
- (관리방법) 06.2.9. 「투명회계 유도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정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신청자의 신원은 익명을 보장
- (사후관리) 「투명회계 유도 상담코너」에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회 및 강의 시 적극 전파하여 상담업무에 투입된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투입시기) “2007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의 필수조치사항의 부분 이행으로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을 신설하고, 4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인력자원을 적시에 투입하였음

- 또한, 전년도 시험관리비용으로 배정된 예산을 금년도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2007년도 시험 관련 해서는 세부실천방안의 추진계획에 따라 적시에 집행함
- **(관리방법, 사후관리)** 예산은 사업품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부서 통제하에 적절하게 처리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제도개선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여론, 법원의 판결, 세계시장 환경의 변화 등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맞추어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

* 증권거래법상 자산2조원이상 대기업은 2007년 사업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시 도입시기를 회사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준비가 된 해외상장기업 및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 :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EU 중심으로 수용되어온 “국제회계기준(IFRS)”이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로 EU, 캐나다, 호주 등 약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할 예정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상반기 중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독 효율화를 위하여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외감법 개정(제제조치권 개선)을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

※ 감리실시 및 교육·홍보의 경우 현재까지 행정여건·상황의 변화 없음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시행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실무지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수정 동기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들(언론, 참여연대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감리제외(조치감경) 관련 실무지침”을 수정
 - 검찰수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으로 인한 수정 등 사실상 비자발적인 수정인 경우에는 감리실시
 - 고의적인 위반사항, 특히 횡령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폭을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공인회계사시험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그 기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나 이는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해야 해결할 수 있어 금년도 하반기 법령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요청함

-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시험 관련 이슈를 살피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집단 민원이 있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함

* 최근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 2학기성적 인정 어려움 문제”가 이슈화되어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협조 요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해결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마련 및 회계기준 이해도 제고】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이 필요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는 관련기관인 재정경제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고, 관련기관 담당자들로 T/F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학계, 회계업계 대표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를 개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감사 사전 방지】

- 2005년 하반기중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감독당국, 학계 및 회계업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T/F 운영하였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재경부와 협의한 결과 직접실시 법적근거를 마련(06.3)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감리제외(조치유예)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협,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지속 실시 및 자발적 수정 촉구서한 발송 등
-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사에 대한 위탁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감리제외(조치감경) 관련 실무지침”을 적용하여 비상장사의 과거분식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고 있음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재경부 및 법제처와 협조관계 유지

- 또한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여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보, 협조 체계를 구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실시비율	13.3% 이상	49.6%	105/1,592 = 6.6%
제도개선 및 교육 · 홍보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의견서 제정·시행 : 5건 이상 · 회계관련 질의회신 처리 : 250건 이상 · 재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 20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건 제정 (40%) · 149건 회신 (59%) · 12회 실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의견서 - 관련 품의문서 - 강의요청 등 관련 문서

* 상반기말 현재 감리 실시비율은 6.6%로서 목표치 13.3%의 49.6%로서 50%에 미달되나 상반기에 착수된 기업의 감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실무의견서의 경우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 총 4건이 현재 검토 진행중인 점을 감안시 당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우리기업의 현실 및 회계여건을 감안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T/F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 지금까지 T/F회의 5회, 실무작업반 회의 7회 등을 통하여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으며, 7월중 시안을 확정할 예정임

- 감리제외(조치유예) 방침에 대한 교육·홍보 지속 실시 및 자발적 수정 촉구서한 발송 등 우리기업의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을 적극 유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품질관리감리 매뉴얼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품질관리감리 실시체계를 확립
- 12월 결산 상장법인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의 형식상 미비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자진수정 등을 요구
-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시행방안을 근간으로 하여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을 신설하고, 수험생에게 시험정보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2007년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4/4분기 및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는 3/4분기 중에 미리 시험서류를 제출하도록 독려 필요
-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기존의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각 학교 등 교육기관(고시반 포함)에 협조를 요구하고, “시험 홍보 계획”에 따라 안내책자를 인쇄하여 수험생에게 다가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험생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1. 실시배경

- ☐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시행
 - ※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개별 감사업무 수행시 동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2. 금융감독당국 직접실시 대상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대상

- ☐ 직접실시대상 : ①외부감사법인 중 상장법인수가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또는 ②자산규모 1조원이상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③소속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④ 기타 직접실시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실시가 필요한 감사인
- ☐ 위탁대상 : 상기 이외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종전과 같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3. 운영방향

- ☐ 제제조치 근거 마련 전까지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참고 >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Road Map 마련 추진

1. 현 황

- ☐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EU 중심으로 수용되어온 “국제회계기준(IFRS)”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
 - EU, 캐나다, 호주 등 약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할 예정
 - 미국, 일본 등은 자국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상호합치(Convergence)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
-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

2. 필요성

- ☐ 글로벌화된 경제체제하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
 - 국가간 및 기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제고 필요
 -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및 해외 경제활동이 많은 다국적기업 등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완화 필요
- ☐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자금조달 지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 선진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선언에 대한 대응 필요
 - 세계경제의 블록화(예: EU) 및 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고유의 상황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3.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주요 검토과제

①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기준 항목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검토

②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도입전략 검토

- 상장, 비상장 및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의 수용능력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측면에서 차등화 여부 검토
-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Full adoption, Equivalence, Comprehensive adoption) 도입 시기(단계별 도입방안) 검토
- 국제회계기준의 법적 효력 부여 방법 검토

③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주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함에 따른 제반 개선사항 검토

④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및 감리체계 개편 검토

-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회계실무 및 감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처리 방안 검토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체제 구축 검토

- 국제회계기준 제·개정시 우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IASB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

⑥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역할 변화 문제 검토

- 국내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해 질 경우 회계연구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

4. 중소기업 및 금융이용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4-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경제 양극화현상으로 대·중소기업간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대출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신용평가상의 애로 타개 및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및 활용도 증대
- ☐ 공공정보의 집중·공유를 통한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이용 확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 ☐ 저축은행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강화
- ☐ 거래형 대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한 거래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등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도모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의견수렴) 규개위를 중심으로 재경부, 금감위,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할 공공정보를 확정*

* '05.8.24.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4대 공공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체납정보를 집중하기로 최종결정

- (통계 및 사례조사) 동 장관회의 과정에서 실무회의를 수차례 하는 동안 CB활용도 등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 CB 정보 중 가장 필요한 기업군(KDI 설문조사)

- ① 소상공인(14.9%) ② 소기업(31.8%) ③ 중기업(51.6%) ④ 대기업(1.7%)

* 기업CB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KDI 설문조사)

- ① 이용 필요성이 없음(8.4%) ② 대부분 해당기업의 정보가 없기 때문(55.4%)
③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20.2%) ④ 기업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함(10.8%)

* 기업CB 활용도(KDI 설문조사)

- ① 금융공급 결정의 보조자료로만 활용(57.7%)
②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요소의 일부로 고려(31.3%)
③ 신용평가의 절대수단(2.0%) ④ 거의 활용 안 함(9.0%)

* 기업CB가 제공하는 정보수준에 대한 불만(KDI 설문조사)

- ① 기본정보(재무정보등)의 투명성-정확성 부족(41.9%)
② 평가대상 기업수 부족(32.4%) ③ 다양한 부가정보(공공정보 등) 부족(37.8%)
④ 정보의 적시성-신속성 부족(58.8%) ⑤ CB사의 가공능력 부족(14.7%)
⑥ 정보오류에 따른 보상제도미비(6.6%) ⑦ 비싼 이용료(2.1%)

* CB(Credit Bureau) :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 등의 신용거래 내역 및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DB화하고 이를 평가, 가공하여 금융회사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집적기관

○ (영향분석)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주요 공공정보를 집중하여 신용정보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집중대상 공공정보 선정시 행자부, 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

*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05.26)'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 (의견수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저축은행 지부장 간담회 등 상시적인 의견교환 채널을 통해 수렴한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저축은행 지부장 간담회('06.2월) : 저축은행중앙회 임원 및 지부장 (11개 저축은행 대표), 비은행감독과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업계동향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 등 수렴

○ (통계 및 사례조사) 동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과거 중소기업 대출 취급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선진국 사례조사 실시 중

○ (영향분석)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저축은행의 정책자금 취급을 위해 금감위, 중기청, 중진공, 저축은행중앙회와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토론회’('06.2.15. BH 서별관)에서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의견수렴) 금감원내 설치된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을 통해 채권은행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연중 수시)

* '04.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도입과 동시에 금감원 신용 감독국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인터넷문의, 전화문의 등 워크아웃 관련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 담당

- 워크아웃제도 관련 금융기관 임원회의 개최('06.3월)

- (통계 및 사례조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사례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영향분석)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봉착한 우량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동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는 등('05.12월 채권은행 협약 개정)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정책수단 분석)** 그간 신용정보 및 평가자료 부족으로 인해 기업 대출 및 투자결정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담보대출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투자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CB(Credit Bureau)의 설립 및 공공정보 집중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
 - 동 인프라가 활성화되는 경우,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은행이 기업신용평가지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전망
- **(부작용 등 대비)** 신용정보업의 활성화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보호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05.11월)하여 적용토록 권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 **(정책수단 분석)** 중기청 및 중진공 등 정책자금 주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축은행 정책자금 취급이 허용됨으로써
 -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저축은행 또한 대외 인지도 및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부작용 등 대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여타 서민금융기관에도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아직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부실대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정책수단 분석)** 여신 50억원 미만 중소기업도 공동워크아웃 추진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협약’을 개정('05.12월)하는 등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은행단 중심으로 자율 추진되는 것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은 없음

- **(부작용 등 대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기업주에게 회사의 부도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홍보 강화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p>'06년도 연체율에 따른 차등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2.0\%$: 500건 이상 • $2.0\% \leq A < 2.5\%$: 700건 이상 • $2.5\% \leq A < 3.0\%$: 900건 이상 • $3.0\% \leq A$: 1,100건 이상 <p>A : '05년도 분기말 연체율 평균</p> <p>경기상황과 연동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과거의 실적 등 감안) 설정</p>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감독당국이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수록 워크아웃제도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연간 워크아웃 추진실적을 성과지표로 선정한 것은 적절
 -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평가기간동안 분기말 연체율 평균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규 워크아웃 적용 업체 목표를 차등화
- (측정가능성 등) 채권은행들로부터 워크아웃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용이하게 측정이 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되는 경우 기술력 등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워크아웃 목표치를 중소기업 연체율에 따라 연동되도록 설정하여 합리성 제고
 - * 과거의 추세를 볼때, 경기변동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우 그만큼 워크아웃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워크아웃 실적평가를 연체율에 연동시킨 이유는 연체율에 따라 워크아웃에 대한 수요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

- **(검증방법의 적정성)** 아직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연간 워크아웃 추진실적은 워크아웃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③ 시행계획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행자부의 관련법률(‘행정정보 공동이용법(안)’ 시행일정*을 참조하여 차질 없이 과제 추진 중

* 금년중 법안을 최종 확정·통과할 예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유체계를 행정기관에 우선 구축(’06.11월)하고 이후 공공·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06.11~’07.12월)

※ 공공정보 집중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05.8.24) 이후 복지부, 노동부가 법개정 추진중*

* 개정대상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복지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노동부)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 의원입법으로 의원 선정 작업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 국무회의 통과후 국회계류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저축은행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취급을 결정('06.3월, 중진공 이사회)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중
- * 정책자금취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후 '06년 하반기중 정책자금취급을 개시할 예정
- 한편, 관계형 대출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현재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 중('06.3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신용평가적용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집중할 공공정보 선정을 위하여 각 부처 소관 담당자 및 규제개혁 전문위원간 협의를 진행하여 관련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간 IFIS(통합금융정보시스템)를 활용함으로써 정책자금 신규취급에 따른 비용발생을 최소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채권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 이행 실태를 RM(상시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가 인력투입을 최소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는 꾸준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과제로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하나 그간 수행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행정여건·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 중기특위,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주요 실적 >

- 중소기업금융 선진화 관련 토론회 개최('06.5.3, 청와대)
 - 재경부, 금감위, 중기특위, 중기청 참석
- 중기특위 위원장 주재 중소기업금융 선진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회의 개최('06.5.23)
 - 재경부, 금감위, 중기청 등 참석
- 중기특위 위원장 주재 중소기업금융 선진화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회의 개최('06.6.13)
 - 재경부, 금감위, 중기청 등 참석

- 저축은행의 정책자금 취급과 관련하여 금감위, 중기청간 실무협조는 물론 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간편한 One-process 서비스 제공”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06년도 연체율에 따른 차등부여 · $A < 2.0\%$: 500건 이상 · $2.0\% \leq A < 2.5\%$: 700건 이상 · $2.5\% \leq A < 3.0\%$: 900건 이상 · $3.0\% \leq A$: 1,100건 이상 A : '06년도 분기말 연체율 평균 경기상황과 연동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과거의 실적 등 감안) 설정	54.4% ('06.3말 기준)	○ '06.3말 중소기업의 연체율 : 1.7% ○ '06.1/4분기 중 워크아웃 신규 추진 : 272개사

- '06.1/4분기 중 워크아웃 신규 적용업체는 272개사로서 금년도 목표 500개사*의 54.4%에 달함

* '06.3말 현재 중소기업 연체율 1.7% 기준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관련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6. 1/4분기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및 사후관리 업무 운영실적을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 지속

-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실적 부진은행에 대한 면담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지도
- 국내은행의 비외감법인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방안 추진실적 분석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06.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점검·지도(매분기별, 1/4분기는 '06.5월 점검·지도)
- 부도 중소기업과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간 재무상황 등 비교분석을 통한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 지도('06.7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통한 담보대출 관행 개선】

- 관련법안이 시행되어 금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정보 활용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은행이 자체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 적용비율 제고방안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지원】

- 워크아웃 실적 우수은행 영업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은행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추진 및 동 제도의 이해 축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회사의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자금증개기능 강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 서민 금융이용자에게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및 애로 사항 상담 등 생계형 금융맞춤서비스를 제공
- ☐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유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금융이용자에게 제도금융권의 다양한 대출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05.12.12 부터 본격 가동중
 - 은행 등 9개업권* 322개 금융회사의 약 860여개의 대출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금융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토털 (Total)서비스 제공시스템
 - *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 대부업체
 - 대출안내서비스 이용절차
인터넷에서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①회원가입(로그인) → ②직업, 연소득 등 신상정보 입력 → ③본인확인 및 수수료(3천원) 결제 → ④추천상품 검색 → ⑤대출신청
 - * 저축은행 및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4개기관이 공동출자하였고, 대출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회사
- '06.5.15. 현재 2,900여명이 대출신청을 하고, 이중 1,032명이 약 44억원의 대출을 받음

- (의견수렴) '02년부터 매년 사금융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사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절차 이행

['02.3월(6,829명), '03.9월(1,615명), '04.9월(3,859명), '05.10월(5,133명)]

- 금융이용자의 신용도 및 필요금액과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맞춤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출중개시스템의 필요성 인식

○ **(통계 및 사례조사)** 사금융이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사금융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사금융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사금융이용자의 35%(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 24%, 긴 대출심사 기간 11%)가 대출정보 부족 등으로 제도금융권 대신 사금융을 이용하는 상황('05년 설문조사 결과)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연체 기록	319(20%)	795(21%)	1,280(25%)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	339(21%)	866(22%)	1,252(24%)
긴 대출심사 기간	231(14%)	296(8%)	541(11%)
보증·담보 요구	457(28%)	995(26%)	1,079(21%)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	132(3%)	275(5%)
대출잔여한도가 없어서	166(10%)	487(13%)	479(9%)
기타	18(1%)	57(1%)	186(4%)
무응답	85(5%)	231(6%)	41(1%)
	1,615명(100%)	3,859명(100%)	5,133명(100%)

○ **(영향분석)** 성별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인식

- 대부업법 인식정도와 관련하여 남녀별로는 전혀모름 응답이 여성 42%, 남성 34%로 여성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불법사금융 위협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 인식

【대부업법 인식도】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남성(65%)	여성(35%)
전혀모름	373(23%)	1739(45%)	1,909(37%)	1,149(34%)	760(42%)
1개 이상	1,215(75%)	2,007(52%)	3,224(63%)	2,189(66%)	671(58%)
1개	291(18%)	516(13%)	1,215(24%)	765(23%)	450(25%)
2개	378(23%)	673(17%)	773(15%)	516(15%)	257(14%)
3개	258(16%)	355(9%)	409(8%)	315(9%)	94(5%)
4개	288(18%)	463(12%)	827(16%)	593(18%)	234(13%)
무응답	27(2%)	113(3%)	0(0%)	0(0%)	0(0%)
계	1,615(100%)	3,859(100%)	5,133(100%)	3,338(100%)	1,795(100%)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역할 강화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회의를 개최

-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연합회(여신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평가회사, 대부업협회 등 관계기관의 회의('05.7월, 8월) 및 9개 도시*에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05.11.1~9, 1,300여개 금융회사 참석)

* 서울, 4개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춘천, 전주, 청주, 제주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의견수렴) 방학중 어린이·청소년 금융캠프 개최홍보('06.2월), '06년도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등을 위한 수요자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별·지역별 소비자의견을 수렴('06.4월)
- (통계 및 사례조사) 생계형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융교실을 마련하고, 금융교육 현황 안내 및 수요 조사 실시(연중)

- **(영향분석)** 서민층 어린이·청소년이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제한없이 자유롭게 무료 금융교육을 수강토록 하여 미래의 건전한 금융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금융감독원 자체 교육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어 여타 정책과의 연계 불필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의견수렴)** 국내은행들이 공익재단 설립,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은행권 자율로 구성,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마련('06.6월)**

< “은행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06.6) 주요내용 >

- 은행 사회공헌활동 주간 제정
- 사회공헌 마일리지(Social Contribution Mileage) 제도 도입
-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 등

- **(통계 및 사례조사)** 주요 선진국의 공익활동 규모에 대한 조사 및 UN 등 공익활동 관련 국제기준 등에 관한 제도 조사 실시('06.1월)

- **(영향분석)**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이 은행권의 경영건전성 및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익활동을 조화롭게 추진할 예정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서민지원대책으로 연계하는 한편,
 - 휴면예금 활용방안은 금융권의 자율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3개)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바 있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정책수단 분석)**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각 형태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금융자율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참여기관이 공동출자하는 자회사(한국이지론)를 설립하는 방안을 선택
 - * 불법 고리사채를 이용하는 수요를 제도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가 흡수하도록 지원, 총3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출중개시스템

< 서비스 구축시 운영형태 관련 검토(안) >

<1안> 참여기관이 공동출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① 사단법인 형태, ② 상법상 회사 형태

<2안>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

-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로 정보탐색비용(시간적·금전적) 절감, 불법 사채업자·대출사기 또는 신용도 저하 위험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 **(부작용 등 대비)** 2안과 같이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여 운영 위탁시 특정회사의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시 책임성 및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감안

- 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정책수단 분석)** 장애인에 대한 관련 통계 DB 구축 및 위험률 산출 등 다각적인 노력과 시장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장애인 보험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 보험협회, 업계와 관련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T/F 등을 구성, 활용할 예정

- **(부작용 등 대비)** 금융교육 관련 제반사항 이행에 따른 일체의 부작용이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 불필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정책수단 분석)** 의원입법 발의에 의해 휴면예금을 법률로 기금화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사유재산 침해논란 등을 감안할 때 법률에 의한 방안보다 금융권 자율 추진이 바람직

* 은행연합회 내에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설치('06.2월)하고, '은행공동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수립 T/F 운영('06.4~5월)

- (부작용 등 대비) 사회적 책임경영 등 공익활동의 지나친 강조가 은행건전성 및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행권 자율로 추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시스템의 대출안내 실적	37,000건
이용자 등 만족도 조사	60점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대출수요자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한 실적(건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서민층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과관계가 성립
 -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평가함으로써 정성적·질적인 평가도 가능
- (측정가능성 등)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대출안내 실적은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의 안내건수로, 이용자 등의 만족도는 정책고객서비스(PCRM) 고객 및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등의 조사내용을 계량평가하여 측정 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서민 금융이용자에게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안내되었는지가 성과지표로서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월평균 대출안내자수와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05.12월 안내서비스 개시이후 월평균 대출안내자수는 약 2,800명으로서 연평균 약 33,600명 예상, 다양한 상품개발, 참여기관 증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대출안내실적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예정 → 실적치의 약 110%수준인 37,000명을 목표치로 설정
 - 정책고객서비스(PCRM) 고객(약27,000명) 및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혁신성, 도입효과, 만족도(이용자일 경우) 등을 계량평가 → 외부평가점수 60점 목표
- [참고] '05년 정책만족도 평가 : 일반인 52.5점, 전문가 59.2점
- **(검증방법의 적정성)** 안내건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의 운영현황을 통해 검증 가능
 - 만족도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인터넷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주)드림위즈, 뱅크폴(300여개 중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결)과의 업무제휴 추진('06.2월) 및 은행참여 유도* 등 차질 없이 과제 추진중

- * 은행 대출심사 탈락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이용권(1백만장)을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을 통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지원('06.3월)
- 국민·우리은행 등 전 은행 동참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소외계층 소비자, 사회취약분야 가정 및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교육일정에 맞추어 진행중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당초 계획대로 은행연합회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여론추이를 적극 반영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 설립시 저축은행중앙회 등 4개 기관(회사)의 자율적인 출자를 유도함으로써 비용발생을 최소화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생계형 금융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기존시설 및 전문강사진 활용 등을 통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은행연합회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과제 추진(감독당국의 인력투입 최소화)

④ 시행과정의 적실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대출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은행을 참여시키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응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어린이날 교육초청 어린이, 복지시설 아동, 직업군인 등 취약계층 가정·소비자의 생계형 맞춤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관련교육 계획을 대폭 확대
- 보험협회, 업계와 관련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응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감독당국 주도의 대책마련이 아닌,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추진체계를 통해 금융기관 업무여건에 적합하고 상황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수시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참여기관 및 운영회사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 1차로 4개은행(우리, 국민, 제일, 기업), 2차로 11개은행(6개 시은 및 5개 지방은행)과 회의 개최('06.3월)
- * 매주 운영사인 ‘한국이지론’과의 업무협의 상설화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재경부(경제교육협의회,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교육부(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KB은행-YWCA 등과 협조
- 보험협회, 업계와 관련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T/F 등을 구성, 활용할 예정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재경부·금감위·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개별은행의 유기적 협조하에 T/F 구성 등 대책을 추진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에 범 금융권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 시스템의 대출안내 실적	37,000건	19,752건 (53%)	
이용자 등 만족도 조사	60점	-	

* '06.6.19 기준, 이용자 등 만족도 조사는 연말 실시예정

- '06년 목표치의 53%를 달성함으로써 상반기 목표 달성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민특화 금융서비스 확충】

- HSBC은행 참여('06.1월)
- 인터넷 포털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드림위즈, 뱅크폴(300여개 중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결)과의 업무제휴('06.2월)
- 은행 대출심사 탈락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이용권(1백만장)을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을 통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지원('06.3월)
 - 국민·우리은행 등 전 은행 동참
- 인터넷 대출심사 탈락고객에게 온라인을 통해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지원('06.3월)
 - 국민·우리·제일은행등 10개 은행 동참
-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 시스템의 대출안내 : 19,752건

【서민층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금융교육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 취약분야 소비자와 어린이·청소년,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맞춤형 금융교육 수강자 만족도가 전년보다 향상('05년도 50.7%, '06년도 57.3%)
- 금융교육 소외계층대상에 대해 전년 동기(3회) 대비 5배 증가한 15회 교육을 실시하여 수강자 맞춤형 교육 제공
- 대구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On-line)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교육서비스로 편의성을 제고
- 장애인보험의 활성화와 관련, 위험률 산출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06.6월)
- 통계 DB 지원방안 등과 관련, 관련 T/F 참석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개통('06.4.27) 후 1개월간 32억원을 환급 처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민금융회사의 지속적인 틈새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충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의 홍보 강화를 통해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유도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서민금융회사의 보다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기능 수행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등 건전경영기반 마련

【영업규제의 지속적 완화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여력 제고】

- ☐ 우량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건전 경영 유도
- ☐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및 금융 소외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부실우려 저축은행 사전대응 강화로 조기 경영개선 도모】

- ☐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으로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
 - 부실저축은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적기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 추진】

- ☐ 중앙회 및 단위신협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신협시스템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검토
- ☐ 계약이전제도 도입 및 부실우려조합의 조기정상화를 추진하여 기금소요액을 최소화하고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 도모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영업규제의 지속적 완화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여력 제고】

- (의견수렴) 저축은행 지부장과의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주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저축은행 영업활성화방안을 논의

* 저축은행 지부장 간담회('06.2월) : 저축은행중앙회 임원 및 지부장(11개 저축은행 대표), 비은행감독과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업계동향 및 규제완화 관련 건의사항 등 수렴

- 신탁중앙회 임원들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신탁 경영 정상화방안에 대해 논의

- (통계 및 사례조사) 분기말 영업보고서를 통해 업계 경영 현황 및 통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동일인 여신한도 등 영업 규제에 따른 실제 영업현황을 분석

- 주택담보대출, 부동산기획대출 등 주요 여신항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여신규모(Exposure)가 큰 회사에 대하여는 사례조사 실시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여타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의 주무부처(행자부, 농림부 등)와 서민금융 활성화 T/F에서 연계·협조방안 논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사전대응 강화로 조기 경영개선 도모】

- (의견수렴) 저축은행 대주주, 대표이사 및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Workshop”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 개최('06.3월)하여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 (통계 및 사례조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소액신용대출 및 PF(Project Financing)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06년말 예상 BIS비율을 추정('06.3월)
 - 부실저축은행 사례분석('06.6월)을 통해 급격한 자산증가가 부실가능성의 한 지표임을 파악
 - KDI 연구용역('06.1월)을 통해 해외 적기시정조치제도 사례와 국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권역에도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존재하므로 저축은행의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여 제도개선시 참고토록 조치('06.6월)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 추진】

- (의견수렴) 신협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정책간담회('06.3.22) 및 관계장관 간담회('06.4.4) 등을 통해 서민금융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신협중앙회 임원진과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 진행 및 중앙회의 자구노력 추진시 애로사항 등 수렴

- 예금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단위조합 합병, 자체정상화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에 대해 신탁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06.2~3월)

- (통계 및 사례조사) 신탁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방안과 재정지원 병행추진시 중앙회 누적결손금이 해소되는 시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자구노력과 재정지원 수준을 산정
- (영향분석)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과제 협의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영업규제의 지속적 완화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여력 제고】

- (정책수단 분석) 영업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시행령·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
 - * 예) 동일인여신한도 - 시행령 개정사항, 유가증권투자한도 - 감독규정 개정사항
- (부작용 등 대비) 과도한 규제완화는 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완화 추진

【부실우려 저축은행 사전대응 강화로 조기 경영개선 도모】

- **(정책수단 분석)** 부실우려단계에는 제도적인 감독 조치 보다는 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1:1 면담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우선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 재무건전성지도기준 미달시에는 금산법상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여 경영상황에 따른 조치수단(자본확충, 수신제한, 배당제한 등)을 폭넓게 활용
- **(부작용 등 대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대상저축은행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가급적 자율적인 경영개선 유도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 추진】

- **(정책수단 분석)**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과 정부재정지원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후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마련
 - 법령·규정 개정사항, 경영개선명령 수정사항과 자구노력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분
-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예금자보호기금 지원방안을 단위조합의 합병·자체정상화와 구분하여 개별사안에 적합한 기금지원안을 검토
 - 또한, 지원방안을 신협중앙회 자체 예보기금관리위원회의 내부규정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자금이 적시에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부작용 등 대비)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자구 노력수준에 대해 신탁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단위신탁의 반발 등의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 신탁)	저축은행 : 11% 이하 신탁 : 6.1% 이하

* 고정이하여신비율 : 총대출 중 원금상환이 3개월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저축은행 및 신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하므로
 -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등)여신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측정가능성 등)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영업보고서 및 점검을 통해 측정 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여부를 판단하는 성과지표로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최근 3년간 추세 및 전년대비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저축은행은 최근 3년간 다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03말 수준 이하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신탁은 3년간 평균치(6.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11.8%('03년말) → 13.0%('04년말) → 12.4%('05년말)
- (검증방법의 적정성) 저축은행 및 신탁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통해 입수되는 자료이며,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이 가능

③ 사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 상반기에는 과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령·규정개정 등 제도개선은 하반기에 주로 추진될 예정

< 저축은행 및 신탁 관련 추진실적 >

- 저축은행
 - '06.2.10. 저축은행의 국고금수납대행업무 개시
 - '06.3.29. 저축은행의 정책자금 취급 허용
 - '06.5. 3. 동일인여신한도중 금액한도 완화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시행령 개정, '06.8월부터 시행)
- 신탁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2회)
 - 경영개선명령 상태에 있는 신탁중앙회에 대한 '06.1/4분기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지도
 - 신탁중앙회 임원진과 경영정상화 방안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06.6월)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방안에 대한 대국회 보고(2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 관계부처와의 T/F* 및 감독기구내 T/F** 등을 통해 해당분야 인력을 활용하여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서민금융활성화 T/F('06.3월) : 재경부, 금감위,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 서민금융감독 T/F('06.3월) : 감독정책1국장, 은행감독과장, 비은행 감독과장, 은행감독국장, 비은행감독국장 등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을 위한 제도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건전성을 저해할 잠재요인(예 : PF대출)등 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

* PF(Project Financing)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 정상채권에 대해 2%(←0.5%), 요주의채권에 대해 7%(←2%), 고정채권에 대해 30%(←20%) 충당금 적립

-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05.10월 이후 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저축은행 등에 대해 밀착 경영지도 강화

* ('05.10.14) 4.82% → ('05.12.16) 5.11% → ('06.3.3) 5.24%

- 신탁중앙회에 대한 재정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측의 자구노력 성과를 보아가며 탄력적 ·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 재정경제부(동일인대출한도 규제완화 등 관련),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취급 관련), 한국은행(국고금수납 대행업무 관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호 저축은행중앙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운영
- 신탁 등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부, 국조실 등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자율규제기관인 신탁중앙회와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운영
- 또한, 향후 국회와도 최종방안 확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 신탁)	저축은행 : 11% 이하 신탁 : 6.1% 이하	77% 92%	'06.3월말 현재 저축은행 : 11.9% 신탁 : 5.6%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영업규제의 지속적 완화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여력 제고】

- 저축은행의 국고금수납대행업무 개시('06.2.10)
- 저축은행의 정책자금 취급 허용('06.3.29)
-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여신 금액한도 완화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06.5.3. 시행령 개정)

【부실우려 저축은행 사전대응 강화로 조기 경영개선 도모】

- 경영상태 취약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한 자본확충 유도('06.4월)
- 영업정지중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의 경우 계약이전을 통해 경영정상화 유도('06.5.26)
- 부실저축은행(아림, 한중)의 계약을 이전받은 가교저축은행(예가람)을 제3자에 매각('06.5월)하여 경영정상화 완료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 추진】

- 신협중앙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신협중앙회 정상화 방안 및 자구노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06.6.7)하여 정상화 방안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

- 이종신협간 합병시 공동유대 적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06.6.16. 합동간담회 보고) 하여 부실신협의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도모

* 단체신협의 합병대상지역 신협의 범위를 단체신협의 주사무소와 인접한 지역신협으로 완화 등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영업규제의 지속적 완화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여력 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영업력 확충을 도모
 -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 증대, 영업구역 광역화, 자산 운용의 자율성 제고 등 제도개선방안 강구

【부실우려 저축은행 사전대응 강화로 조기 경영개선 도모】

-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의 이행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여 부실 확대를 방지(하반기중 감독규정 개정 추진)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단위신협 구조조정 효율화 추진】

-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 세부계획에 대하여 신협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 설득함과 동시에 신협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

5.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5-1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제고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증가 등 금융이용자가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금융이용자 보호방안 추진을 통한 권익향상 도모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 전자금융거래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 진전에 맞추어 은행이용자가 은행홈페이지에서도 은행거래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약관을 책자 등의 형태로 영업점에 비치하는 현행 공시방법에 인터넷 공시를 추가

- ☐ 보험상품 공시강화의 일환으로 변액유니버설보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개방안을 마련

* 보험가입설계서(가입시) 및 개인별 보험계약관리내용(반기별)에 변액 유니버설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납입보험료의 85% 수준)을 공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펀드 판매인력 등록제도를 도입

* 투자자의 펀드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아 펀드 가입시 판매직원의 추천 등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가 중요

☐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06.3) 등 신판매채널의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판매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

☐ 상해,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표준약관 제정 및 불합리한 약관
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을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제3보험

: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
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

☐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No-Fault)제도* 도입여부 검토

* 무과실보상(No-Fault)제도

: 자동차사고시 가해자·피해자간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각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각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대신 소송을 제한적으로
허용 → 보상처리비용 감소,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효과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시행(06.5)하고 이행실태를 점검(상·하반기)

*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철회권과
텔레마케팅을 중지(Do-Not-Call)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유사사고 방지 등 효과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예방
시스템 등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의견수렴)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 도입을 위해 은행과의 회의('05.10) 등을 통해 의견수렴
 -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대한 공시 강화를 위해 협회 및 업계와의 회의('05.8)를 거쳐 의견수렴

※ 회의내용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납입보험료중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규모를 알려주는 것은 상품이해도 제고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시킴

* 변액유니버설보험(VUL, 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 보험의 보장기능, 예금의 입출금 기능, 펀드의 실적배당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금융형 보험상품

- (통계 및 사례조사)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를 위해 타금융권의 약관 등 공시내역을 조사

*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펀드의 투자설명서 등은 인터넷 공시중임

- (영향분석) 금융상품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는 민원방지 및 금융이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공시 강화를 위해 생보협회의 공시규정 개정방안을 협의('05.12)

※ 협의내용 :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대해 특별계정 투입원금을 가입설계서(계약체결시) 및 보험계약관리내용(연2회)에서 공시기로 협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의견수렴)**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투자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판매실태 점검 실시('05.11~12월)

* 펀드 투자자 설문조사 : '05.11~'05.12월중 55개 펀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

** 점검결과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고, 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아울러 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개별 판매인력 소속 금융협회의 의견 등을 수렴('06.3)

※ 의견수렴 내용 :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등록주체 및 등록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 **(통계 및 사례조사)** 국내의 유사한 금융전문인력 등록제도, 외국의 펀드 판매인력제도 등록 및 관리사례를 조사('06.3)

* 금융전문인력 등록제도 : 운용전문인력(자산운용협회), 투자상담사 등 증권전문인력(증권업협회), 보험설계사(생명보험협회) 등 다수의 금융전문인력이 해당 금융협회에 등록

* 해외사례 : 외국의 경우 펀드 판매인력을 금융감독당국 등에 등록하며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관리

- 보험상품의 판매광고 및 통신판매관련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업계의견, 민원, 언론기사 등을 종합하였으며, 타금융권 및 해외사례도 조사

* 타금융권 :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에서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심의

* 해외사례 : 美 증권업협회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심의

- **(영향분석)** 펀드판매인력 등록제도 및 보험판매광고 등 모범규준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펀드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방안」 발표('05.6), 재정부 판매인력 교육고시 제정('06.1) 및 판매인력관리위원회 규정 제정('06.4)시 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의견수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 등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충실히 이행
 - *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 실시 (서면점검 : '05.6~7월, 현장점검 : '05.8월)
 - 점검결과를 토대로 고객앞 사전고지의무, 전화수신거부제도 등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규준」 마련('05.9~10월)
 - * 금융회사 등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모범규준의 자율 도입을 권고('05.11)
- **(통계 및 사례조사)**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05.9)

* 해외사례

- 영국 : 1998년 데이터보호법 - 데이터 전반적 규율
- 일본 :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 개인정보 처리 전반 규율
- 미국 : Fair Credit Reporting Act - Consumer Report 활용범위 및 소비자 권리 규율
- 독일 : 연방데이터보호법 - 데이터 처리 전반 규율

- **(영향분석)**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는 금융이용자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재경부 주관의 신용정보법 개정 T/F에 참여하여 법개정 추진 협의('05.11~現)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정책수단 분석)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용자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 공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시켜 이러한 문제 해소에 기여 예상
 -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은행법상 위임 근거(§52)에 따라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제도화할 예정
- 보험상품공시의 종류 및 필수공시항목 등은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상품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 작성방법 등은 보험협회의 공시기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 보험협회의 상품공시기준 등을 개정하여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 시행('06.4)
- (부작용 등 대비) 변액보험中 변액유니버설보험에 대한 특별 계정 투입원금 공개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변액연금보험 등 타 변액보험에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정책수단 분석) 펀드 판매인력 등록제도에 대한 법 개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강제화하기보다 민간 자율적으로 판매인력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 펀드 판매인력 교육에 관한 재경부 고시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판매인력관리위원회* 규정에 펀드 판매인력을 해당 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06.4)

* 판매인력 교육·시험 관리 등 판매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산운용 협회내에 설치(소비자단체 등 공익기관, 증협,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참여)

- 또한, 등록주체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인력을 판매인력관리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펀드 판매기관이 다변화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인력을 당해 금융회사가 소속된 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이를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총괄·관리하도록 함

- 보험통신판매 및 홈쇼핑 등 신판매채널 판매광고에 대한 민원 증가로 제기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할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 필요성에 적극 대응

* 보험상품 판매광고 및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마련(06.3)(참고)

- 상기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보험협회에 송부하여 광고심의규정 등에 반영

- (부작용 등 대비) 판매인력 등록제도가 판매인력관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도입되어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간투법에 판매인력 등록 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추진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정책수단 분석)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금융회사 자체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지도

- **(부작용 등 대비)** 모범규준의 이행실태 점검 및 현장점검 등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향후 재정부 주관의 신용정보법 개정 T/F에 참여하여 법 개정 추진

* 동의철회권, Do-Not-Call 등의 법적 근거 마련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약관개선조치비율	8.7%
불공정거래 관련 약관 심사 개선 실적	약관심사에 대한 법령근거 마련 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감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 은행약관 심사시 변경권고 및 수정/보완 조치한 실적(비율)을 지표(계량)로 선정한 것은 적절
-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약관심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 따라서 아직 마련되지 못한 약관심사(증권)의 법적 근거 마련 여부는 적절한 성과지표임
 - 추가적인 지표인 전반적인 약관개선요구·반영실적(증권)도 약관감독의 충실성 측면에서 적절

- (측정가능성) 은행약관 심사시 변경권고 및 수정/보완 실적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은행의 불공정거래 약관 등의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약관개선조치비율 목표치(8.7%이상)는 최근 3년 평균 실적치(8.0%) 보다 상향 적용
 - * 최근 추세를 반영키 위해 30%:30%:40%로 가중 평균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약관개선조치비율 목표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 금융상품이 전문화, 복합금융화 되면서 약관상 불명확한 표현 등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크므로 약관 심사 강화 필요성을 감안
- (검증방법의 적정성) 약관개선조치비율은 변경권고건수, 수정·보완건수 등 계량지표를 기초로 하므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
 - 약관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관련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증빙 가능

③ 시행계획의 이행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06.4.1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개를 실시하여 정상 추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06.4월에 판매인력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업무계획상 완료 기한(06.6월)내에 제도 도입을 완료
- 보험상품 판매광고 및 통신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06.3)하여 보험협회의 광고심의규정 등에 반영('06.5)함으로써 정상 추진
- 자동차보험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운영사례를 조사(06.3)하여 4/4분기중 검토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중

【개인신용정보 관리 · 보고제도 개선】

- '05년말 「신용정보관리 · 보호 모범규준」 제정 이후 각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06.4월부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적용 추진(내규반영 등)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보험상품공시의 세부기준이 보험협회로 위임되어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05.8~12)함으로써 자율규제기능 향상 및 업계 의견 반영이 용이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으로 감독자원을 활용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펀드 판매인력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금융협회 등과 실무작업반(T/F)*을 구성('05.1~'05.4)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 소요를 단축

* 자산운용협회, 증권업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참여

- 보험상품 판매광고 및 통신판매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 등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 감독·검사업무 담당자와 보험협회, 주요 보험회사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한정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추진

* 판매광고 및 통신판매 모범규준 T/F : '06.1~2

* 제3보험 표준약관 T/F : '06.3~현재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변액유니버설보험 해약시 민원발생이 증가되면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납입보험료중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실제 운용되는 규모를 공시함으로써 펀드수익률의 적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큰 상황변화는 없었음
- *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이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시행과정에서 큰 상황변화는 없었으나 펀드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변화시 적기 대응할 예정
- * 펀드수탁고 : (04.6월) 163.0조원 → (05.6월) 203.4조원 → (06.6월) 225.8조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금융회사별 규모 및 시스템 준비사항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기준」의 적용시기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시행시기 조정
- * 소규모 금융회사 및 개인CB회사 : 4월중
- * 은행, 신용카드사 : '06. 5. 2 시행(일부 은행 4월중 시행)
- * 생명·손해 보험사 및 증권사 : '06. 5월말

- 금융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 필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등록·전파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보험상품공시의 세부기준이 보험협회로 위임되어 있어, 변액 유니버설보험 공시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시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05.8~12)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펀드 판매인력 등록펀드 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은 투자자의 이해 및 신뢰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재경부, 금융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 판매인력 자격시험제도 도입, 판매인력 보수교육 의무화('06.1) 등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판매인력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수적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시 감독당국과 사전협의後 재경부 승인('06.4)
- 펀드 판매인력 등록 事前 단계인 펀드판매인력 자격시험 일정 및 시험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으며, 판매인력 등록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였음
 - * 펀드 판매인력 자격시험은 '06.4, '06.6 2회 실시하였으며, 판매인력 등록 시행은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펀드 판매인력 자격 시험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였음

-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 등과 관련하여 보험협회,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중에 있으며, 실무자를 중심으로 T/F 등을 구성·운영중(06.3~現)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금융기관별 신용정보담당 임직원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 의견을 구하는 등 효과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
- 개인신용정보·관리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05.6~7)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마련 추진
 - 동 모범규준에 포함된 내용은 그간 업계 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재경부 및 금감위(원)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었으며
 - 모범규준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침
- 사고예방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연합회와 연계하여 추진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약관개선 조치비율	8.7%	196.5%	상반기중 약관개선조치비율 (17.1%) 대비
불공정거래 관련 약관 심사 개선 실적	약관심사에 대한 법령근거 마련 등	-	-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는 등 심사를 강화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공시*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오해 가능성을 낮추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

* 보험가입설계서(가입시) 및 개인별 보험계약관리내용(반기별)에 변액 유니버설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납입보험료의 85% 수준)을 공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판매인력 등록제도 도입으로 보수교육, 제재자 관리 등 판매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짐

- 투자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인력의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충실해질 전망
- 보험상품의 판매광고 및 통신판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자율규제에 반영토록 지도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불합리한 약관조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을 통해 금융 이용자의 권익 향상 기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실태점검, 업계수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회사 등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정보보호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금융부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금융상품 공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은행거래약관의 인터넷공시 시행을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개정(3/4분기중)
- 실무적으로 은행연합회 공시규정 등에 반영을 위해서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업계가 참여하는 T/F 구성·운영(06.7월중 구성 예정)할 필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 판매인력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간투법에 판매인력등록제도와 관련한 법적근거도 마련하여 판매인력에 대한 자율규제 및 관리를 강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고제도 개선】

- '06년 3/4분기중 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아울러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제도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연중)

(참고) 「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규준」 개요

1. 도입배경

-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CB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고객 정보 이용 동의시 사전에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등의 고객권리사항에 대한 설명·고지를 강화
-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제도 도입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 정보의 제3자앞 제공을 중단(동의철회권)하거나
 - 성가신 텔레마케팅을 중지(Do-Not-Call)시킬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
- * 금융기관 등의 자체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05.12) 재경부 주관의 T/F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시 반영예정

(참고)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I. 통신판매시 일반적 준수사항

- ☐ 통신판매종사자에게 법규, 상품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
- ☐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사용토록 하고, 동 표준 스크립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 통신판매시 계약체결의 전(全)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백업후 소산하여 관리하며, 계약자의 요청시 음성녹음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 통신수단으로 청약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줌으로써 계약자 의사에 반하는 불완전판매계약 차단
- ☐ 통신판매종사자의 표준스크립트 준수여부, 통신판매행위의 적정여부 및 약관 중요내용 설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2단계로 운영
 - 통신판매계약 음성녹음내용을 청취하여 자체 점검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과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여부를 재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

II. 통신판매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기준

- ☐ 개인정보를 통신판매에 이용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에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법여부를 확인함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의 없는 전화, 팩스 전송을 금지하므로,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팩스를 전송할 수 없음

III. 통신판매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 대리점수수료, 통신판매종사자 모집수당 등 모집관련 경비는 신계약비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당해 모집채널·보험상품에 직접 귀속되도록 배분
- ☐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를 최저보장하는 행위 금지
- ☐ 홈쇼핑회사의 판매방송은 보험모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모집관련 수수료로 지급하고 광고비 등으로 편법 지급 불가

(참고)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I. 판매광고 기준

□ 필수안내사항

- 금리연동형·실적배당형상품은 금리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며, 특히 변액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홈쇼핑 판매방송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금액·보험금 지급한도, 담보별 보장기간, 보험금 면책조건 및 감액지급사유, 청약철회제도 등'을 반드시 설명

□ 상품안내시 준수사항

- 보험료 예시시 성별, 연령별, 환급금 유무형태별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해약환급금 예시시 경과기간별(가입후 1년, 3년은 반드시 포함)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비교하여 안내

□ 금지사항

- 타사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 안내하는 행위 금지
- '무제한 보장', '위험이 없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극단적·단정적 표현 및 보장범위를 과장 설명하는 행위 금지
- 해약환급금 및 연금 예상액에 대해 수익률이 높은 경우만을 강조하는 행위 금지

□ 기타 유의사항

- 필수안내사항으로 정한 중요사항은 일반 안내사항보다 글자크기를 작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시에는 방송 20분당 1회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

II. 판매광고에 대한 심의

□ 보험회사는 모든 상품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심의

□ 협회는 TV, 신문 등 주요매체에 의한 상품광고를 사후심의(단, 허위·과장광고 2회이상시 사전심으로 전환)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해 사후모니터링 실시

□ 협회는 심의결과 위규사항에 대해 제재금 부과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확대된 권리의식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인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을 함양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 청소년 금융캠프 개최* 등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

* 청소년 금융캠프

: 미래 경제주역인 청소년들이 금융과 경제에 대한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금융캠프를 운영하여 금융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참여와 체험중심의 교육 실시

- ☐ 지상파 방송을 통한 퀴즈대회 등 정보전달력 및 파급효과가 뛰어난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인프라 구축
- ☐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참고)을 수립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금융교육 시범학교 선정, 교사용 지도자료 작성 등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증진하고 조기 금융교육의 기반 마련

*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 교육부 주관의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및 교육과정 심의 위원 참여를 통한 교과과정내 금융교육 강화방안 모색 등 일선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

[참고]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 일정표

※ 국민과 함께 하는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언론매체를 통한 금융교육 캠페인」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

(단위 : 월, 천원)

내 용	추진 일정(2006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put type="checkbox"/>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				■									- 3월 발족
<input type="checkbox"/>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금융백일장 개최				■	■	■							- '6월 실시중
○ 교사와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				■	■	■							- '6월 실시중
○ 대학생 금융논문 공모						■	■	■					- 7-9월 실시예정
○ 금융퀴즈 대회 개최													
- 신문, Naver 등 포털사이트				■	■	■	■	■	■				
- 우리원 홈페이지						■	■	■	■	■	■	■	
- 지상파(DMB)방송사			■	■									- '06.4월 실시
<input type="checkbox"/> TV 매체를 통한 금융교육 캠페인 전개													
○ TV 교양·오락프로그램							■	■	■				
○ TV 공익광고 캠페인										■	■	■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의견수렴)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06.4)

* 교수(2인), 교사(1인), 교육연구기관(1인), 소비자단체(2인), 금융협회(5인)

-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여론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06.3)

※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내용

-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장 선출
-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방향 설명
-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 개진
- 특성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개 금융협회가 기금을 출연키로 함(협회당 1,600만원)
- 출연금 관리방안 의결
- 아울러,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은행·비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소비자교육 담당자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교육수요 및 현황 조사(06.1)

※ 간담회 논의 내용(72개 금융회사, 금융협회 참여)

- 2005년도 금융소비자교육 업무추진실적 안내
- 2006년도 금융소비자교육 업무계획 소개
-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
- 지방도시, 시·군구청 방문 금융교육 확대 방안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연계교육 방안 협의

○ (통계 및 사례조사) 금융교육 관련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수립시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06.5)

-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 등에 대한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자문위원(2인)에게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연금 등 대학생 금융논문 공모 :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시행중

○ (영향분석) 금융교육 활성화의 경우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 과제로서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 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금융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재경부, 5월), 경제교육협의회(재경부, 4월),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교육인적자원부, 5월) 회의 참석

※ 회의내용

- 제1차 경제교육협의회('06.4.4)
 -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경제교육협의회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
- 제3차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06.5.8)
 - 주5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검토
-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안건 제1호('06.5.12)
 - 2006년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 경제교육협의회의 소비자교육 추진방안
 - 소비자 의식제고를 위한 소비자교육 방안 등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의견수렴) 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활용
- (통계 및 사례조사)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의 PFEG*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

*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비영리기구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파견, 교사교육과 교재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금융교육의 컨트롤 타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정책수단 분석) 금융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업무경험과 금융지식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감독당국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

* 금융감독당국의 집행간부, 교육원 교수인력, 금융기관 전문가 등으로 금융소비자교육 전문강사진을 운영하고, 금융교육 강좌를 개설

- 금융교육의 수혜자인 금융협회를 후원기관으로 참여시키는 등 수혜자*의 자발적인 지원체계 구축도 정책수단으로 활용

*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한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이 제고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증가, 소득수준에 합당한 대출 신청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및 민원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협회를 프로그램 홍보업무에 적극 이용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음

-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융협회가 후원금을 지원토록 결의(’06.3월)하고, 자문위원회에 후원금 납부(’06.5월)

- **(부작용 등 대비)** 감독당국의 금융교육 활성화 노력이 기존의 교육체계와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KB은행, YWCA), 교육인적자원부, 재경부 등과의 금융교육 연계망*을 구축

* 경제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 유관기관 회의 참석 등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수단 분석)** 교사용 지도자료 제작 등에는 교육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감안, 자체제작과 병행하여 연구용역을 정책 수단으로 선택하여 추진

*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자료 집필용역 의뢰(06.6) :

초등학교 교사가 사회과목 및 재량활동 시간 등 학교수업에 실제로 사용가능한 수업지도안 형태로 제작하되, 초등학생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금융문제를 선별하여 4~6학년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내용 구성

- **(부작용 등 대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최근의 교육 패턴에 부응하여 멀티미디어, 만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자료 제작

* 학교, 사회단체 등에 금융이야기 시리즈, 멀티미디어, 만화 등의 금융교육 참고자료를 제공(06.3)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금융교육 횟수	141회
청소년 대상 금융지수(FQ)	46점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와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금융문맹 없는 세상 만들기를 통한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충실성 및 효과성 확보가 필수

- 금융교육의 실적이 양적으로 풍부해지는 경우 그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혜택의 대상도 광범위해 질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금융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충실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청소년의 금융관련 이해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 금융지수(FQ: Financial Quotient)를 지표로 선정

* 청소년 대상 금융지수(FQ)

: 청소년 금융 이해력을 소득, 화폐관리, 저축과 투자, 지출과 부채 등 4개 분야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매년 측정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 수준과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따라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어 적절한 지표 설정으로 판단
- (측정 가능성 등) 금융교육 횟수 및 금융지수의 경우 객관적인 설문조사 및 통계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금융교육이 양적·질적으로 충실히 될 경우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이 제고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짐
- 특히 청소년 금융지수의 경우 금융지식을 직접 측정하는 지수로서 향후 세대의 금융이해도를 예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목표 달성 측정에 더욱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금융교육 지원 횟수는 3년 평균치(134회) 보다 5% 상향하여 설정하였고 청소년 금융지수는 전년(45.2점) 보다 다소 증가된 지수(46점)를 목표치로 설정

계층별 현장 금융교육실적

(단위 : 회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비 고
· 일반소비자	42	39	37	20	* 연인원 - '02 : 10,890명 - '03 : 7,620명 - '04 : 15,390명 - '05 : 23,775명
· 교사(교육연수원)	8	8	14	12	
· 금융계 종사자	53	11	19	47	
· 청소년 및 학생	2	16	60	111	
· 군부대	-	-	4	6	
합 계	105	74	134	196	

주, 일반소비자 : 직장인(공무원 포함), 대학생, 주부(학부모 포함), 기타 금융이용자 등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금융교육 횟수 목표치의 경우 3년 평균치에 더하여 최근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설정
 - 청소년 금융지수의 경우 단기간 내의 평균치 상승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검증방법의 적정성) 청소년의 금융지수와 금융교육 횟수는 계량지표로서 통계조사 및 설문 등을 통해 객관적 측정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 금융문맹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에 의거 이행과제들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중임

< 주요 실적 >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일일금융캠프 운영(2월)
 - 여름방학 기간중 추가 실시 예정(7월)
- 지상파(DMB)방송을 이용한 금융퀴즈 실시(4월)
 - 하반기에 인터넷포털사이트, 신문 등을 이용한 퀴즈실시 예정
- 청소년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6월)
 - 대학생 금융논문 공모 예정(7월)
- 20개교를 금융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상반기중 18개교, 40회 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도 학교방문, 초청 체험교육 등 총 70회 교육실시 예정
- 유치원 교사용 '유아 금융교실'을 제작(5,000부)하여 교육청, 대학, 유치원에 배포(4월)
- '만화로 배우는 생활 금융'을 발간(10,000부)하여 금융회사, 소비자단체등에 배포(1월)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의 전문 강사진도 적극 활용
- 금융교육 강좌 및 강사진을 엄선, 정예화하여 운영
 - 30개 강좌, 65명의 강사진 운영을 통해 전년동기 보다 교육실적 크게 증가('05.6월 80회 → '06.6월 141회)
- '06년도 17명의 외부강사진을 선정·운영
 -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소속강사 14명,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3명 총 17명의 외부강사진을 선정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교재 제작 등에 예산을 투입하였고 금융교육시 금융감독원 사옥 회의실 이용 등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 금융소비자교육 세부사업별 예산 배정 및 집행 효율화

교재발간, 청소년 금융백일장 등 금융교육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금융교육용 교재 발간 예산 169백만원, 청소년 금융백일장과 공익광고 캠페인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93백만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총 465백만원의 56.3% 우선 집행 예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의 여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 금융교육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응토록 노력
 - 금융이용자의 권리의식에 비해 여전히 합리적 선택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도 상존(현재 여건)
 - 다만, 소비자단체, 고용안정센터, 대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수요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교육 신규수요 발생에는 적절히 대응

- *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신규 요청함에 따라 수요에 맞게 교육을 실시(총 7회)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금융문맹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에 의거 이행과제들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사관련 협의(06.3)
 - 금융협회 홍보담당 직원(5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이행 방안 수립 등 협조관계 유지(06.6~8월)
 - 경제교육협의회(재경부, 교육부 18개 정부·공공·민간기관 참여)와 학교 창의 재량활동시간에 활용할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06.3)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재경부, 5월), 경제교육협의회(재경부, 4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교육인적자원부, 5월)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금융교육 횟수	141회	100%	143회 교육 실시 (6월말 현재)
청소년 대상 금융지수(FQ)	46점 이상	N.A	N.A

- 금융교육 시범학교(8개에서 20개교) 확대 등에 따라 교육실적이 크게 증가
- 청소년 대상 금융지수(FQ: Financial Quotient)는 하반기에 측정할 예정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금융문맹 퇴치운동 전개】

- 금융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인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붐(boom) 조성의 기틀을 마련
 - 아울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Development) 과제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
- 일반인, 교원, 군인 등 성인대상 금융교육시 현장 민원상담이 동시에 가능한 One-Stop 현장교육·상담 진행으로 수강자의 교육만족도가 개선되는 추세

※ 금융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일상생활과 수행업무 기여도 등에 대한 수강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실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05년도 금융소비자교육 수강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57.3%로 '04년도 만족도(50.7%)대비 6.6%p개선
(설문조사 대상인원 : '05년도-1,454명, '04년도-1,415명)

* 06년도 교육만족도조사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

【조기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교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범실시학교 선정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쓴 결과 금융교육 실적 대폭 증가

* '05년 상반기중 금융교육 횟수 80회, 인원수 8,300명 대비 '06년 상반기중 횟수 143회, 인원수 17,251명으로 크게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행사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향후에는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신문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청소년 금융백일장 및 대학생 금융논문 공모행사는 비용부족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문으로 안내

(1) 과제목표 및 내용

(과제목표) 금융감독당국의 민원처리능력을 상회하는 민원발생 증가율을 억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

【효율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 ☐ 전자민원창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제도 개선코너를 마련하여 운영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 ☐ 민원감축, 금융교육 시스템 등 소비자보호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감축 유도(06.6 도입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증제도

: 민원의 사전 예방활동과 발생민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피드백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이행한 우수 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 인증'을 부여

- ☐ 접수민원에 대해 민원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사전적인 조정기회를 부여(민원자율조정제도)*하여 금융민원의 효율적 처리능력 제고(06.6 전면 실시방안 마련)

* 민원자율조정제도

: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금융민원중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처리

하는 제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조정이 바람직하고 외국에서도 당사자간 우선 조정을 제도화)

【열린 민원 행정 전개】

- 민원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이첩(전자이첩시스템)*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

* 전자이첩시스템

: 금융감독당국의 민원처리시스템과 금융회사 민원처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결,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민원서류를 이첩하는 시스템
동 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공문서 발수신 관련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FEDI: Financial Electronic Document Interface)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국내 소비자단체 임직원을 일일민원상담위원(명예옴부즈만 제도)으로 위촉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효율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 (의견수렴) 그간의 민원처리결과 평가시스템의 운영 결과 (사용자 의견수렴)를 면밀히 점검(05 하반기)하고 민원인 개별 접촉 결과 나타나는 불만사항을 수시 파악

- * 민원처리결과 평가는 처리결과만족도, 친절도 및 의견기술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견기술 항목이 제도개선사항이 아닌 민원의 반복적 제기 등에 활용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함
- (통계 및 사례조사) '05.10월부터 '06.3월까지 28,570명의 민원인 중 1,521명이 의견을 제사
 - 의견제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원취하 72건(4.7%),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표시 304건(20.2%), 재민원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1,145건(75.1%)으로서 제도개선 참고사항은 전무
- (영향분석) 민원처리체계의 효율화는 환경, 갈등, 성차별 등의 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하 동일)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금융감독기구 홈페이지중 국민 참여마당의 “제안방”에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 (의견수렴) 소비자보호 인증제도 및 민원자율조정제도의 시행 검토 단계에서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
 - * 금융회사 및 협회 직원들로 작업반을 구성('06.5)하여 의견을 수렴
 - 민원자율조정 성립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중소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고려 필요 등
- (통계 및 사례조사) 해외감독기관의 관련 제도 운용사례를 조사

외국의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사례

- ◇ 미국 : FRS, FDIC는 감독법규 위반 및 자율조정 경유 민원을 대상으로 조정
- ◇ 영국 : FOS는 금융회사와의 조정이 끝난 민원을 대상으로 조정
- ◇ 독일 : 옴브즈만은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미성립시 조사 착수

- 민원증가율 추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예방 노력을 평가하는 등 관련 통계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

< 금융민원 증가율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 민원건수	34,099	55,725	64,476	59,510
· 증감률(%)	41.2	63.4	15.7	△7.7

* 민원발생평가제도

: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 거래고객의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등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02년 이후 매 반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로써

평가 결과를 감독당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금융이용자가 금융회사 선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S)시 민원처리의 적정성부문과 금융회사 경영공시 항목에도 반영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 추진시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제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 극대화를 모색

【열린 민원행정 전개】

- (의견수렴) 일일민원상담제도(명예옴부즈만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해소 및 감독정책의 적정성 확인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대방안을 마련

* 05.3월부터 간부를 중심으로 시행하였고 소비자 단체 등 외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06.6)

- (통계 및 사례조사) 명예 옴부즈만제도 도입에 있어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활용

음부즈만제도

유럽에서 발달한 행정구제제도로서 영국은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 & Market Act 2000)에 의거 금융분야에도 동 제도를 도입

- (관련정책과의 연계 등 협의) 전자이첩시스템의 구축·활용에 있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공문서 발수신 관련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문서이첩시스템(FEDI)의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효율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 (정책수단 분석) 가장 간편하게 민원인의 제도개선 건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선택하여 추진
 -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부작용 등 대비) 홈페이지 개편 등 인터넷 기반의 수단에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 오프라인(Off-Line)상의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

* 민원접수창구에서의 민원인 접촉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유도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 (정책수단 분석) 소비자보호 인증제도의 경우, 전 금융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06.6)하여 제도 도입의 수단으로 활용
 - 소비자 보호에 있어 금융회사의 민원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의지가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정책수단으로 선택

- * 정성적 평가항목이 포함된 동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인증수여회사 선정기준이 될 예정
- 민원 자율조정제도의 경우,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자율조정이 성립되면 **민원발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의 효과를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들이 민원발생평가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자율 조정 성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범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
- **(부작용 등 대비)** 인증을 받지 못한 금융회사의 경우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가 상승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
- * 금융회사의 경우 기타 일반기업에 비해 소비자 및 시장의 신뢰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

【열린 민원행정 전개】

- **(정책수단 분석)** 전자이첩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수단으로 새로운 전산망 구축이 아닌 기존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FEDI)을 활용하는 한편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단순한 독려보다 공신력이 있는 공문 발송을 선택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의지를 천명**
- **(부작용 등 대비)**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지속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민원의 전자적 이첩의 효과(처리기간 단축)와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국무조정실 민원인 만족도	15% 이상
금융민원 증가율	20% 이하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실적	36개 회사 이상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정책목표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민원처리 등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로 나타나므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적정한 지표로 판단
 - 민원의 원만한 해결도 중요하나 **민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 하에 금융민원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제시
 - 민원자율조정제도의 경우 자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의 취지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회사의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내년부터는 자율조정 성립률 등이 지표로서 더욱 적절할 것으로 전망)
- (측정가능성) 계량지표로서 객관적인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측정 가능
-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여부) 금융민원 증가율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민원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의 합리성) 금융민원 증가율의 경우 지난 3년간 민원 증가율의 가중평균치*(20%) 이하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

* 최근 추세를 반영키 위해 30%:30%:40%로 가중 평균

-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민원증가율 목표치의 경우 최근 추세를 반영하되

- 민원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 정도 등 외생 변수에 영향을 받음으로 통제가 쉽지 않고 민원감축을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 등도 감독당국이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

-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실적은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민원발생평가 대상 금융기관인 70여개 회사의 절반 수준(36개 회사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

- (검증방법의 적정성) 성과지표가 모두 계량지표로 객관적 통계자료로 산정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 소비자보호 인증제도 등 모든 과제들이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맞추어 정상추진 중임
 - 소비자보호 인증마크제 도입방안을 마련(06.6)
 - 민원 전자이첩시스템을 계획에 맞춰 시행(06.4)
- 민원자율조정제도 본격 실시는 예정보다 6개월 조기 시행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 민원자율조정제도 등의 정책과제 추진 준비과정에서 해외 사무소 등에 외국 감독당국의 유사제도 운영여부를 질의하는 등 소관 부서(소비자보호센터) 이외의 관련 부서를 적극 활용
- 인증마크 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작성에는 금융회사 및 협회 직원들로 작업반을 구성('06.5)하는 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음
-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협회를 중심으로 사례연구 및 권역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통합(안)을 마련

【열린 민원행정 전개】

- 전자이첩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금융회사의 공문서 발수신 관련업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 구축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자문서 교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를 달성
- 명예 ombudsman제도에 있어 한정된 내부 인적자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한계를 극복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민원발생 건수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민원처리능력을 상회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열린 자세가 요구되는 행정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음
- * 민원 발생건수 : ('03) 55,725 → ('04) 64,476 → ('05) 59,510

- 다만, 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가 진전과 함께 관련 민원이 감소한 반면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의 판매 증가 등에 따라 민원증가세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최근의 권역별 민원추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할 예정

***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1~5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은행·비은행	38,764	95.9	44,890	15.8	36,627	△18.4	12,173	△26.2
(카드)	20,215	168.8	17,774	△12.1	9,672	△45.6	2,684	△43.1
보험	13,634	22.9	16,537	21.3	21,243	28.5	9,937	30.3
증권·투신	2,702	△2.5	2,433	△10.0	2,051	△15.7	1,284	73.5
계	55,100	63.7	63,860	15.9	59,921	△6.2	23,394	△5.9
일 반	40,775	120.7	46,175	13.2	41,381	△10.4	16,113	△8.1
분 쟁	14,325	△5.6	17,685	23.5	18,540	4.8	7,281	△0.5

- 민원자율조정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업무추진 계획상 동 제도의 본격 실시는 '07.1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범실시 결과,
 - 총 276건(대상회사 전체 민원의 12.4%)를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하였고, 자율조정성립률은 54.3%로 금융감독당국의 전체 민원수용율 22.6%에 비해 매우 높아 민원인 권익 향상 기여 정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고,
 - 자율해결 기회의 부여, 보고자료의 간소화 등으로 금융회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 모든 민원발생평가 대상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도 본격 실시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효율적 민원처리체계 구축】 & 【금융회사의 민원감축 노력 유도】

- 제도 도입 준비과정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사례 연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의식조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권역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통합(안)을 마련

【열린 민원행정 전개】

- 전자이첩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전자문서교환시스템(FEDI)과 연계하여 추진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국무조정실 민원인 만족도	15% 이상	N.A	N.A
금융민원 증가율	20% 이하	-	-
민원자율조정제도 운영실적	36개 회사 이상	100%	'06.7.1부터 93개사에 시행

- 자율조정제도 확대실시는 계획일정 보다 6개월 앞당겨 전면 시행하여 목표의 조기 달성을 실현
- '06.1~5월까지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하여 목표 (20%이내 증가)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 민원자율조정제도 확대실시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동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됨으로써
 - 이들 회사들의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민원의 자율적 해결 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완성시(3/4분기중)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업무 및 감독업무에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이므로
 -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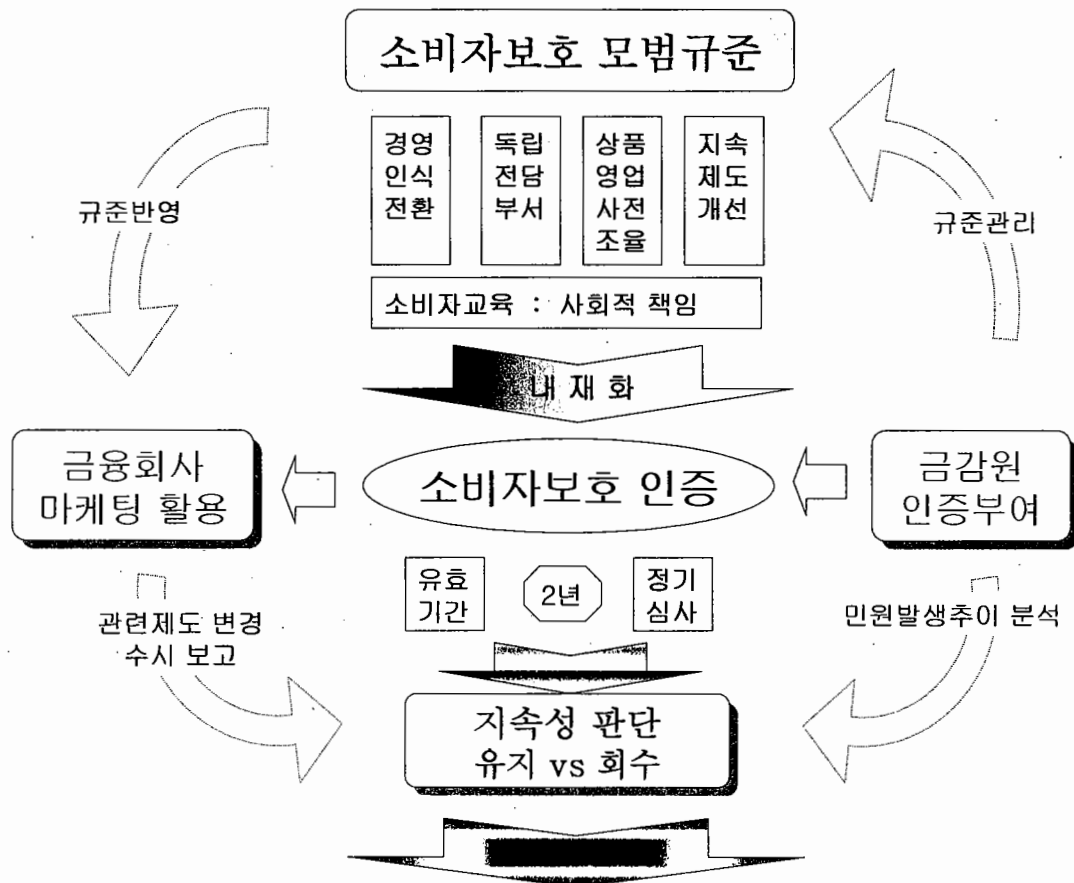
-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지속 제고할 필요
 -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간 문서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으나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는 한계
 - 금융민원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금융감독당국의 처리 역량을 초과하고 있어 민원·분쟁처리 인력을 보강하고 꾸준한 민원 감축노력을 통해 담당자별 민원처리 양을 줄임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민원의 발생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 금융상품, 판매채널 등의 급격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 분석을 통하여 검사 및 제도개선업무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항목을 정비하고 관련 통계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참고>

소비자보호 인증제도 도입방안

- 금융회사 경영진의 민원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민원의 사전 예방활동과 발생민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체계적인 피드백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시
-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이행한 우수한 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우수회사 인증” 부여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및 금융회사 경쟁력/민원처리역량 강화

<참고>

민원발생평가 제도

□ 개 요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민원예방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도입
- 2006년 6월 현재 5개 금융권역* 9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 2회 평가하며 권역별 회사순위를 공표
- * 은행(18개사), 신용카드(6개사), 생명보험(22개사), 손해보험(16개사), 증권(31개사)

□ 민원발생평가 기준

- 평가대상 민원
 - 원칙적으로 발생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
 - ① 단순 제도·법규 질의
 - ② 중복·반복민원
 - ③ 소제기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
 - ④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민원
 - ⑤ 법령 등에서 금지 또는 강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민원
 - ⑥ 금융회사와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과 관련된 효과를 얻기 위해 제기하는 민원 등
- 민원발생지수 산출방법
 - 평가대상 민원에 대하여 각 건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가 고려된 후의 민원발생건수를 금융회사의 사업규모**로 나누어 산정

※ 민원발생지수 산출공식

$$\frac{(\text{평가대상회사 가중치 반영 민원건수}) \div (\text{평가대상회사 사업규모})}{(\text{평가대상 전체회사 가중치 반영 민원건수}) \div (\text{평가대상회사 전체 사업규모})}$$

* 가중치

: 민원·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귀책정도, 민원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최고 1.5점 최저 0.3점 부여

- ① 분쟁조정위원회 인용, 재검토 지시, 문책·시정조치 : 1.5점
- ② 합의권고, (민원인)요청대로 해결 : 1.0점
- ③ 분쟁조정위원회 기각 또는 각하 : 0.8점
- ④ 법률·판례·기초서류상 불능, 분쟁조정부의전 각하 : 0.5점
- ⑤ 사실상위, 주장상이, 증거불충분, 취하 : 0.3점

** 금융회사 사업규모(보험) : 보험료수익(원수보험료), 보유계약 건수

□ 민원발생평가 대상회사 및 결과 공표 기준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인가받아 영업 중인 모든 금융회사를 평가대상으로 함.

* 다만 영업개시후 1년 미만회사 및 법인위주 영업으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제외

- 평가대상 금융회사 중 사업규모가 해당 권역의 1%에 미만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민원발생지수의 권역별 순위 공표

* 사업규모가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중치 반영후 민원발생건수가 해당 권역의 1%를 초과하는 때에는 공표

<참고>

민원자율조정제도 개황

1. 민원자율조정제도 추진경과

□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05.6.29)하고

* 금융감독당국의 금융민원 처리에 앞서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당사자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이 처리하는 제도

○ '05.10.24부터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 8개사*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제도를 시범 실시

* 신한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신한카드, CJ투자증권

2. 시범운영 성과

□ '05.10월~'06.3월까지 6개월간 2,232건의 민원 중 276건(12.4%)을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

○ 자율조정성립률*은 54.3%로 우리원 전체 민원수용률 29.4%에 비해 24.9%p 높은 수준

* 자율조정 민원 중 수용된 민원 건수/자율조정 대상 민원 건수

【운영 성과】

□ 감독당국의 민원처리에 앞서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해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민원처리역량 강화

□ 자율조정 성립시 금융회사는 우리원에 사실조사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자율조정성립 사실만을 통보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간소화

- 감독당국도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에 처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 다만, 자율조정처리(12.7%) 실적이 당초 예상치(30%)를 하회

- 사전 금융회사 민원제기 여부 파악, 자율조정 의뢰 및 사후관리 등 업무 부담 증가와 자율조정 불성립시 민원처리기간 증가 등을 우려하여 우리원의 일부 민원담당자들이 자율조정 처리에 소극적

3. 자율조정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 및 제도보완 방안

□ 시범운영 성과 평가 결과 자율조정제도의 확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율조정 제도의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민원발생 평가를 실시하는 금융회사(93개)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 아울러, 제도의 조기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확대실시 방안】

□ 대상회사 : 민원발생평가 대상 금융회사 전체(5개 권역 93개사)

권역	은행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계
회사수	18	6	22	16	31	93

□ 시행일 : '06.7.1.

【제도개선 방안】

- 자율조정대상 민원을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으로 한정

* 현재 동 제도 적용대상 민원은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의 영업방침에 대한 의견이나 해명 등을 요청하는 민원’ 및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임

○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또는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은 이첩처리토록 함

□ 자율조정 성립민원은 민원발생평가 대상민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유도 (‘06년 하반기 민원 발생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사전에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여 자율조정대상 여부 파악이 용이해 지도록 조치(‘06.6월)

□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이용해 자율조정 의뢰, 민원처리, 사후 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 개발*(‘07년 상반기)

Ⅲ.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실적

□ 새로이 자체평가대상에 포함된 인사, 조직, 정보화 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정비

* 인사, 정보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총원하고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소위원회별로 연두업무계획의 분기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구 분	추진계획	추진일정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평가위원회위원 위촉 -인사, 정보화 등 신규 평가대상 전문가 등을 신규 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	'06.3.30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1차)연두업무계획 논의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 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향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	'06.3.30
	(2차)자체평가위원 구성·운영방안, 자체평가방향 및 방법 등 자체평가계획 심의 - 위원장님과 오찬간담회 포함	'06.5.3
	(3차)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 - 상반기 실적에 대한 총평 - 부위원장님과 오찬간담회 포함	'06.6.30
○ 소위원회 개최 일정	(1차)1/4분기 추진실적 점검 및 질의응답 - 정책추진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주로 이행과제별 정책취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06.5.3
	(2차)2/4분기 추진실적 점검 및 질의응답 - 과제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논의	'06.6.23
○ 기 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워크숍 2회 개최	'06.6.14, 6.23

IV. 점검결과 반영실적

【국조실 점검관련】

(이행과제 3-④) “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 및 제재 효율화를 위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권 및 조치결과 공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과제의 추진일정이 지연

□ 동 지연과제의 경우 통제가 어려운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추진계획 일정을 조정(1/4분기→3/4분기, 2/4분기→4/4분기)

- 상반기 중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독 효율화를 위한 외부연구용역 발주 및 외감법 개정을 재정부에 재건의할 예정이었으나
-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타 과제가 외감법 개정안으로 추가됨에 따라 연구용역 발주 및 외감법 개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법령개정안 추이를 보아가며 7월 이후 연구용역발주 등 세부 과제 추진을 개시하고 금년내 완료할 계획(일정 수정)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 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권 및 조치결과 공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1/4분기 →2/4분기	○ 조치수단의 다양화방안 연구·검토(연구용역 발주) ○ 외감법 개정을 재건의	~'06.3 →'06.7
	2/4분기 →4/4분기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제한 조치권의 증설휘 이관을 위한 외감법령 개정 협의(재정경제부)	~'06.5 →'06.9
		○ 외감규정 및 조치양정기준 개정(외감법령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행 법령내에서 개정 추진) ○ 외감법이 개정되는 경우 즉시 외감규정 개정	~'06.6 →'06.12

【자체평가 점검관련】

- 상반기중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 중 향후 정책과제 추진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소위원회 등에 보고 예정
- 회의 운영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자체평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음

개 선 사 항	조치 시한	추진실적	이행 상황
<p>1. 금융산업 전반에 내재하는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p> <p>-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노력 강화, RM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금융회사의 금융 사고 등에 대비한 자발적 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06.하)</p>	<p>'06하</p> <p>연중</p>	<p>○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국회(법사위)에 계류중('06.2 재경위 통과)이며,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적극 참여 및 감독규정 마련 추진</p> <p>○ 권역별 상시감시 수단의 개발, 감사역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RM제도의 내실화 도모</p> <p>- RM팀장 Workshop 실시 및 결과 보고(1월)</p> <p>- RM대상 만족도, 성과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2월)</p> <p>- RM제도 내실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제도 요청회사에 대한 기본 수요조사 실시(1월~3월)</p> <p>- 검사각국 실정 및 금융회사 영업특성 등에 맞는 상시감시체제 운영</p> <p>· 은행 : 조달자금 금리갭 등</p> <p>· 비은행 : 카드사 신용리스크 등</p> <p>· 보험 : 계열사 부당지원 등</p> <p>· 증권 : 적립식 펀드 불완전 판매 등</p>	<p>정상 추진</p>

개 선 사 항	조치 시한	추진 실적	이행 상황
<p>1. 금융산업 전반에 내재하는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p> <p>-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노력 강화, RM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u>금융회사의 금융 사고 등에 대비한 자발적 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06.하)</u></p> <p>(계속)</p>	연중	<p>○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부과 및 불시 내부통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 유도</p> <p>- 상반기중 금융사고 6건에 대해 기고나, 경영진 등을 엄중 제재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기관제재 2건, 임원제재 7명, 직원 제재 55명)</p>	정상 추진

개 선 사 항	조치 시한	추진 실행	이행 상황
2. 자체평가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장 관심도 제고 ('06.상)	'06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 간담회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평가대상 관련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를 재정비('06.3) - 기관장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 주재 오찬간담회를 2차례 개최 (5.3 위원장, 6.30 부위원장) ○ 자체평가 보고회의 분기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장 주재로 보고대회를 개최(06.4.10) ○ 자체평가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기관장 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점검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응방안 토론회 개최(06.3.14) - 자체평가계획 기관장 보고(06.4.) - 기관장 지시사항을 점검·보고(06.4) 	정상 추진
3. 평가결과와 인사, 조직, 예산부문 활용 방안의 구체화된 연계노력 강화('06.상)	'06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내부평가 외에 자체평가 및 국무조정실 기관평가를 통합하여 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 등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조직 및 예산 반영은 06년 상반기부터 시행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06.3) - 승진 및 보직 등 인사 반영은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확대/개편방안 (5급 이하까지 확대 및 인사 반영)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중 (06.5~7) 	정상 추진

개 선 사 항	조치 시한	추진 실적	이행 상황
<p>4. 기실시('05년도 상반기 포함)된 정부업무 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계획 추진노력 강화('06.상)</p>	<p>'06상</p>	<p>○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개선 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개선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 * 자체평가위원의 의견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통보(06.4)한 바 있으며 상반기중 코멘트 및 조치계획·실적은 7월중 통보예정(8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예정) - 관련 자료 및 자체평가위원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개선조치 사항 이행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원 * 자체평가위원을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으로 선정하여 정책자료가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과제별 담당자 목록도 제공하여 필요시 관련 실무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p>정상추진</p>

V. 향후과제

◆ 향후 자체평가 워크숍 확대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점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여 주요정책의 품질 개선을 도모

- 정책품질관리대상 등 주요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적극 지원
 - 수시로 관련 정책자료를 송부하고 소관 실무자의 연락처를 통보하여 필요시 평가위원이 직접 실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 3/4분기 실적점검도 상반기실적 점검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의 추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확대·개편 추진 등 평가 및 점검결과의 환류를 강화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의 환류방안(성과급, 인사 등)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자체평가위원회 향후 일정(잠정)>

- 7월중 : 성과관리시스템 개편방안 보고(인사·조직 소위)
 -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개인별 성과급 및 인사 등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 * 현재 성과관리 확대·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중

- 8월말 : 주요정책에 대한 워크숍 및 정책품질관리과제 보고
 - 자체평가위원들의 요청 사항과 정책품질관리과제 선정 및 관리 현황을 보고
 - * 정책품질과 관련한 신규과제 및 종결과제 보고
- 9월말 :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3/4분기 실적 점검
- 11월말~12월중순 :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별 2회 이상 논의와 토의를 거쳐 평정점수 부여
 - 전체회의에서 최종점수 부여

4.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

1. 상담 현황

□ 2006년 1~8월 민원상담 건수는 총 132,9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26,443건) 증가

상 담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2005년 1~8월		2006년 1~8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은 행 권	54,258	50.9	68,343	51.4	14,085	26.0
보 험	47,996	45.1	59,618	44.8	11,622	24.2
증권·투신	4,277	4.0	5,013	3.8	736	17.2
계	106,531	100.0	132,974	100.0	26,443	24.8

2. 민원처리 현황

□ 2006년 1~8월중 민원처리 건수는 총 39,3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364건) 감소

금융권역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5년 1~8월		2006년 1~8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은행권	25,994	63.8	20,281	51.5	△5,713	△22.0
보험	13,522	33.2	17,107	43.4	3,585	26.5
증권·투신	1,221	3.0	1,985	5.0	764	62.6
합 계	40,737	100.0	39,373	100.0	△1,364	△3.3

5. 200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06. 4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428
-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보고할 것 428
-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428
-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428
-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432
-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 하도록 할 것 432
-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432
-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 432

- (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433
- (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
보고할 것 433
- (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 434
- (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435
- (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것 435
- (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보고 할 것 436
- (15)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436
- (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 437
- (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보고할 것 438
-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438
-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440
- (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
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441

-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442
- (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
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 443
- (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 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 444
- (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
하여 보고할 것 446
-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47
-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447
- (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448
- (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 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 450

'05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소관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론스타가 투기성자본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16조의4, 은행법시행령1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16조의2에 의거하여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05년말기준 결산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06년 상반기중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시행할 계획*임 * 적격성심사는 매반기 정기적으로 실시(은행법 제16조의4)
(2)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 · 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마련('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공시 자율추진 ○ 윤리경영 및 관계형 대출 활성화 ○ 휴면예금 등을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국회의결에 따라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해 금감위(원) · 재경부 · 한국외환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중임
(4) 헤르메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와 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	[조사과정에서의 금감원 직원의 성희롱 문제] <input type="checkbox"/> '05.1.26 금감원은 여성 피조사자에게 음주한 상태에서 밤늦게 전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05.2.16 해당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 진행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금감원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품위 손상 등에 대하여 매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함을 적극 주장</p> <p>□ '05.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성희롱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고,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도록 명령(구제명령)</p> <p>○ '05.5.6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06.1.2 중앙노동위원회도 금감원의 재심신청을 기각</p> <p>□ 금감원은 노동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06.3.2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낮추어 “정직” 처분(현재 해당 직원은 출근이 정지되고 있음)</p> <p>□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조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p> <p>□ 헤르메스 시세조종 사건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물산 주식 대량보유자인 헤르메스의 펀드 매니저가 국내 일간신문과의 인터뷰('04.11.26)를 자청하여 삼성물산의 M&A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04.12.1)되게 한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04.12.3)한 사실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04.12.17) ○ 조사결과, 헤르메스 펀드매니저가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보유주식을 원활히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헤르메스 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 D증권사 K직원을 고발('05.7.22)하였음 <p style="padding-left: 40px;">* 검찰은 수사결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매니저를 기소('06.1.31.)</p> <p>□ 위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05.9.22~10.11) 과정에서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p> <p>(자체 진상조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르메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투자 펀드임에도 삼성물산이 헤르메스를 투기적 M&A펀드로 몰아갔고 금감원의 조사는 특정 재벌 편들기의 일환이었다는 의혹 관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르메스펀드의 삼성물산 주식매도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감독당국도 헤르메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특정 재벌 편들기나 보호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감독당국의 고발내용을 인정하여 헤르메스펀드 및 동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내 D증권사 K직원을 고발하면서 동 증권사를 조치하지 않아 조치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 관련 - D증권사 K직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헤르메스 펀드 매니저의 위법행위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K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D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업원·대리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묻는 증권거래법 제215조(양벌규정)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D증권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D증권사 K직원은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지역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재정부 등 지역·서민금융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상반기중) *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의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
(6) 원리금 상환에 세제혜택 부여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경우 LTV 확대 등과 같은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세제혜택 부여는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임 <input type="checkbox"/> LTV규제 완화는 부동산시장 동향, 일반은행 모기지 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LTV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
(7)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를 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에 근거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의 개정 필요성 여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8)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05년 중 다음과 같이 워크아웃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이행 실태를 점검 ① 공동 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 ② 은행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③ 워크아웃제도 홍보 ④ 경영진의 관심 및 담당자의 인식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06년에는 서베이 실시 등 워크아웃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1/4분기중) 채권은행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3/4분기중)하여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등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9) 한계 상호저축은행 등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분기별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BIS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병, 제3자인수 및 퇴출 등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음
(10)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 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는 내·외부에서 협의사항을 통보한 기업 및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무작위 표본선정은 엑셀프로그램의 난수발생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이 공개적으로 직접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음 (2005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에는 총 204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87사 - 연결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15사 - 결합감사보고서 감리대상 : 2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실시 회사는 모집단에서 제외 - 모집단 형성시 무작위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감사투입시간 등을 혼용 (2006년도 표본감리대상회사 선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감리대상을 확대하여 감리 사각지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사 → 280사(37% 증가) ○ 장기간 감리미 실시 회사,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은 회사 등의 선정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표본 추출 모집단 형성을 검토
<p>(11) 은행의 CD 변칙 발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편취 및 위조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CD발행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CD를 발행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출하여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05.11.11) ○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는 동시에 CD업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 ○ 위규행위와 관련된 직원(5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문책' 등의 조치를 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2) 제3자 명의 CD발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업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8조 및 동 「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하고 있음</p> <p>□ 따라서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에 대해서도 상기규정에 따라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 조치하였음('05.1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규정도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주의'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흥,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한양, 동부, 대신증권 ○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동일하게 취하도록 조치의뢰 <p>□ 앞으로도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전 금융권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제재조치</p>
<p>(13) 제3자 명의 CD 불법 발행과 같은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향을 마련 하도록 할 것</p>	<p>□ 불건전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유통 방지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05.1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금지사항에 CD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적인 CD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 CD발행·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거래처의 재무제표 분식,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 할 것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CD/ATM기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전 권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 대책」을 수립('05.9)하여 시행중에 있음</p> <p>(전자금융거래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PC에 해킹차단 프로그램 의무적 설치 ○ 보안카드 비밀번호 확대를 통한 일회용비밀번호 (OTP: One time password)기능 강화 ○ 보안전담기구 및 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 도입과 운영을 위한 OTP통합인증센터 설립 추진 ○ 보안수준별 거래한도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뱅킹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 적용 ○ 금융소비자의 보안의식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관리 유의사항 등 '전자금융이용자 정보보호수칙'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전자금융 이용방법을 홍보
(15)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재정경제부 주도로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06.2.16)</p> <p><input type="checkbox"/> 금년 중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07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금융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누출이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등)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p>*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 및 이용목적 제한,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부여, 신용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관리규정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 등</p> <p><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한 내부관리 기준 및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불법접근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운영 중</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최근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05.11월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모범기준'을 제정하여 각 금융회사가 한층 강화된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운영 - 고객신용정보처리 업무 위탁 등 고객정보 외부 제공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및 약정이행상태 점검 - 고객의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권한 도입 등 <p><input type="checkbox"/>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관리·보호인 지정 및 전화수신거부 신청 창구 마련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6.4월 이후 시행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7) 과도한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은행 감독이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수업무 취급결과 늘어나는 위험자산을 BIS 비율 산정시 반영하고 ○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부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은행감독장치를 적용하고 있음 <p>□ 최근 금융겸업화 진전으로 은행의 부수업무가 증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수업무 수행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06년 2/4분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수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리스크를 BIS비율 산정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
<p>(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p>	<p>□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수법도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p> <p>⇒ 전담조직(보험조사실)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의 방지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업계의 방지 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006년 주요 추진 보험사기 방지대책</p> <p>(적발강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혐의정보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 실시 - 조직적 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지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p>(예방활성화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보험범죄 신고방법 등 대응요령 전파를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보험사기 예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금융소비자,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 대상 예방교육 실시 - 보험사기 조사실무교육을 통한 조사 전문인력 양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보고할 것	<p>(‘05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터넷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 중심으로 전자민원창구를 대폭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Q 대폭확충 및 단순질의성 상담에 대한 즉답 시스템 구축 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 평가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직원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민원업무에 반영 <input type="checkbox"/>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감원의 정식 처리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자율조정 기회를 부여 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06.3(필요시 3개월 연장) 기간중 민원 처리 우수 8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마찰을 근원적으로 해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 개인정보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범위, 민원서류 제출시 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감축을 위해 민원처리 모범규준 제정 및 적용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조직, 민원처리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총 7장, 31개 조항으로 구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인증마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감축 노력, 금융교육 시스템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 우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상담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원제도 도입 <input type="checkbox"/> 소비자단체 임직원을 일일상담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명예옴부즈만제도 도입 <input type="checkbox"/> 금융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연수 등을 강화하고 법률·의료자문 및 외부용역을 확대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부당한 소 제기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소송지원제도 적극 추진 <input type="checkbox"/>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첩민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의 전자이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p>(20) CB, BW 발행절차와 목적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경영세습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CB·BW의 공모발행시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BW의 전환권 등에 대한 내용, 발행절차,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목적 및 발행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또한, CB·BW의 사모발행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채의 내용, 자금조달의 목적, 사채발행 방법, 전환에 관한 내용 등의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p> <p>○ 특히 배정받는 특정인의 성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발행권면총액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음</p> <p>□ 경영세습을 위한 CB·BW 발행은 그 특성상 사모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p> <p>○ 이러한 CB 등의 사모발행을 통한 이익공여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통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40)</p> <p>□ 공시측면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발행시의 공시를 강화하여 그 투명성을 확충하는 한편 사모발행시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CB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이전의 투명한 공시 및 공시를 통한 상법 및 세법상의 규율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겠음</p> <p>* 현재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단지 '특수관계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임</p>
(21) 씨티은행의 모은행 및 계열사에 대한 과다 신용공여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허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p>□ '05.11.3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경우와 예치금을 포함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p> <p>○ '05.11.30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6,344억원 초과하였으나 12월 중 1조 167억원 감축하여 은행법상 한도이내를 유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 등 씨티은행의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p> <p>*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한국 씨티그룹캐피탈을 의미하며, 동사는 '04.12.29 씨티리스가 씨티파이낸셜을 흡수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임</p>	<p>□ 한국씨티은행의 그룹계열사인 씨티캐피탈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문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리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임 <p>□ '05년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05.10.12 ~11.10)시 동 내용을 점검한 결과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여신금리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씨티캐피탈의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p> <p>(AA등급 금융채금리 + 35bp 적용)</p> <p>⇒ 따라서 금감원에서의 별도 조치 사항은 없음</p> <p>□ 다만,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캐피탈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자금소요액 대비 지원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2.28현재 신용공여한도는 7,350억원(대출잔액은 3,280억원)인데 반해, 미사용한도가 4,070억원임 ○ 한편,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시 「씨티그룹간의 여신공여 승인규정」에 의거 신용조사 절차를 생략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됨 <p>⇒ 따라서 금감원은 씨티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시 여신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신용조사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의 개선을 지도*할 예정임</p> <p>* '05년 종합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반영</p> <p>※ 동행은 '05.12.29 씨티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4,500억원으로 감축한 바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3) 국내 공기업과 도이치뱅크 등 국외은행사이에 벌어진 비정형파생상품거래와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 즉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와 감사원 통보조치를 하였는지 유무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이 공기업과 외국은행간의 사적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소송 제기 등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외국은행의 거래행태에 부당한 점은 있으나 동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외국은행이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제반 거래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아 환수대상 금액을 확정하기 곤란 ○ 다만, 관련 외국은행들로 하여금 비정형파생상품거래를 공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정형파생 상품거래로 전환토록 지도함으로써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과도한 위험을 해소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관련 검사결과를 '05.9.28 감사원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 □ 또한 장외파생상품 부당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을 통보('05.10.5)하고, 파생상품거래 담당자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05.10.20) - 거래의 적정성 및 거래 상대방의 법률적 권한 (Legal Capacity) 등의 확인의무와 리스크 등 중요정보의 충분한 고지의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보완(별첨 참조)하여 은행이 공기업 등 거래자에게 부당한 파생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도화('05.12.23) ○ 또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도이치, BNP파리바, 바클레이즈)과 재발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5.10.7) - 1차 점검결과 양해각서 내용이 대체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으며 부당한 비정형파생상품거래의 신규 취급은 없었음 <p>(별첨)</p> <p><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불건전 영업행위(세칙 64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하거나 리스크와 잠재적 손실에 영향이 있는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장외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세칙 65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 ○ 의사결정에 필요·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는 내재된 개별 거래의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의 거래권한 보유여부를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 ○ 비용은 공정하게 부과하고, 비정형 파생상품은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 ○ 비정형파생상품거래 매월말 거래평가서를 송부 ○ 거래관련 자료를 보관
<p>(24) 신용불량자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방송 중 인용한 2005년 이후 신불자 통계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영업전략·개인신용 위험 평가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거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기준이 없으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자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하지 않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다만 정책수행을 위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가 필요하며 국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 따라</p> <p style="margin-left: 40px;">* 재경위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통계의 재작성을 정부(재경부)에 요청('05.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일정 금액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파악하여 代用통계로 활용 <p style="margin-left: 40px;">* 3개월이상 연체중 5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미만 2건이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국내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 심사제도 활성화 방안'('04.12월)을 마련,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하는 등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업체에 대한 내부심사결과를 분석하고 및 동 분석결과를 공시 ○ 신용등급별 기준수익률과 실제시장수익률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를 공시 ○ 신용등급 예측정보의 유의성을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 공시 등 <p><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사의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상기 제도개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계속사항)</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지정요건(안)을 마련중에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新BIS 협약 시행('07년말) 후 동 요건에 따른 ECAI 지정시 상기 신용평가 심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감안하겠음
(26) 환치기 등 만연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정부의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해외송금한도 폐지 등으로 일반기업·개인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등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정보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혐의 거래 자동검색을 위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추진중</p> <p>* 「외국환거래법」 개정('05.11.23)으로 금년부터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정보 이용 가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감시시스템」은 외환전산망내 개별 거래 정보 등을 DB화하여 거래·분산송금 등 불법·이상징후 외환거래를 자동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감시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외환 심사반 신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기업 등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이 관련거래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은행의 안내 미흡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거래 설명회(상·하반기 각1회) ○ 은행 외환업무지도·점검(하반기 1회)
<p>(27)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공시 할 경우 감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규정(외감규정)」이 상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감법 제15조 제1항은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증선위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필요한’의 의미는 모든 외감법상의 위반 행위를 전부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의 대상 선택에 있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내지는 일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 본 감리제외 방침의 적용요건(기업회계기준·실질에 맞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충족시킨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 감리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감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인 “기업회계 투명성”에 완전히 부합하게 되는 점 ② 또한 실무적으로도 계정분류오류 정도는 회계 정보 오류의 중요성이 낮아 처벌의 중요도도 떨어지는 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외감법 제15조 제3항은 감리업무의 집행에 수반하는 구체적 기준, 감리대상의 선정, 감리의 구체적 절차, 조치수준 등 집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 정립권을 금감위에게 부여하고 있음</p> <p>□ 상기 외감법상의 적법한 규정정립수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외감규정은 본 방침이전에도 이미 감리조치의 감경·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p> <p>○ 규정 제58조 제4항은 동 규정제정 당시('99.3.12)부터 “발생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p> <p>- 금번 감리제외(조치유예) 제도의 조치 감경·면제 근거는 조치시행이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음</p> <p>□ 또한 본 방침이전에도 제48조 제2항 각호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금번 규정개정은 감리 미실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p> <p>□ 금번조치는 엄벌주의보다는 집단소송법이 유예되었음을 기회로 감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한 것으로 선진유도 행정을 그 수단으로 하되, 엄격한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악용소지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임</p> <p>○ 다만, 국정감사시 지적된 제도의 악용문제는 이미 실무지침을 통하여 시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은 현재 없다고 판단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8)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시중 은행의 위법적 대출과정과 이면계약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자금·분식회계 등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금감원차원의 예방적 조사를 실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경위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또한, 감독당국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 회계감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리방식도 변경하고 표본감리대상 기업도 대폭적으로 확대 선정('04년 120사 → '05년 204사)하여 감리를 실시중에 있음 □ 감독당국은 금년에도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감리대상기업을 '05년의 204사(상장법인의 약15%)에서 280사(상장법인의 18%)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 혐의기업감리(30사 예상) 감안시 총 감리기업은 310사(상장법인의 약 20%)가 됨 ○ 감사인의 회계감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 '06.3월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